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연구보고서 2008-17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소정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02-2 93330

머리말

노년기 불평등은 생애초기부터 발생하는 불평등과 기회구조의 차이가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일생에 걸친 기회구조의 차이는 노년기로 가는 동안 여러 갈래의 다차원적 불평등을 양산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은 유사한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노년기 불평등도 세대간 불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노인 집단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우리사회의 현실과 관련된다. 즉,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장기요양과 같이 노인 복지의 기본적인 제도 구축이 시급했기 때문에 노인 집단 내부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득, 건강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노인 복지의 기본 인프라가 확립됨에 따라 향후 노년기 삶의 이질성과 다양한 양태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노년기 불평등에 대한 시각도 생애초기부터 형성되는 계층성 및 기회구조의 차이가 노년기의 불평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의 문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생애주기에 걸쳐 형성된 기회구조의 차이가 노년기에 이르면 비단 경제적 불평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전반에 걸친 불평등 구조를 양산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보고서는 노년기 불평등을 소득, 소비, 사회적 연계망, 건강 등의 다차원적 영역에 걸쳐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급속도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집단 내부의 이질성과 불평등을 완

화하고 보다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소정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정경희 연구위원과 이은진 연구원, 그리고 원외에서 평택대학교 손병돈 교수, 배재대학교 이미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홍백의 교수가 함께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필진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이소정)

제2장 이론적 배경(이소정·홍백의·정경희·이미숙)

제3장 노년기 소득불평등 구조 분석(손병돈)

제4장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홍백의)

제5장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 분석(이소정)

제6장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살펴본 노년기 불평등(정경희)

제7장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이미숙)

제8장 결론 및 함의(이소정)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서울산업대학교 김영순 교수님, 덕성여자대학교 권문일 교수님, 숭실대학교 유태균 교수님과 원내의 강신욱 연구위원, 강은정 부연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목 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3
제2장 이론적 검토	27
제1절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사회계급론 vs 생활양식론 ..	27
제2절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관한 규정	32
제3절 노년기와 불평등	35
제4절 불평등의 다차원적 영역에 관한 이론	38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노년기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57
제3장 노년기 소득불평등 구조 분석	59
제1절 서론	59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61
제3절 노인소득 불평등의 현황 및 요인 분해	70
제4절 결론	87
제4장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	90
제1절 서론	9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93
제3절 연구방법	100
제4절 연구결과	102
제5절 결론	141

제5장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 분석	144
제1절 서론	144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45
제3절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 분석	159
제4절 노년기 소비생활양식 차이 분석	166
제5절 결론	170
제6장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살펴본 노년기 불평등	176
제1절 서론	176
제2절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77
제3절 연구방법	179
제4절 경험적 분석 결과	184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06
제7장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209
제1절 서론	209
제2절 연구방법	213
제3절 분석결과	216
제4절 결론	247
제8장 결론 및 함의	253
참고문헌	256

표 목 차

<표 2- 1> 새로운 형태의 자본의 제특성 비교	45
<표 2- 2> 사회적 연계망의 제특성	47
<표 3- 1> 지니분해 요소	66
<표 3-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69
<표 3- 3> 연도별 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소득 비교	70
<표 3- 4> 노인가구주 가구의 성별 평균, 중위소득 변화 추이	71
<표 3- 5> 노인가구주 가구의 연령대별 평균 중위소득의 변화 추이	72
<표 3- 6>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별 평균, 중위소득 변화 추이	72
<표 3- 7> 노인가구주의 가구형태별 평균, 중위소득 변화 추이	73
<표 3- 8>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의 원천별구성변화추이	74
<표 3- 9> 노인가구의소득수준별 소득구성추이	75
<표 3-10>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결과	79
<표 3-11> 노인가구의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5
<표 4- 1> 연도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104
<표 4- 2>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1986~2006	106
<표 4- 3> 연도별, 연령별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	107
<표 4- 4> 출생 동류집단별의 연령별 지니계수	109
<표 4- 5> 연도별 총소득 및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분해 결과	112
<표 4- 6> 연령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114
<표 4- 7> 연령별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비중 변화	115
<표 4- 8> 출생코호트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125
<표 4- 9> 출생 코호트별 요소소득의 비중변화	127

<표 4-10>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및 비중 변화	131
<표 4-11>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경향	132
<표 5- 1> 노동패널의 연차별 소비변수 구성	150
<표 5- 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과 정의	159
<표 5- 3>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소비 및 소비요소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	159
<표 5- 4>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의 변화추이	162
<표 5- 5>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지출 비목별 상대적 기여도의 변화추이	164
<표 5- 6>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지출 비목별 기여도의 한계효과 변화추이	166
<표 5- 7> 노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168
<표 5- 8> 소비생활양식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169
<표 6-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82
<표 6- 2> 노인의 연계망 유형화	183
<표 6- 3>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 크기	188
<표 6- 4>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 중 친족의 비율	190
<표 6- 5>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의 다양성(연계근의 종류)	192
<표 6- 6>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 유형	194
<표 6- 7> 노인의 특성별 연계종류별 접촉 빈도	196
<표 6- 8> 연계망크기의 결정요인 분석	200
<표 6- 9> 연계망 유형의 결정요인 분석	202
<표 6-10> 빈번한 접촉을 하는 자녀/친구·이웃의 접촉빈도 결정요인 ..	205
<표 6-11> 사회적 연계망에 나타난 노후불평등 (요약)	206
<표 7-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4
<표 7- 2> 주요 변수 및 척도	215
<표 7- 3> 정신적 건강상태	217

<표 7- 4> 기능적 건강상태	218
<표 7- 5> 의료적 건강상태	219
<표 7- 6> 주관적 건강 상태	221
<표 7- 7>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CES-D)	224
<표 7- 8>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능적 건강상태(ADL) ·	226
<표 7- 9>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능적 건강상태(IADL)	228
<표 7-10>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적 건강상태	229
<표 7-11>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234

그림 목 차

[그림 2- 1]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58
[그림 3- 1]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추이	78
[그림 3- 2] 소득원천별 비중의 변화추이	80
[그림 3- 3] 총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의 상대적 기여도 변화 ···	81
[그림 3- 4] 총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별 한계효과의 변화	83
[그림 4- 1]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경향	105
[그림 4- 2]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변화 경향	107
[그림 4- 3] 출생 동류집단별 불평등 변화 추이	108
[그림 4- 4] 요소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경향	110
[그림 4- 5] 요소 소득의 비중 변화 경향	110

[그림 4- 6] 출생 동류집단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	116
[그림 4- 7] 출생 동류집단별 근로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117
[그림 4- 8] 출생 동류집단별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	118
[그림 4- 9] 출생 동류집단별 사업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119
[그림 4-10] 출생 동류집단별 재산소득의 불평등 변화	120
[그림 4-11] 출생 동류집단별 사업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120
[그림 4-12] 출생동류집단별 공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121
[그림 4-13] 출생동류집단별 공적이전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122
[그림 4-14] 출생동류집단별 사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123
[그림 4-15] 출생동류집단별 사적이전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123
[그림 4-16] 출생동류집단별 기타 소득의 불평등 변화	124
[그림 4-17] 출생동류집단별 기타 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125
[그림 4-18] 요소소득 및 총소득의 불평등 변화율	129
[그림 4-19] 요소소득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1	130
[그림 4-20] 요소소득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2	130
[그림 4-21]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경향	132
[그림 4-22] 연령집단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경향	133
[그림 4-23] 근로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 (연령집단별)	134
[그림 4-24]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134
[그림 4-25] 사업소득이 총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연령집단별)·	135
[그림 4-26] 재산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136
[그림 4-27] 재산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연령집단별)	136
[그림 4-28]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137
[그림 4-29] 공적이전소득이 총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 (연령집단별)	138

[그림 4-30]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138
[그림 4-31] 사적이전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 (연령집단별)	139
[그림 4-32] 기타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140
[그림 4-33] 기타소득이 총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 (연령집단별)	140
[그림 5- 1] 노인가구의 소비비목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감소비목)	160
[그림 5- 2] 노인가구의 소비비목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증가비목)	161
[그림 5- 3]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의 변화추이(감소)	163
[그림 5- 4]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의 변화 추이(증가)	163
[그림 5- 5]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비목별 상대적 기여도(감소) ..	165
[그림 5- 6]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비목별 상대적 기여도(증가) ..	165
[그림 7- 1] 연구모델: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요인과 심리사회적 기제 ..	213
[그림 7- 2]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237
[그림 7- 3] 기능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239
[그림 7- 4] 의료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241
[그림 7- 5]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243
[그림 7- 6] 건강상태(통합)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245

Abstract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has risen to 1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s still continuing to rise at the fastest speed. Moreover, the average lifespan of Koreans is expected to reach 78.2 years old for men and 84.4 years old for women in the year 2020. Not only do these figures indicate that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is growing but also the welfare or diswelfare of older people is becoming more of a national concern. It is in such aspect that the intra generational inequality of older people gains significance. Until now, the problem of inequality among older people had only minor effect on the integration of society, but in the coming years, it is expected to bring greater consequences.

However, previous research on the inequality of older people has two limitations. First, most of the research was focused on the problem of poverty, not inequality in itself. Second, previous research analyzed inequality in a singular dimension, namely income inequality. But sociological theories suggest that inequality has multiple dimensions such as consumption inequality, social network inequality and health inequality. These various aspects of inequality becomes more important when analyzing the inequality of older people because income stops playing a major role during old age.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intra generational inequality of older people in terms of income, consumption, social network and health in order to draw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wellbeing.

요약

1. 서론

□ 연구의 목적

- 노년기의 불평등을 다차원적 영역에서 분석함으로써 노년기 불평등 완화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

□ 연구의 필요성

- 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집단 내부의 불평등 문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불평등의 '체감'은 노년기에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
- 노인집단의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어느 연령집단 보다 크기 때문.

2. 이론적 배경

□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사회계급론 vs 생활양식론

- 계급론에서 불평등 양산의 핵심 기제는 계급인 반면 생활양식론적 접근에서 계급은 '지위(status)' 개념에 의해 대체되며 지위집단이란 공통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규정.
- 불평등에 관한 계급론적 관점과 생활양식론적 관점을 종합해 보면, 불평등은 비단 경제적 소득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차원

적 영역에서 발생.

- ‘자본’의 개념이 경제적 자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 인적 자본과 같이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맥락에서 유추해 보면 불평등의 영역도 소득, 소비, 사회적 연계망, 건강 등의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불평등의 결과적 형태는 특정 자본의 양적 차등화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유형’의 질적 차이화로 연결됨.
- 또한 각 영역별 불평등은 단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연쇄적인 성격을 띤.

3. 노년기 소득불평등 구조 분석

□ 분석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노인집단의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
- 노인들의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 규명.

□ 분석방법 및 자료

-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 및 소득 원천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 연도별 지니계수와 러만과 이차키(Lerman&Yitzhaki)의 공변량 분해방법을 활용한 지니계수 분해.
- 노인 소득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 중다회귀분석.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1999년, 2002년, 2004년, 2006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차년도).

□ 결과

-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을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가구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 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임.
- 노인가구 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과거 기회요인인 교육수준, 사회보험급여유무, 재산 등이 중요하게 나타남.

4.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

□ 분석내용

- 단기적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노년기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 요소소득별 영향 정도 분석.
- 현재의 변화과정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인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변화 경향 분석, 연령집단별·요소소득별 영향 정도 분석.

□ 분석방법 및 자료

- 연도별 지니계수와 러만과 이차키(Lerman&Yitzhaki)의 공변량 분해 방법을 활용한 지니계수 분해.
- 시뮬레이션 분석.
-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가계조사」 자료 중 5년 간격의 5개년도 자료.

□ 결과

- 과거 20년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옴.

- 지난 20년간 개별 요소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형태를 지배하였으며 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옴.
- 장기전망에 관한 분석 결과, 노인과 중·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요소소득별로, 근로소득의 경우 불평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사업소득은 다소 감소하나 그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재산소득의 경우 점차 조금씩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공적이전의 경우 불평등의 정도가 감소할 것이며 사적이전의 경우 불평등이 다소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 분석

□ 분석내용

- 총량적 소비불평등의 추이 분석, 소비비목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
- 소비생활양식의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 분석방법 및 자료

- 연도별 지니계수와 러만과 이차키(Lerman&Yitzhaki)의 공변량 분해 방법을 활용한 지니계수 분해.
- 노인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소비생활양식을 유형화.
- 특정 소비생활양식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
- 1999년, 2002년, 2004년, 2006년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데이터.

□ 결과

-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노인가구 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비목은 외식비와 차량유지비.
- 최근 공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의 불평등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식료품, 주거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비목의 불평등 추이 및 불평등 기여도는 감소함.
- 소비생활양식의 유형화 결과 의료지출형, 캥거루족형(교육비, 자녀 용돈 등), 주거지출형, 사교형, 생존중심형으로 구분됨.
-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이 편성되는 캥거루족형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의료지출형은 가구규모가 적고 가구주 연령이 높고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가 높게 나타남.
- 사교형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주거지출형은 가구규모가 적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일수록 속할 확률이 높게 분석됨.
- 생존중심형은 가구규모가 적고, 가구주 연령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성별이 남성일수록 확률이 높게 나타남.

6.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살펴본 노년기 불평등

□ 분석내용

-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종속변수로서 연계망의 규모, 접촉 빈

도, 연계망 유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계망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

□ 분석방법 및 자료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 결과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망의 크기가 크며 친족의 비율이 낮고 연계망이 다양한 관계를 포함.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낮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계망의 크기가 크고 다양한 연계끈을 가지며 다층적 연계망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남.
- 고위전문직이나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의 경우 타 직업에 비해 연계망의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남.
- 그러나 자녀와의 접촉빈도의 경우 직업계층이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와 같이 중산층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남.

7.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 분석내용

- 노년기 건강상태에 대한 지표로서 정신적 건강, 기능적 건강, 의료적 건강 및 주관적 건강의 4개 차원을 정의하고, 건강위험행동과 심리사회적 자원을 중간변수로 설정해 노년기 건강격차를 가져오는 원인 규명.

□ 분석방법 및 자료

-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산분석과 경로분석 등의 방법론이 사용됨.

□ 결과

- 소득수준은 기능적 건강상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직접 및 간접효과가 있었음.
- 교육수준은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많고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밖에 교육과 소득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양이나 기타 관련 변수를 모두 통제하고도 노년기 건강상태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남.
- 75세 이상의 고령, 여성, 무학의 교육수준 및 5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으로 특징되는 노인들이 건강수준의 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규명됨.

8. 결론 및 함의

- 노년기의 불평등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불평등과 기회구조의 차이가 누적되는 효과로서 나타남.
-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제기됨.
 -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 차이가 노년기에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완화시키려면 ‘노년기’의 출발선에서 그 차이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기제가 필요함.

22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 이는 노년기 소득보전이라는 물질적 기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회제공, 건강서비스,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의 비물질적 기제로도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
-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공적 이전 제도와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함.
- 근로기간 동안의 불평등에 대한 개입 정책은 노년기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중요성을 띠. 따라서 생애주기에 걸쳐 연결된 정책 및 서비스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제1장 서론

불평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정책의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으며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주로 소득과 관련된 불평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노인집단의 불평등 문제를 특화시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본 연구는 노년기의 불평등을 다차원적 영역에서 분석함으로써 노년기 불평등 완화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관점에 대해 두 가지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왜 ‘노인’의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인지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소득으로 집약될 수 있는 불평등 현상을 왜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왜 다른 연령집단도 아닌 ‘노인’의 불평등을 보아야 하며, 노인의 빈곤이 아니라 ‘불평등’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집단 내부의 불평등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현재 10%를 넘어섰으며 세계에서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갈수록 개인이 ‘노년기’로 보내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노인인구가 인구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노인 집단 내부의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문제는 큰 틀에서 사회적 통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노인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인구 전체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불평등의 ‘체감’은 노년기에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생동안 누적된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년기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년기에 근접할수록 일생에 걸친 임금 불평등이 극대화되며, 노년기는 특히 소비 위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는데 소비는 소득과 달리 ‘가시성’을 갖기 때문에 소비격차를 통해 실제 ‘체감’되는 불평등의 정도가 어느 연령집단보다 클 것이다. 셋째, 노인집단의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어느 연령집단보다 크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노년기를 ‘제3기 인생’으로 규정하며 노년을 새로운 기회의 시기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기를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는 생애주기의 다른 시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회구조가 축소되는 시기이다. 가령, 일반적으로 근로세대에게 기대하듯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불평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노년기이다. 따라서 특히 노년기에 발생하는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외적인 개입, 즉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그 사회의 지향에 맞게 완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차원적 영역의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불평등은 소득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사회적 관계, 건강 등 다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 집단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더 소득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갖는 의미가 감소되며 일상생활 세계에서 소득 이외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불평등 일반, 그리고 노년기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맥락을 소개함으로써 불평등이 단일 차원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속성을 가짐을 논하고 노

년기가 가지는 불평등 연구에서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다차원적 영역별로 불평등과의 이론적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노년기 소득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한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노인집단의 소득 불평등 추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소득 원천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 정도를 규명한다. 노인집단 소득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구하고, 러만과 이차키(Lerman&Yitzhaki)의 공변량 분해방법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노년기 소득 불평등의 장기 전망을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노년기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변화과정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인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고찰한다. 분석을 위해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가계조사」 자료 중 5년 간격의 5개년도 자료가 활용되었다.

제5장에서는 노년기 소비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한다.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총량적 불평등과 생활양식의 차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먼저, 소비의 총량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분석은 1998년, 2002년, 2004년, 2006년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 각 소비비목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분해함으로써 어떤 비목이 노인가구 소비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힌다. 다음으로, 생활양식으로서 소비구조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9차년도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소비생활양식을 유형화시킨다. 또한 특정 소비생활양식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관련 변인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종속변수로서 연계망의 규모, 접촉 빈도, 연계망 유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계망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한다. 노년기 건강상태의 격차를 만드는 요인으로서 교육, 직업 및 소득의 사회계층 요인과 함께 성별과 거주지역을 고려한다. 또한 이들 변인에 의해 노년기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의 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위험행동과 심리사회적 자원을 중간변수로 설정한다. 노년기 건강상태는 단순히 질병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 차원의 통합된 안녕을 의미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정의에 따라 노년기 건강상태를 정신적 건강, 기능적 건강, 의료적 건강 및 주관적 건강의 4개 차원이 종속변수로서 정의되었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산분석과 경로분석 등의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제8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노년기 불평등의 구조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가 총체적으로 던져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노년기의 불평등이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 불평등의 결과로서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사회계급론 vs 생활양식론

불평등에 관한 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막상 불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즉, 무엇이 혹은 어떤 상태가 불평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라는 규정에 대해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에 대한 또 다른 논의의 맥락에서 보면, 불평등은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생활에서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가장 현저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양식들 속에 확립된다는 측면에서 구조화(structured)되는 것이다 (양춘, 2003).

이렇듯 불평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두 가지 인식론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전자는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을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적 전통이며 후자는 생활양식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베버리즘적 전통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대해 규정하고 분석의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1. 계급과 불평등

불평등에 대한 분석의 시작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와 계급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한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자본가 집단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잉여가치를 독점함으로써 생산에서 발생한 잉여가치를 독점하게 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노동력 밖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자본가 계급은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정리하면, 생산수단의 불평등한 소유로 인해 양 계급 간에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권력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는 그러한 불평등을 영속화시킨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기본 토대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으나 보다 정교하게 계급과 불평등 구조에 대한 분석의 시도는 마르크스 이론을 계승 및 발전시킨 이론적 조류에 의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말부터 영미권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Analytical Marxism*)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분석하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된 방법론을 동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보여주었던 이론상의 애매모호함을 제거하고자 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인데, 불평등 분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 서구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경험적 연구와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사회과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신광영, 2001). 따라

1) 사실상 마르크스는 직접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관계와 착취구조에 대한 분석은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와 메카니즘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불평등 연구의 출발로 보는 것이다.

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담지한 ‘계급론’에 있어서도 라이트(Wright)는 ‘계급론’ 대신 ‘계급분석(class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계급에 관한 논의가 경험적인 사회과학적 논의의 대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자 했다. 둘째, 계급분석에 있어 ‘모순적 계급위치(contradictory class location)’라는 계급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자본가 vs 노동자의 양분법적 계급관계를 복잡해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다층화시키고자 했다. 라이트는 소상공 생산양식에서 잔존하고 있는 구(舊) 프티 부르주아지(자영업자)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나타난 신프티 부르주아지는 전혀 다른 계급이라고 보았다. 전통적인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임금취득자를 ‘모순적 계급위치’라고 불렀는데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 모순적 계급위치는 경영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피고용자들로 노동과정에서 자본가들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모순적 계급위치는 후기 독점자본주의 발달의 산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통제 상실, 자본의 기능분화와 기업내 위계조직의 발달의 결과이다. 정리하면, 라이트가 제시한 ‘모순적 계급위치’는 한 종류(재산에 기초한 착취관계)의 착취관계에서는 착취를 당하지만, 다른 착취관계(조직이나 기술에 근거한 착취관계)에서는 착취를 하는 계급위치를 지칭하는 개념이다(신광영, 2001).

이러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흐름은 불평등 분석에 대한 현재의 주류적 흐름에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직업적 계층/계급관계와 그로부터 기인하는 경제적 자원 배분(임금/소득)의 양(量)화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기틀은 다름아닌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에 대한 접근법을 차등적 접근(gradational approach)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등 양적인 차이에 따른 위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불평등을 이해하려

는 접근방식이다. 일상적으로 상중하로 소득집단을 구분하거나, 10분위 소득계층 구분 등이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2. 생활양식과 불평등

불평등 발생의 메카니즘으로 생활양식에 대한 주목은, 불평등에 관한 계급 이론에서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계급적’ 위치가 어떻게 구체적인 계급 행위 또는 계급의식으로 ‘전화’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생활양식분석은 계급론과 같은 기존의 구조분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발전된, 즉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가치의식이 괴리되는(탈구조화) 상황에서 소비 및 문화분석을 통해 토대와 상부구조, 구조와 개인의식을 연결하려는 사회과학적 접근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구체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실현’되는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불평등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생활양식 중심의 관점과 계급론 중심의 관점을 구별짓는 것이다.

생활양식 접근법의 이론사적 근원은 베버(Max Weber)에게서 찾을 수 있다. 베버의 인식론적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적 설명의 인과적 다원주의 및 개연적 성격을 강조했다. 둘째, 관념과 물질적 현실 사이에서 혹은 사회생활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했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에 대한 다차원적 구상을 시도했다. 넷째, 사회구조의 서열체계와 집단형성의 여러 토대(즉, 계급, 지위 및 정당)에 관한 다원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다섯째, 사회생활에서 작용하는 권력 혹은 지배의 여러 유형들, 복잡성을 불평등의 분석에 추가하였다(양춘, 2003).

계급론에서 불평등 양산의 핵심 기제가 ‘계급’에 있다면 베버의 접근에서 계급은 ‘지위(status)’ 개념에 의해 대체 된다. 베버는 지위 개념을 “라

이프스타일에 토대를 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식적인 교육과 경험적인 훈련, 합리적인 교육과 그를 통해서 길러지는 행동의 형태, 그리고 부모로부터 세습되었거나 직업에서 비롯되는 위세이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 속에는 지위집단이란 공통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보는 핵심적인 시각이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불평등 양산의 기준을 생산의 영역이 아닌 소비를 중심으로 한 생활의 영역에서 찾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계급론적 접근법이 자본주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 접근법은 사회구조와 개인적 행위를 체계적으로 매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대조될 수 있다. 한편, 고전이론가인 베버에서 이러한 접근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구조와 행위가 매개된 불평등 메커니즘의 분석을 정교화시킨다.

부르디외는 경제적 교환이란 다양한 사회적 교환들 중에서 하나의 경우일 뿐이라는 베버의 견해를 계승한다. 사회세계는 다원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경제적 생산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계급은 단순히 사회구조내에서 그 지위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계급은 그 일련의 특성들이 이 계급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인식하든 또는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상징 관계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형성된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인식론은 ‘자본’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한 것에서부터 반영된다. 부르디외는 기존의 ‘경제적 자본’에 ‘문화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상징자본’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자본의 범주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이 때 자본은 ‘사회적 경쟁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²⁾.

2) 문화자본은 특정한 문화적 양식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인이 체화-체득한 교양 또는 교

그는 이러한 자본들이 사회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교차되면서 계급간 ‘구별짓기’가 진행되고 계급간 특정한 문화적 성향, 즉 취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김왕배, 2001). 개인의 ‘취향’은 소비행위의 근간을 이루며, 소비행위를 통해 표출된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를 ‘선호(preference)’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한정시켰던 반면 부르디외는 취향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취향을 ‘아비투스(habitus)’라고 하는데 부르디외의 논의에서 아비투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바로 아비투스가 차별적인 계층과 계층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자본의 보유 정도에 따라 개인은 사회공간상에서 특정한 위치에 자리매김되는데, 이러한 객관적 구조는 아비투스 혹은 취향의 형태로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다시 이것이 발현된 형태로 각 집단·계층 별로 구별되는 생활양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디외 이론에서 불평등은 한편으로는 개인이 가지는 권한의 크기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자본의 실체로, 다른 한편으로는 아비투스의 형태로 내면화되는 무의식·취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함의를 갖게 된다. 즉, 불평등은 경제적 자본 중심의 양화 가능한 일면적인 것이 아니며 구조와 의식과 행위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영역에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관한 규정

1. 불평등 발생 영역의 다원성 : 소득, 소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불평등에 관한 계급론적 관점과 생활양식론적 관점을 종합해 보면, 불

육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점유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의미한다. 또한 상징자본은 세 가지 자본들이 정통적으로 승인된 형식, 즉 위신·신망·존엄·명예·명성 등을 말한다(현택수, 2001).

평등은 비단 경제적 소득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베버의 ‘가치영역’과 부르디외의 ‘장’이 그러하듯, 이러한 불평등의 다원적 영역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독자적이다.

불평등이 경제적 영역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자본’의 개념에 대한 확장의 시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즉, 불평등이 결국 개인의 권한/권력 행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유형/무형의 자원과 연결되기 때문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은 바로 그러한 유형/무형의 자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본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시도 중 하나는 슈츠(Theodore W. Schultz)와 벡커(Gary S. Becker), 민서(Jacob Mincer) 등 시카고학과 경제학자에 의해 발전된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론이다. 인적자본이란 인간의 몸에 체화되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생산적인 힘으로서, 교육, 건강, 이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등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예이다(이정우, 1997). 또 다른 대표적인 시도는 앞서 살펴보았듯 부르디외의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에 대한 규정이다. 문화적 자본과 상징적 자본은 대표적으로 소비에 의해 현상한다는 측면에서 소비는 경제적 자본으로서 소득 이외에 또다른 불평등의 핵심적 영역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제시하듯 불평등은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물질적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도 현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본 역시 자본의 또다른 형태로서 개인간에 불균등한 분배 구조를 보이는데 교육, 건강 등의 영역이 대변하는 인적자본 가운데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노인의 특성상 인적자본의 경우 교육의 측면보다는 건강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의 다차원적 분석을 소득, 소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등의 다원적 요

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하도록 하겠다.

2. 불평등의 인과적 구조 : 원인이자 결과로서 다차원적 불평등

앞절의 논의가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대해 제시하는 또다른 함의는 불평등의 인과적 구조에 관한 것이다. 부르디외가 제시하는 아비투스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획득되어진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의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공간의 계급적 등급에 아비투스를 매개로 하는 구별적 생활양식 또는 취향의 체계가 구조적으로 호응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즉 위치들의 각 등급에 따라 행위자(집단, 계급)의 아비투스가 등급적으로 상응하여 나타나며 여기서 아비투스 개념은 특정한 위치의 행위자나 계급의 재화를 (문화적) 실천과 결합하여 통일적으로 재표현해주는 생성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취향과 문화적 실천의 다양성과 차별성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과 재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출신계급과 교육 등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얻어지는 유산이라는 점을 제시한다(현택수, 2001). 즉 자본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 형성되고 구별되는 아비투스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위자의 판단 및 취향의 문화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되며 이는 다양한 사회 공간 속에서 연속적인 구별짓기의 과정을 양산함으로써 불평등한 계층·계급구조가 유지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마르크스의 계급론에서 제시되었듯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경제적 영역에서 착취와 불평등으로 현상하며 이것을 불평등의 출발점으로 가정해 보자. 그런데 여기서 출발한 불평등은 일상생활 영역(재생산 영역, 즉 소비의 영역)에서 또다른 생활양식의 불평등(문화자본 불평등)으로 귀속되며, 이는 다시 유사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계급/계층간 구별짓기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의 불평등과,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건강의 불평등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

의 불평등과 건강의 불평등은 또다시 경제적(소득) 불평등으로 귀속되니, 즉, 한 영역의 불평등은 다른 영역의 원인이자 결과인 연쇄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3. 불평등의 결과적 양면성 : 양적 차등화 vs 유형의 차이화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불평등의 결과적 형태는 특정 자본의 양적 차등화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유형’의 차이화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평등의 현상을 대변해주는 양적 지표로서 각종 불평등 지수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생활양식 유형, 즉, 차별적인 소비생활 유형,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로 현상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절 노년기와 불평등

‘노년기’라는 생애단계의 특성이 단지 한 단계로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체의 산물을 함축하고 있다는 특성상, 노년기의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작업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 불평등이라는 관점하에 진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머튼(Merton, R.)의 중범위이론에서 유래된다. 머튼은 직무상의 인정(recognition)과 보상(reward)에 대한 체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능력(ability)에 의해 또는 우연한 기회(chance)에 의해 직무 구조 내에서 개인의 직무 수행이 조직의 일반적 기대수준을 능가하게 되면, 이것은 단일한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후속적인 직무평가, 기회구조, 보상 등에도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머튼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기 선택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선택은 상호작용하여 후속적인 개인의 기회구

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기본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질성은 기회구조로부터의 혜택(advantage)과 불리(disadvantage)가 시간을 통해 지속되고 누적된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애주기에 대한 관심은 출생, 유년기의 부모의 관심과 투자, 자원의 세대간 분배 등의 이질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복지 및 생존이 상이한 패턴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누적적 혜택(advantage)과 불리(disadvantage)는 연속적 과정(sequential process)로서 유아기와 아동기에 시작되며 개개인마다 다양한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갈래로 발전되어 나가게 된다(O'Rand, 2006).

오랜드(O'Rand, 2006)는 생애주기(life course)를 '사회적 지위가 생애 각 영역(교육, 가족, 노동, 부, 건강, 여가 등)과 생애주기에 걸쳐 상호교차적으로 연속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데 두 개의 상호 연결된 개념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누적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설명한다. 한 가지는 생애주기 자본(life course capital)이며 다른 한 가지는 생애주기 위험(life course risks)이다. 생애주기 자본이란 개인의 욕구와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의미한다. 생애주기 자본의 형태는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인성자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정체성) 등으로 다양하며, 상호연결되어 있다. 생애주기 위험은 생애주기 자본의 축적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생애주기 위험은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하며 아동기에서 시작되어 생애주기 전체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여러가지 우발적인 악조건 및 기회 등으로 나타난다. 오랜드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이러한 생애주기 자본과 생애주기 위험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의 상이한 자원과 기회구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 이론 연구자인 엘더(Elder) 역시 개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생애과정에서 야기되는 결정이나 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발달 유형은 모든 개인에게 같은 것이 아니며 노인 개인간의 삶의 경로와 전환에 있어 이질적인데 특히 환경(구조)나 생애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timing), 생애사건의 발생순서(order), 각 생애사건의 기간(duration)에 의하여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노년기의 이질성은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이익(advantage)과 불리(disadvantage)가 어떠한 시점과 순서와 얼마간의 기간에 의해 경험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엘더는 다음과 같이 생애주기 패러다임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들을 제시하였다(Mortimer&Shanahan, 2004). 첫 번째 원칙은 생애주기에 걸친 발전의 원칙(the principle of life-span development)으로서 이는 인간 발전과 노화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행위자의 원칙(the principle of agency)으로서 개인의 생애주기는 사회환경 및 개인사가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구조 하에 일련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스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과 장소의 원칙(the principle of time and space)으로서 개인의 생애주기는 개인이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역사적 시대배경과 공간에 의해 내재되고 구성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인 타이밍의 원칙(the principle of timing)은 생애전환, 사건, 행동 패턴의 선례와 결과는 개인 생애에서 타이밍, 즉 언제 일어났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연결된 생애 원칙(the principle of linked lives)은 개개인의 삶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사회역사적 배경의 영향은 이러한 공유된 관계의 네트워크와 교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오랜드(O'Rand)와 엘더(Elder)의 생애주기 관점에 따른 불평등의 누적에 관한 이론이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메카니즘의 해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동일한 관점에 의한 후속적인 연구들은 보다 구체적인 생애주기 불평등의 발생 변인들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파르카스(Farkas)의 작

업이 이에 해당한다. 파르카스는 세 가지 유형의 자본, 즉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이 생애주기를 걸쳐 서로 교차하며 노후의 불평등 구조를 양산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각각의 자본은 부모세대가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 훈련, 기능, 습관,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 특정 유형의 자원을 대변한다. 한편, 파르카스는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변인 가운데 다양한 자본의 형성 및 발전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꼽는다. 그는 연구를 통해 양질의 교육수준은 소득과 급여 수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증진시킴으로써 심리적 자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기능적 역량,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복리감 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교육을 인적자본과 연결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혼과 사회적 네트워크로도 연결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제4절 불평등의 다차원적 영역에 관한 이론

1. 소득과 불평등

노후의 소득분배는 이혼, 퇴직과 같은 개인의 생애사적 사건들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같은 사회 정책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근로계층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 퇴직금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rystal and Wachrer, 1996). 노후에는 퇴직을 전후로 하여 주요 소득원이 시장의 근로소득에서 공·사적 연금이나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소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노후소득의 상태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퇴직 혹은 배우자 사망 등의 생애사적 사건을 전후하여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변화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Burkhauser, Butler, and Holden, 1991; Burkhauser and Duncan, 1988, 1989; Burkhauser, Holden, and Feaster, 1988; Hurd and Shoven, 1988). 이러한 연구들은 생애사적 사건들이 경제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즉, 한 세대가 중년에서 노년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들의 주요 소득의 원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혹은 소득불평등이 증가/감소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득분배구조와 연령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여 주었다(Crystal and Waehrer, 1996).

연령과 소득분배구조와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은 크게 1) 균등화 가설(leveling hypothesis), 2) 상태 유지 가설(status maintenance hypothesis), 그리고 3) 상태 누적 가설(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hypothesis)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균등화 가설(Leveling Hypothesis)

균등화 가설(leveling hypothesis)은 공적연금 제도와 같은 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증대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역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후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근로 시의 소득분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Fuchs(1984)의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근로소득에 비해 미국 공적연금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소득에 비해 소득재분배적인 공적연금 급여의 확대에 의해 65세 이후의 소득분배가 보다 균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와 유사하게 Hurd와

Shoven(1985)의 경우에도 보충급여(SSJ), 의료급여(Medicare)와 공적연금(Social Security) 급여의 증가로 인해 과거 십년에 걸쳐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상태 유지 가설(Status Maintenance Hypothesis)

이 가설에 따르면 노후의 경제적 상태는 근로 시의 경제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존속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예를 들어 교육, 성별, 산업 및 종사상 지위 등은 노후 근로소득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노후의 소득분배 구조는 근로 시의 소득분배 구조가 연장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Henretta와 Campbell(1976)의 연구로, 이들은 반복 횡단면 조사(repeated cross-section) 분석을 통해 퇴직 후 소득과 근로소득의 결정 요인이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가설의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태 누적 가설(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Hypothesis)

이 가설에 따르면 생애주기의 초기 상태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분배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가정한다. 즉, 출발에서 좋은 직장(better jobs)과 나쁜 직장(worse jobs)의 차이는 단순히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사내 복지 급여 등의 차이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노후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가설에서도 공적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정도에 따라 상태가 누적되는 정도가 완

화되는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므로 동일한 교육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연금급여의 발달정도에 따라 최종의 경제적 상태는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교육수준의 개인이 연금이 잘 발달된 교사직을 택할 경우와 연금제도가 없는 자영업을 택할 경우에는 이들의 노후 경제적 상태는 역전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소비와 불평등

소비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작업은 대표적으로 ‘과시적 소비론’과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집약될 수 있다.

자신의 지위·계급을 드러내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의 ‘과시적 소비’ 개념은 베블렌(Veblen)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베블렌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하는 길목의 신흥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신흥 부유층을 보며 과시적 소비의 개념을 제기했다. 『유한계급론』에서 그는 미국 상류계층의 소비행태가 타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는데, 과시적인 여가와 과시적인 소비는 상류계급(유한계급)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표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이 상류사회에 속해 있음을 입증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원들을 타인에게 과시해야 하는데, 노동을 하지 않는 게으른 생활(과시적 여가)과 비싸고 호화로운 의복, 주택, 장신구, 스포츠 등(과시적 소비)은 이들의 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베블렌과 유사한 시기에 독일의 사회학자 짐멜(Simmel)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짐멜은 의복에 대한 분석에서 두 개의 상충되는 원리가 유행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 가지는 모방의 원리인데 이를 따르는 하위의 사회집단은 상위집단의 의복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위 주장

을 확립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차이화의 원리(the principle of differentiation)’로서 이를 따르는 상위의 사회집단은 새로운 패션을 착용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상위집단은 새로운 패션을 착용함으로써 옛 지위표지(status markers)를 버리고 이를 하위집단에 넘기며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위집단은 그 자신에게 독특한 지위표지를 계속 지니면서 그 지위표지가 의미하는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상위집단에 의해 고안된 새로운 지위표지는 하위집단에게 계속적으로 도용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유행은 연속적인 혁신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Simmel, 1904; McCracken, 1988에서 재인용).

베블렌과 짐멜의 과시적 소비 개념은 부르디외(Bourdieu)에 의해 보다 체계화된다. 부르디외 역시 베블렌과 유사하게 음식, 의복, 실내장식,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소비영역을 통해 특정 계급이 타 계급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짓는 과정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소비를 통한 계급간 구별짓기의 이면에 존재하는 자본의 불균등한 분배 메커니즘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계급지배를 정당화하고 재생산시키는 수단임을 밝힘으로써 소비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보다 체계화시킨다.

부르디외(Bourdieu)의 논의는 자본에 대한 개념적 확장에서부터 출발한다. 부르디외는 기존의 ‘경제적 자본’에 ‘문화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상징자본’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자본의 범주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이 때 자본은 ‘사회적 경쟁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는 이러한 자본들이 사회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교차되면서 계급간 ‘구별짓기’가 진행되고 계급간 특정한 문화적 성향, 즉 취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김왕배, 2001). 개인의 ‘취향’은 소비행위의 근간을 이루며, 소비행위를 통해 표출된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를 ‘선호(preference)’라는 용어로 표현하면

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한정시켰던 반면 부르디외는 취향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취향을 '아비투스(habitus)'라고 하는데 부르디외의 논의에서 아비투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바로 아비투스가 소비사회에서 차별적인 계층과 계층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자본의 보유 정도에 따라 개인은 사회공간상에서 특정한 위치에 자리매김되는데, 이러한 객관적 구조는 아비투스 혹은 취향의 형태로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다시 이것이 발현된 형태로 각 집단·계층 별로 구별되는 생활양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불평등 이론에 기대어 보았을 때 노년기의 소비 불평등은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 생활양식의 차이와 그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적 연계망과 불평등

사회적 연계망은 자원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사회적 연계망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사회적 연계망에 있어 발현되는 불평등에 관한 경험적 검증에 있어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노년기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를 경제적 자본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비경제적 자본에 관한 논의로 관심영역을 확장시켜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사회적 자본의 논의를 노년학에 도입한 연구로는 이기홍(2005)의 연구가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공유식 외, 1994). 즉, 인간의 행위는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행위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친밀한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³⁾, 사회적 자본은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신뢰'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규범, 제도 등을 포함하는 제반 사회관계적 자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우천식 외, 2007). 사회적 자본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재정적 자본(Financial Capital)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과는 달리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으로서, 유사한 개념에는 인적자본, 문화자본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본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

사회적 자본이 타 자본과 구분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다. 둘째, 전통적인 자본이나 인적자본, 문화적 자본과는 달리 소유자에게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후기 마르크스주의자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미국의 사회학자 콜만(Coleman, 1988;1990)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제도화되었던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던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있다(Bourdieu, 1986: 248; 유석춘·장미혜, 2003에서 재인용). 한편 콜만은 “사회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한다.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 사회자본은 그 것이 없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Coleman, 1990; 유석춘·장미혜, 2003에서 재인용)고 접근하여 사회자본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푸트남(Putnam, 1995)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삶의 특징들로서 참여자들이 공통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를 상호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협동하고 협력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라고 정의하고 있다(김태준 외, 2004에서 재인용; OECD, 2000).

이익이 공유된다. 셋째, 자본의 보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자본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결과인 것이다. 넷째,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거래는 전통적인 자본의 거래처럼 제로섬(Zero-sum)의 관계가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더 축적되는 정합(Positive-sum)관계로 나타난다. 다섯째, 자본의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사회자본은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에 기반을 둔 자원으로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유석춘·장미혜, 2003).

<표 2-1> 새로운 형태의 자본의 제특성 비교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론적 의미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의 개념에 대한 수정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의 소유자	개인(노동자)	가족 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자본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형태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과 지식	가족구성원들에게 의해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연구의 핵심	교육과정과 임금사이의 연관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간 계급 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 유형
분석수준	개인	가족	개인/집단

자료: 유석춘·장미혜,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유석춘 외 편역(2003) 『사회자본』.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회적 자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거래의 제약요인-경제행위의 거래비용과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집단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둘째, 개인의 소속감·소통만족·정체성 등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고급화됨에 따라 더욱 더 중요해진다. 셋째, 사회통합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성원간의 신뢰와 이를 보장·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규범 등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경제적 동기나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욕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우천식 외, 2007). 린(2001)은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물질적·표현적 행위에 있어 작동하는 이유를 사회적 자본이 개개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력(Influence)을 미치며, 개개인의 사회적인 신임(Credentials)을 부여하고, 정체성과 사회적 인지를 강화(Reinforcement)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역할을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노년기의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불평등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자본의 소유에 있어서의 불평등만으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인 자본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이면서 동시에 현시점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적 자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소속감·소통만족·정체성 등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2) 사회적 연계망

사회적 연계망은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a set of personal contact) (Walker, 1985)로 정의된다.

사회적 연계망은 교제 및 정보의 교환(Gronovetter 1982; Kadusin 1982)을 가능케 하며, 비상시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Campbell, Marsden and Hurbert, 1986; Lin, 1982). 이는 사회적 연계망이 배타적인 호혜성과 상호 의무를 촉진하는 강하고 밀도 높은 연계망으로 결속자본(Bonding)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의 소속감과 사회통합적 연결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가교자본(Bridging)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 사회적 연계망의 제특성

		내 용
1. 유대 (network)의 특성	밀도	연계망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연계된 정도(각 연계망의 구성원중 실제로 한 자아가 다른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수에 의한 측정)
	크기	특정 연계망 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람의 수
	동질성	망구성원들이 서로 유사한 개인적 속성을 지니는 정도
	인구학적 특성	특정 인종의 비율, 평균 소득 등과 같은 네트워크의 기술적 집합적 특징
2. 위치	정도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연계된 정도

		내 용
(location) 특성	유대의 강도	관계(tie)가 강한 관계인가 약한관계인가 하는 정도
	빈도	망구성원간의 접촉의 양
	지속성	유대 또는 관계가 지속된 기간
	친밀성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
	복합성	망구성원간의 관계의 수(예: 두사람이 이웃이면서 친구인가)
	상호성	주고 받은 자원의 범위
	연계거리 (reachability)	망내 다른 구성원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관계의 수
3. 자원적 특성	사회적 자본	연계망에 내재해 있는 목적지향적인 행위에 의하여 접근가능하거나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특징으로, 물질적일 수도 감정적인 것일 수 있음.

자료: Moren-Cross and Lin, 2006, "Social Networks and Health"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사회적 연계망의 특성은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는데 모렌-크로스 와 린 (2006)에 의하면 망(Network)의 특성과 위치(Location) 특성, 자원(Resources)으로서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망의 특성으로는 연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의 밀도, 크기, 망구성원간의 유사성과 인구학적 특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위치특성으로는 연계망 구성원간의 연계의 정도, 연계의 강도, 상호작용빈도, 관계의 지속기간, 감정적인 친밀성, 관계(Tie)의 복합성(Multiplexity), 관계의 상호성(Reciprocity), 망내 다른 구성원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관계의 수(Reachability)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자원으로서의 특성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으로, 연계망에 내재해있는 목적지향적인 행위에 의하여 접근가능하거나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특징이다.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에 관한 연구(Hall & Wellman, 1985)는,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가 증대하고 구성이 다양화됨으로써 노인에게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

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인들은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와는 달리 사회적 지지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 사회적 지지자원의 급격한 감축과 사회적 지지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므로, 사회활동을 통하여 그러한 사회적 연계망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주로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정도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에 한정된 노인보다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 동시에 연계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박경숙, 2000). 즉,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활동이 다른 삶의 단계보다 노년기에 들어와 그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연계망은 노년기에 들어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두가지 기제에 의한 것인데 첫째는 타인의 기대와 자원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둘째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정경희, 1995). 연령분리적이며 노동시장 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정경희, 2004; Kohli, 2000) 사회로부터의 기대를 잃게 되며(Kendig, 1986), 배우자와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중요한 타자들을 잃게 되고 이는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의 제한과 심리적 지지자의 상실로 이어진다.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망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는 사회적 연계망의 구성과 사회적 지지의 연계성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연계망의 특성 중 크기와 밀도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관한 논의이다.

사회적 연계망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기능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연계망의 각 구성요소들이 사회적지지 기능수행에 있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능분담이론(Theory of Shared Function)에 기초한 특정과업모델(Task-specific Model)을 주장하는 리트윅(Litwak)은 비공식적 집단과 공식적 집단은 각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과업이 상이하며, 따라서 비공식적 집단과 공식적 집단은 각각의 사회집단이 지닌 구조적 특성에 걸맞는 과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배우자, 친척, 친구, 이웃은 그 관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원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로 보완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켄터(1979)에 의해 개발된 위계적 보완모델(Hierarchical Compensation Model)은 노인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보호제공자로 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1차 비공식 관계→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2차 비공식적 관계→공식적 관계의 순서로 서열화하여 선택하는 순차적인 위계적 선택(well-ordered hierarchial selecting process)을 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노인으로부터 거리가 먼 유대는 가까운 유대가 없을 때만 중요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족보호와 비공식적 보호가 공식적 보호에 비하여 1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공식적 보호는 단지 비공식보호를 보충하는 성격이 있을 뿐 대체적인 측면은 없다는 것이다.

특정과업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연계망이 비공식적 관계와 공식적 관계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있어 유리하지만, 위계적 보완모델에 의한다면 노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밀한 비공식적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

사회적 연계망에 있어 중요한 것은 크기인가 아니면 밀도인가 하는 논의 또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점이다. 표피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던 간에 정보, 제화, 서비스 등을 교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밀도는 떨어져도 연계망의 크기가 큰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학자(Gronovetter, 1982)가 있다. 즉, 사회관계가 교체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연계망의 밀도보다는 크기가 중요해진다. 반면, 비상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두는 학자들(Lin, Kahn, Antonucci)은 강한 유대감에 기초한 친밀한 관계(Strong Tie)의 수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노년기에 있어 사회적 연계망이 갖는 역할과 연계하여 살펴볼 때, 강한 유대에 기초한 친밀한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도움을 주고 받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약한 유대라도 그 유대의 수가 커서 노인이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가 크다면 그 구성이나 연계망의 밀도와는 관계없이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측면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건강과 불평등

1) 사회계층과 건강 격차

가. 인위적 구성물론 vs. 실체론

건강불평등은 개인의 건강상태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의해 개인의 삶의 경험과 질이 차별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적 양상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위적 구성물론은 교육, 직업 및 소득의 수준 등 사회계층의 지표와 건강수준 사이에 발견되는 관련성이 측정 오류에 의해 인위적으로 산출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사회계층과 건강수준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영국의 사망률 보고에서 사회발전과 더불어 낮은 사회계층의 구성 비

율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계층별 사망률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보고된 오류의 예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나(사라 네틀던, 1997: 221), 사회계층을 개인의 삶의 조건을 구조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하는 건강 불평등 연구는 사회계층과 건강의 관련성이 인위적 구성물이 아닌 실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계층이 낮을수록 사망률 및 유병률이 높다는 국내외 경험적 연구들은 건강수준의 계층화의 양상이 인위적 구성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김진영, 2007; 김혜련·강영호·윤강재·김창석, 2004; Conrad, 1997: 25-30; Hayward·Pienta·McLanghlin, 1997).

노년기의 건강상태도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강혜원·조영태, 2007; 김승곤, 2004; 김진영, 2008; 김혜련 외, 2004; 우해봉·윤인진, 2001; 이승미, 2002; Grundy·Slogget, 2003; House et al., 1994; House et al., 2005). 이 중 김진영(2008)과 하우스 등(House et al., 1994; 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 변화에 따른 계층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바, 노년기 전기에는 성인기에 비해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격차가 더욱 커지며 그 이후 점차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의해 구조화되는 건강수준의 격차에 대한 건강불평등 연구가 생물학적 기능이 감퇴하는 노년기 초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층은 평균수명이 점점 더 증가하여 노년기가 길어지고 또한 노인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매우 다양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박경숙, 2001), 노년기의 불평등의 한 축으로서 건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나. 선택설 vs. 인과설

선택설과 인과설은 사회계층과 건강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립적 가설이라 할 수 있다. 선택설 또는 건강 선택설(Health Selection)은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이라는 인적 자본을 잃으면 사회적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서, 건강을 독립변수로 사회계층을 종속변수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인과설 또는 사회적 인과설(Social Causation)은 사회계층을 독립변수로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제시하는, 즉 사회계층적 조건들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사라 네틀던, 1997: 221~222; Multau · Schooler, 2002). 앞에서 살펴 본 사회계층과 건강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횡단적 연구들은 건강이 쇠락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선택설을 인정하되, 사회계층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인과설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본다.

사회계층과 건강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25세 이상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1985년-1986년 패널연구로부터 사회계층이 건강에 대해 독립변수로서의 효과를 갖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House et al., 1994). 이후 House 등(2005)의 1986년-2001·2002년 종단연구와 Multau · Schooler(2002)의 1994년-1995년 패널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수준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인과효과가 건강 쇠락으로 인해 계층이 하락하는 선택효과에 비해 훨씬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년기 건강불평등 연구에서도 종단적 설계에 의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으나, 주된 사회적 역할로부터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에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동 폭이 일반 성인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인과설에 근거한 연구모델이 보다 적합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 밖에 사회계층과 노년기 건강 격차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중 교육수준이 소득이나 직업에 비해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어(김진영, 2008; House et al., 1994; 2005; Multau · Schooler, 2002), 사회계층을 개념화할 때 교육, 직업, 소득에 대한 통

합지표를 사용하기 보다는 각 지표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제기된다.

다. 심리사회적 자원 vs. 위험요인

건강에 대한 사회계층의 인과설은 사회계층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어떻게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는 사회계층과 건강상태를 매개하는 중간변수에 대한 논의로서, 사회계층이라는 구조적인 조건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이나 개인적 속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과정 또는 중간기제로 고려되는 요인이 심리사회적 자원(Psycho-social Resources) 또는 위험요인(Risk Factors)이다. 심리사회적 자원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의미하며, 반대로 위험요인은 건강을 해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위험요인의 가설은 사회계층이 개인으로 하여금 이들 심리사회적 자원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경험을 달리 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Kessler · House · Anspach · Renee · Williams, 1995; House et al., 2005). 따라서 중간변수로서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위험요인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합되어 건강에 대한 사회계층의 설명력을 높이는 보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심리사회적 자원에는 자긍심, 통제감, 자아효능감 등 개인적 성향과 운동,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행동,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 의료 및 보험제도 등이 포함된다.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행동과 생활사건이나 만성적 스트레스, 유해환경 등이 포함된다(House et al., 2005; Kessler et al., 1995).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숙(2005)과 김진영(2007)의 연구는 건강행동과 위험요인

을 고려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승미(2002)와 강혜원·조영태(2007)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계층에 따른 노년기 건강 격차의 기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자원과 위험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모델이 요구된다.

2) 성별·거주지역·연령과 건강 격차

가. 성별

건강수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는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성별, 특히 사회적 성차를 의미하는 젠더의 개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이는 생물학적인 차이 외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치관이나 역할 규범이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을 구조화하며 그 결과로 건강상태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건강수준은 오히려 낮다.”는 소위 성차의 패러독스에 대해 베브릭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자원이나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과 경험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남성이 사고나 치명적 질환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은데 비해, 여성이 사회적 역할과 지위 그리고 대부분의 생활양식에서 남성에게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고 제시한다(Verbrugge, 1989).

전통사회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흡연과 음주 등 생활양식에서 성차가 점점 없어져가는 만큼 건강상태의 성차도 희석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지만(Cockerham, 1998. p.41), 로스와 버드(Ross·Bird, 1994)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나 가사노동의 부담과 스트레스 등 위험요인들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젠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강혜원·조영태(2007)의 연구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남성노인에게는 소득보다 교육이, 여성노인에게는 교육보다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모두가 해방 이전에 출생하여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규범 속에서 성장기와 성년기를 지낸 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인세대의 건강 격차를 이해하는데 있어 생물학적 성차를 넘어 사회적 성차로서의 젠더 개념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거주 지역

개인이 거주하는 지리적 위치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보다는 의료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시설, 경제적 빈곤, 주택, 이주, 수질, 대기오염 등 사회 환경적 조건들의 지역 차이가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건강의 지역적 불평등 현상은 도시와 농촌 간의 사망률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이미숙, 2005. 재인용). 하이워드 등(Hayward et al., 199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농촌의 사망률이 도시 보다 낮으며, 이는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에 비해 균등한 삶의 기회를 누리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대도시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농촌, 해안 지역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김두섭·박효준, 2003) 농어촌의 삶의 조건이 도시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만성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검증한 이미숙(2005)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 거주 인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 지역과 건강에 대한 전신현(2004)의 연구는 도시 거주민들의 이웃 의식이라는 지역사회의 조건이 정

신건강에 관련된다고 보고하며, 정민수·조병희(2007)는 도시 거주민들의 지역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건강수준의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노년기 건강 격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노년기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지금까지 불평등 일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노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그리고 각 영역별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노년기 불평등에 대해 몇가지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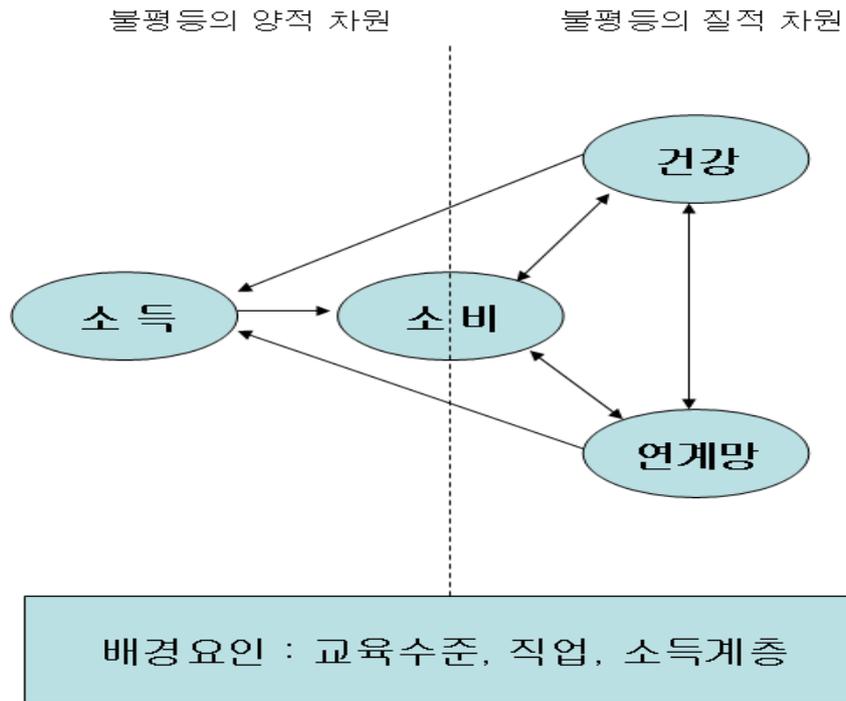
먼저, 불평등은 단지 소득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 사회적 연계망, 건강 등 다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며 양적인 속성과 질적인 속성을 갖는다.

둘째, 다원적 영역의 불평등은 상호 원인이자 결과로서의 순환적 관계를 갖는다.

셋째, 노년기에 이르면 각 영역별 불평등은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변인, 즉 교육수준, 직업, 소득계층 등의 변인들의 누적된 효과에 의해 형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2-1]와 같이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를 도식화시킬 수 있다.

[그림 2-1]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이하에서는 상기의 분석틀 하에 소득, 소비, 사회적 연계망, 건강의 각 영역별 노년기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불평등이 지니게 수로 대표되는 양적 속성 뿐만 아니라 차이화된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질적 속성을 갖는다는 인식 하에 유형적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각 영역별 투입 변수의 수준과 형태가 동등하지는 않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된다.

제3장 노년기 소득불평등 구조 분석

제1절 서론

우리 사회는 최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노인들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처한 삶의 환경도 비슷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도 이러한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일한 대책 마련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노인집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이질적이다(O'Rand, 2006; Holden and Hatcher, 2006; 박경숙, 2001). 현재 근로하고 있는 노인 대 퇴직한 노인, 혼자 사는 노인 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부자노인 대 가난한 노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등 노인집단의 내부 구성은 매우 이질적이다.

이러한 노인 집단 내부 구성의 이질성은 현상적으로는 현재 삶을 둘러싼 제반 조건의 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생에 걸친 기회구조의 차이가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누적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노인집단은 비노인 집단보다 삶과 관련한 조건에서 더욱 큰 편차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2년도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 보면 0.529로, 전체 가구 대상 지니계수 0.417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임병인, 전승훈, 2005).

한편, 우리 사회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빈곤율을 보면, 1996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

층의 비율이 9.6%였는데, 10년 후인 2006년에는 그 비율이 19.3%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간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였다(이현주 외, 2006). 불평등도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가처분 소득 기준 1996년 Gini 계수는 0.2778였는데 7년 후인 2003년에는 0.3367로 높아졌다(여유진 외, 2005). 이처럼 우리 사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 및 불평등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런 경향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집단의 소득 불평등 상황은 어떠할까?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노인집단의 소득 불평등 추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노인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줄고, 공적 이전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중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ulz, 1992). 이러한 노인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천별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할까? 즉 지난 10년간 노인들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왔다면, 그러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 대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 정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인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노인 관련 소득보장정책 수립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의 소득수준은 전 삶에 걸친 기회구조의 차이가 누적된 결과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여 과거 기회변수 즉 교육이나 직업경험이 현재의 소득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도 변화 추이와 그 변화에 대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의 현재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는 노동패널 2-9차년도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2007 자료이다.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이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2002년까지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3년부터 비로소 1인가구를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1인 가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인가구의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1인가구를 제외한 소득불평등도 추정은 노인가구의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추정할 위험이 높다. 그런 점에서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에 도시가계조사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농어가 가구를 제외한 전국 도시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로 2008년 현재 2007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일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9차 패널 자료인 2006년 조사 자료까지이다. 도시가계조사와 달리 노동패널은 1차년도 자료부터 1인가구를 조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와 가구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패널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인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와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에 노동패널 2차년도 자료인 1999년 조사 자료와 5차년도인 2002년 조사자료, 7차년도 조사 자료인 2004년 조사자료, 9차년도 조사 자료인 2006년 조사 자료를 이용할 것이며, 각 년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의 소득조사는 조사시점의 전년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분석하는 년도는 1998년, 2001년, 2003년, 2005년이다.

위의 4개 년도를 선택한 것은 1998년의 경우 본 연구의 소득원천별 분류에 맞는 최초의 조사⁴⁾이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IMF 경제위기에 가장 근접한 년도라는 점에서 이고, 2001년은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 시기라는 점에서, 2003년은 우리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다시 확대되는 시기라는 점으로, 2005년은 노동패널자료 중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라는 점에서 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주제는 노인가구의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2007)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패널 자료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한국복지패널 2007은 2차년도 자료이다. 노인가구 소득결정요인 분석에 노동패널이 아닌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는 것은 노인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변수들을 노동패널보다 한국복지패널이 더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대상 가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4) 노동패널 1차 조사는 1998년도에 이루어 졌으며, 1차 노동패널의 소득조사는 1997년도 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차 노동패널의 소득원천별 분류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본 연구의 소득원천별 분류에 포함하고 있는 사회보험소득, 공공부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동패널 1차 자료 대신 2차년도 자료부터 이용하였다.

50%씩 추출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표본추출율을 높게 하고 있다. 이런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인해 노인의 표본추출율이 다른 조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한국 복지패널의 조사 대상 가구는 1인가구 및 농어가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이고, 단지 도서 지역 거주 가구만 제외되었다. 한국복지패널(2007)의 조사내용은 가구의 소득상황 및 소비실태, 자산실태, 가구상황 등이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06년이다.

2. 주요 분석 개념

가. 노인 및 노인가구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인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미친 요인을 분해하고, 노인 소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노인 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은 정확히 말해서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쓰이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노인 및 노인가구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은 노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연령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비노인은 연령이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노인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며, 비노인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64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한다.

나. 소득

본 연구에서 소득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세후 총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세전 총소득이다. 세후 총소득은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추이 및 기여도 분석에서 사용하고, 세전 총소득은 노인가구 소득결

정요인 분석에서 사용한다.

세후 총소득개념은 가처분소득개념과 유사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처분소득 개념은 총소득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소득으로 정의되는데 반해, 세후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만 제외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노인가구 소득불평등 추이 및 기여도 분석에서 세후 총소득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분석에 사용되는 노동패널의 소득조사가 세후 총소득 개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별 영향의 분해에 사용하는 소득원천의 구분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되나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는 전세금은 제외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다시 사회보험 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 소득은 가구원들이 받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받은 급여 총액이다. 공공부조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 및 기타 정부보조금을 합한 총액이다⁵⁾.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및 친지 그리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퇴직금, 보험금 등을 포함하며, 위의 소득원천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소득의 시간적 측정 단위는 년(年)이다.

노인가구 소득불평등 추이 및 원천별 기여도 분석에서 소득에 대한 분

5) 공공부조소득은 경로우대교통비 등 공공부조 성격이 아닌 정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패널은 이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정부보조금은 공공부조 성격이 아닌 것이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

석 단위는 노인 개인이다. 노동패널에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수집되어 있다. 따라서 가구단위로 수집된 소득을 개인 단위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단위로 측정된 가구 소득을 개인단위로 조정하기 위하여 OECD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1인 조정 균등 소득으로 전환할 것이다. OECD의 균등화 지수는 아래와 같다.

$$Y^* = Y_i / s_i$$

(Y^* 는 1인 균등화 소득, Y_i 는 i 가구의 소득, s_i 는 i 가구의 가구원 수)

한편 노인가구 소득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용하는 세전 총소득개념은 지난 1년간 대상 가구의 과세 전 총소득으로 측정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민간보험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득 개념은 가구단위, 연소득으로 측정되며, 뒤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살펴 보겠지만,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할 것이다.

3. 불평등의 측정 및 분해

본 연구에서 불평등도의 측정은 가장 널리 쓰이는 Gini계수를 사용할 것이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완전평등일 경우에는 0이고,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 지니계수는 로렌즈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니계수는 모든 소득쌍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모든 소득수준에서의 소득이전에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어, 불평등도의 측정에 가장 흔히 쓰인다(이두호 외, 1991)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인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그러한 소득불평등의 변화 요인을 분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니계수의 분해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니분해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러만과 이차키(Lerman & Yitzhaki, 1994; 여유진 외, 2005)의 공변량분해방법을 사용한다.

러만과 이차키의 지니분해 방법을 사용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은 요인들이 도출된다.

<표 3-1> 지니분해 요소

요소	의미
Ck	소득원천 k의 총소득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Gk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
Rk	총소득과 소득원천 k의 순위 상관관계(지니상관계수)
Sk	소득원천 k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G	전체 모집단의 총지니계수
Ik	소득원천 k의 소득불평등 비중
Ik/Sk	소득원천 k의 상대적 소득불평등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C_f 라고 할 때, C_f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여유진 외, 2005).

$$C_f = R_f \times G_f \times S_f$$

R_f 는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상관계수를 나타내며, G_f 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S_f 는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기여하는 정도는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상관계수와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그리고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값이 된다⁶⁾.

6)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니계수를 소득과 그 소득의 누적확률 분포와의 공변량으로 표현하면 아래 <수식 3-1>로 표현될 수 있다.

각 소득원천을 f, h, w, e 라 하면, 이러한 소득원천별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기여하는 바를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소득원천별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모두 합하면, 총소득의 지니계수와 동일하게 된다.

4. 노인소득 결정요인 분석모델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현재 노인들의 소득에 어떤 변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기회변수 즉 교

$$\text{<수식 3-1> } Gini = 2 \frac{Cov[y, F(y)]}{\mu_y}$$

즉, 지니계수는 소득과 소득의 누적확률분포와의 공변량을 그 소득의 평균으로 나눈값의 두배로 정의된다. 여기서 소득을 그 구성요소 소득의 합 $y = \sum_{k=1}^k Cov(y_k, F)$ 으로 정의하고 구성요소소득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충족하면 <수식 3-1>은 아래 <수식 3-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ext{<수식 3-2> } Gini = 2 \frac{\sum_{k=1}^k Cov[y_k, F(y)]}{\mu_y}$$

여기서 $Cov[y_k, F(y)]$ 는 개별 요소소득과 총소득의 순위와의 공변량, μ_y 는 총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위의 <수식 3-2>의 분모와 분자에 $Cov[y_k, F(y_k)]$ 와 μ_k 를 곱하고 또 동일 항목으로 나누면 <수식 3-3>으로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수식 3-3> } Gini &= \sum_{k=1}^k \frac{Cov[y_k, F(y)]}{Cov[y_k, F(y_k)]} \cdot \frac{2Cov[y_k, F(y_k)]}{\mu_y} \cdot \frac{\mu_k}{\mu_y} \\ Gini &= \sum_{k=1}^k R_k G_k S_k \end{aligned}$$

여기서 R_k 는 지니 상관계수로 개별 요소소득과 총소득 순위와의 공변량과 개별 요소소득과 개별 요소소득 순위와의 공변량의 비로 구해지며, G_k 는 개별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그리고 S_k 는 개별 요소소득 평균이 전체 소득평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육, 사회보험 급여, 성장경험 등이 현재의 소득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여 노인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인 소득결정요인 분석은 중다회귀분석으로 수행된다. 분석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inc} = & a + b_1\text{sex} + b_2\text{age} + b_3\text{typ} + b_4\text{siz} + b_5\text{helth} + b_6\text{rig} + \\ & b_7\text{disab} + b_8\text{disea} + b_9\text{lab} + b_{10}\text{job} + b_{11}\text{ssi} + b_{12}\text{pub} \\ & + b_{13}\text{ptran} + b_{14}\text{welth} + b_{15}\text{chstan} + b_{16}\text{edu} + b_{17}\text{ttl} + b_{18}\text{typem} \\ & + b_{19}\text{skill} + b_{20}\text{pedu} + b_{21}\text{pint} \end{aligned}$$

(*inc*: 가구소득의 자연로그 *sex*: 가구주성 *age*: 가구주연령 *typ*: 혼인형태 *siz*: 가구원수 *helth*: 가구 주건강상태 *rig*: 거주지역 *disab*: 장애유무 *disea*: 만성질환유무 *lab*: 현재근로상태 *ssi*: 사회보험급여유무 *pub*: 공공부조급여유무 *ptran*: 사적이전소득유무 *welth*: 재산총액 *chstan*: 아동기생활수준 *edu*: 교육수준 *ttl*: 총근로연수 *typem*: 과거주된고용형태 *skill*: 직업기술유무 *pedu*: 부모교육수준 *pint*: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 유무)

<표 3-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단위	측정
종속변수	총소득	만원	노인가구주 가구 연간 총소득의 자연로그값
	가구주 성	더미	남자 1, 여자 0
독립변수	가구주 연령	세	가구주 만 나이
	가구주 혼인형태	더미	유배우 2, 사별 1, 이혼 또는 별거 0
	가구원수	명	동거 가구원 수
	가구주 건강상태		1 아주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거주지역	더미	서울 3 광역시 3 기타도시 1 농어촌 0
	장애유무	더미	가구주 장애 1, 가구주 비장애 0
	현재 근로상태	더미	상용직 ³ 시간일용직 ² 자영자 및 고용주 1 비근로 0
	사회보험급여 유무	더미	사회보험 소득 있음 1, 없음 0
	공공부조급여 유무	더미	공공부조 소득 있음 1, 없음 0
	사적 이전소득 유무	더미	사적 이전소득 있음 1, 없음
	재산총액	만원	총재산-부채
	아동기 생활수준		매우 가난 1, 가난 2, 보통 3, 부유 4, 매우부유 5
	교육수준	연	가구주 실제 교육연수
	부모 교육수준	더미	고등학교 졸 이상 1, 고등졸 미만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유무	더미	있으면 1, 없으면 0

제3절 노인소득 불평등의 현황 및 요인 분해

1. 노인소득 불평등의 현황

<표 3-3>은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노인과 비노인7)간 연간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로 조정한 1인 균등화 소득이다. 평균소득을 보면, 1998년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의 경우 544만원, 비노인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평균소득은 1,045만원으로 노인 평균소득은 비노인가구주 평균소득의 절반이 약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분석기간 전기간 동안 이어져, 2005년의 경우 노인의 평균소득은 1,128만원, 비노인의 평균소득은 1,968만원이다. 중위소득의 경우 노인과 비노인간 격차는 더 크다. 1998년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의 중위소득은 360만원, 비노인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중위소득은 881만원으로 노인의 중위소득은 비노인 중위소득의 약 4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분석 전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표 3-3> 연도별 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소득 비교

(단위: 1인, 연, 만원)

	소득종류	1998	2001	2003	2005
65세 이상	평균소득	544	834	1,028	1,128
	중위소득	360	462	538	723
65세 미만	평균소득	1,045	1,502	1,708	1,968
	중위소득	881	1,247	1,430	1,633

7) 노인소득은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소득을 균등화지수를 통해 조정한 1인 노인 소득을 말하고, 비노인 소득은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총소득을 균등화지수를 통해 조정한 1인 비노인소득을 말한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주 가구의 하위집단별 소득불평등 현황을 보자. 먼저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 보면, 1998년 남성 가구주 가구 노인의 중위소득은 430만원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의 중위소득은 250만원으로 대략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소득은 남성가구주 가구 노인의 약 58%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노인가구주 가구내 가구주의 성별 격차는 분석 전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3-4> 노인가구주 가구의 성별 평균, 중위소득 변화 추이
(단위: 1인, 연, 만원)

	1998		2001		2003		2005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남자	609	430	1,022	581	1,173	741	1,296	892
여자	411	250	457	310	770	373	856	512
전체	544	360	834	462	1,028	538	1,128	723

<표 3-5>는 노인가구주의 연령대별로 평균,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은 낮으며,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는 점차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8년도 가구주의 연령이 65-69세인 경우 중위소득은 427만원, 70-74세는 364만원, 75세 이상은 300만원으로, 70-74세 가구주 가구의 중위소득은 65-69세 가구의 85%수준, 7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65-69세 가구주 가구의 70%수준이었는데,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격차는 점차 더욱 커져, 2005년 70-74세 가구주 가구의 중위소득은 65-69세 가구주 가구의 75% 수준, 7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65-69세 가구주 가구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표 3-5> 노인가구주 가구의 연령대별 평균 중위소득의 변화 추이
(단위: 1인, 연, 만원)

	1998		2001		2003		2005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65-69	623	427	1,083	659	1,189	772	1,483	978
70-74	539	364	687	438	877	468	1,046	730
75+	410	300	614	317	933	384	748	492
전체	544	360	834	462	1,028	538	1,128	723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별 평균,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면, <표 3-6>과 같다. <표 3-6>을 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무학 가구와 그 이상의 교육수준간 그리고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간 소득격차가 크다. 1998년을 보면, 가구주가 무학인 집단의 중위소득은 247만원으로 초등졸인 집단의 중위소득인 424만원의 58%에 불과하고,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의 중위소득은 849만원으로 고등졸 집단 중위소득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러한 교육수준별 소득격차는 이후에도 지속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6>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별 평균, 중위소득 변화 추이
(단위: 1인, 연, 만원)

	1998		2001		2003		2005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무학	349	247	445	282	738	371	677	482
초등졸	596	424	965	530	872	579	1,002	747
중등졸	624	424	721	554	1,117	729	1,134	786
고등졸	629	503	1,080	720	1,436	907	1,271	986
전문대이상	1,158	849	1,701	1,283	1,714	1,348	2,579	1,387
전체	544	360	834	462	1,028	538	1,128	723

<표 3-7>은 가구주의 가구형태별 평균, 중위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독인가구인 집단의 평균소득이 가장 적고, 다음이 노인부부 가구이며, 가장 평균소득이 많은 가구형태는 자녀 등 다른 가구원들과 함께 사는 경우이다. 여기서 소득은 1인 균등화된 소득이다. 1998년 독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40만원, 부부가구는 380만원,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주 가구는 447만원으로, 독인가구의 중위소득은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가구주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구형태별 소득격차는 점차 커져, 2005년 독인가구의 중위소득은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구 중위소득의 약 44%에 불과하다.

<표 3-7> 노인가구주의 가구형태별 평균, 중위소득 변화 추이
(단위: 1인, 연, 만원)

	1998		2001		2003		2005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독신	381	240	333	251	774	361	721	478
부부	542	380	826	484	1,007	530	1,145	798
기타가구원 동거	623	447	1,186	735	1,236	902	1,414	1,090
전체	544	360	834	462	1,028	538	1,128	723

<표 3-8>은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별 소득의 구성비를 1998-2005년간 살펴 본 것이다. 분석 전기간 동안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사적 이전소득이며, 그 다음이 공적 이전소득, 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순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1998년에는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의 42%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차 작아져, 2005년에는 37%로 줄어 들었다. 사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1998년, 2003, 2005년 모두 33%나 차지하여,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의 원천별 비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은 노인가구 전체 소득의 13%를 차지하였는데, 2001년에는 18%, 2003년에는 16%, 2005년에는 20%로 증가하였다. 이런 공적 이전소득에서 특히 사회보험 소득의 증가가 두드러 진다. 사회보험 소득은 1998년도에는 노인가구 소득의 4%를 차지하였는데, 2005년에는 10%로 7년간 거의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급여를 수령하는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공부조 소득의 비중은 분석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가 없다.

<표 3-8>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의 원천별구성변화추이

(단위: %)

소득원천	1998	2001	2003	2005
근로소득	0.42	0.41	0.40	0.37
금융소득	0.04	0.03	0.03	0.02
부동산소득	0.08	0.09	0.07	0.07
공적이전소득	0.13	0.18	0.16	0.20
사회보험	0.04	0.08	0.09	0.10
공공부조	0.09	0.10	0.07	0.10
사적이전소득	0.33	0.28	0.33	0.33
기타소득	0.01	0.02	0.01	0.01
전체	1.00	1.00	1.00	1.00

<표 3-9>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구성 및 평균, 중위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두 집단간 중위소득을 비교해보면, 1998년 소득상위 20% 집단의 중위소득은 1,211만원이고, 하위 20% 집단의 중위소득은 90만원으로 나타나 상위 20%의 중위소득은 하위 20%

보다 무려 1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이후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2005년 상위 20%의 중위소득은 1,881만원이고 하위 20%의 중위소득은 193만원으로 상위 20%의 중위소득은 하위 20% 중위소득의 9.8배로 비율상 두 집단간 소득격차는 일정정도 완화되었지만, 절대액의 격차는 1998년 1,121만원에서 2005년에는 1,688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표 3-9> 노인가구의 소득수준별 소득구성추이

		(단위: %)			
		1998	2001	2003	2005
상위 20%	근로소득	0.64	0.57	0.60	0.55
	금융소득	0.05	0.05	0.03	0.04
	부동산소득	0.11	0.14	0.16	0.14
	공적이전소득	0.09	0.17	0.15	0.16
	사회보험	0.08	0.16	0.15	0.16
	공공부조	0.00	0.01	0.00	0.01
	사적이전소득	0.09	0.06	0.04	0.09
	기타소득	0.03	0.01	0.03	0.02
	전체	1.00	1.00	1.00	1.00
	평균소득(만원)	1,449	2,540	3,106	2,584
	중위소득(만원)	1,211	1,614	1,788	1,881
하위 20%	근로소득	0.12	0.14	0.11	0.11
	금융소득	0.04	0.02	0.01	0.01
	부동산소득	0.09	0.06	0.04	0.02
	공적이전소득	0.30	0.34	0.22	0.37
	사회보험	0.01	0.05	0.06	0.05
	공공부조	0.28	0.29	0.16	0.31
	사적이전소득	0.45	0.41	0.61	0.49
	기타소득	0.00	0.03	0.00	0.00
	전체	1.00	1.00	1.00	1.00
	평균소득(만원)	83	73	134	163
	중위소득(만원)	90	69	139	193

다음으로 두 집단간 소득구성을 비교해 보면, 1998년 상위 20% 집단의 가구소득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64%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동산소득으로 11%, 그 다음이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각각 9%, 그리고 금융소득 5%, 기타소득 3%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20% 집단의 가구소득은 사적 이전소득이 45%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공적이전소득으로 30%, 그 다음이 근로소득으로 9%, 금융소득 4%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이후 상위 20% 집단의 가구소득 구성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차 줄고, 대신 부동산 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에서 각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중의 서열은 1998년과 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다. 상위 20% 집단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1998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공적 연금 등 사회보험 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1998년 이후 하위 20% 집단의 소득 원천별 비중의 서열은 1998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 소득원천 비중의 크기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금융소득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위 20% 집단에서 공적 이전소득 비중의 증가는 주로 공공부조 소득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상위 20% 집단과 상이하다. 이처럼 상위 20% 집단과 하위 20% 집단간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원천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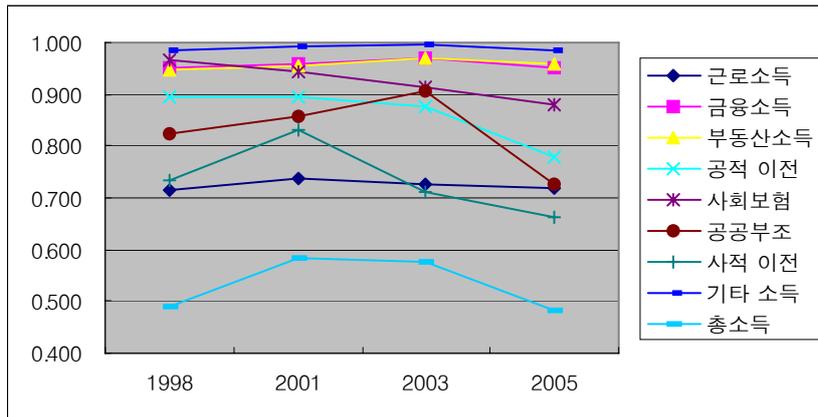
2. 소득원천별 노인소득 불평등 요인 분해

여기서는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의 변화추이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고, 지니계수의 분해를 통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천이 미친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지표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노인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총소득에서 각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중, 지니상관계수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총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각 소득원천의 절대적 기여도는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times 총소득에서 각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중 \times 지니상관계수를 통해 산출되며, 이는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의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대값을 나타낸다. 상대적 기여도는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계효과는 각 소득원천의 총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소득원천별 비중으로 나누어 준 값이며,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준다. 즉 어떤 소득원천의 한계효과가 1보다 작으면 총소득 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평등함을 의미하고, 1보다 크면 총소득 불평등에 비해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표 3-10>과 [그림 3-1]을 보면, 1998-2005년간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91(1998년)→0.582(2001년)→0.575(2003년)→0.482(2005년)로 변화하여, 199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면,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714(1998년)→0.739(2002년)→0.728(2003년)→0.717(2005년)로 총소득 지니계수보다 높아, 더 불평등한 분배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변화추이는 총소득 지니계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다른 소득원천의 지니계수를 보면, 금융소득(0.951→0.959→0.970→0.952), 부동산소득(0.946→0.956→0.971→0.957), 기타소득(0.985→0.991→0.996→0.987)의 지니계수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그림 3-1]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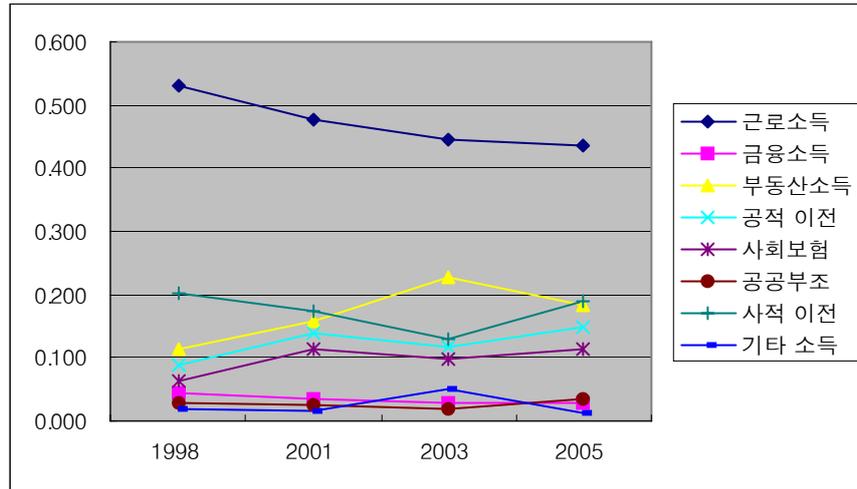
반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0.894→0.895→0.875→0.780으로 작게나마 감소하고 있고, 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0.732→0.832→0.711→0.662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만으로는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의 지니계수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소득원천의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는지 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10>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결과

	소득원천	지니계수	비중(A)	지니상관계수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B)	한계효과(B/A)
1998	근로소득	0.714	0.530	0.816	0.309	0.629	1.186
	금융소득	0.951	0.044	0.582	0.024	0.050	1.127
	부동산소득	0.946	0.114	0.718	0.078	0.158	1.381
	공적 이전	0.894	0.090	0.472	0.038	0.077	0.858
	사회보험	0.967	0.063	0.763	0.046	0.094	1.503
	공공부조	0.825	0.027	-0.364	-0.008	-0.017	-0.611
	사적 이전	0.732	0.203	0.203	0.030	0.061	0.302
	기타 소득	0.985	0.018	0.674	0.012	0.025	1.351
	총소득	0.491	1.000		0.491	1.000	
2001	근로소득	0.739	0.476	0.820	0.288	0.496	1.041
	금융소득	0.959	0.035	0.657	0.022	0.038	1.082
	부동산소득	0.956	0.157	0.798	0.120	0.207	1.312
	공적 이전	0.895	0.140	0.639	0.080	0.138	0.984
	사회보험	0.944	0.115	0.766	0.083	0.143	1.244
	공공부조	0.859	0.025	-0.135	-0.003	-0.005	-0.200
	사적 이전	0.832	0.174	0.411	0.060	0.102	0.588
	기타 소득	0.991	0.017	0.673	0.011	0.020	1.146
	총소득	0.582	1.000		0.582	1.000	
2003	근로소득	0.728	0.446	0.801	0.260	0.452	1.013
	금융소득	0.970	0.030	0.635	0.018	0.032	1.071
	부동산소득	0.971	0.227	0.906	0.199	0.347	1.529
	공적 이전	0.875	0.118	0.521	0.054	0.093	0.792
	사회보험	0.914	0.099	0.661	0.060	0.104	1.050
	공공부조	0.906	0.019	-0.351	-0.006	-0.011	-0.553
	사적 이전	0.710	0.131	-0.028	-0.003	-0.005	-0.035
	기타 소득	0.996	0.049	0.948	0.047	0.081	1.642
	총소득	0.575	1.000		0.575	1.000	
2005	근로소득	0.717	0.436	0.767	0.240	0.498	1.142
	금융소득	0.952	0.029	0.606	0.017	0.034	1.198
	부동산소득	0.957	0.184	0.858	0.151	0.314	1.704
	공적 이전	0.780	0.149	0.458	0.053	0.111	0.741
	사회보험	0.880	0.115	0.631	0.064	0.132	1.152
	공공부조	0.725	0.034	-0.420	-0.010	-0.022	-0.632
	사적 이전	0.662	0.189	0.096	0.012	0.025	0.131
	기타 소득	0.986	0.012	0.721	0.009	0.018	1.476
	총소득	0.482	1.000		0.4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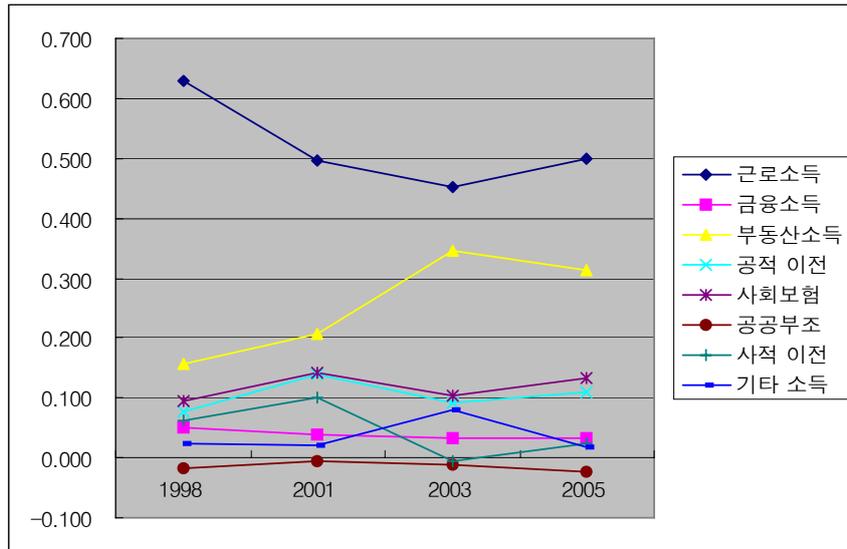
다음으로 총소득에서 각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소득원천별 비중의 변화추이



[그림 3-2]를 보면, 분석 전기간에 걸쳐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점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적 이전소득은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작으나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부동산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회보험소득, 공공부조소득 모두 증가함에 따른 것이지만, 특히 사회보험소득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림 3-3] 총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의 상대적 기여도 변화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 기여도인데, [그림 3-3]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과 <표 3-10>을 보면, 근로소득이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8년 0.629, 2001년은 0.496, 2003년은 0.452, 2005년은 0.498로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영향력 감소는 앞에서 살펴 본 비중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비중의 변화만으로 영향력의 감소를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소득원천의 한계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소득 외에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에서 특징적인 점은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 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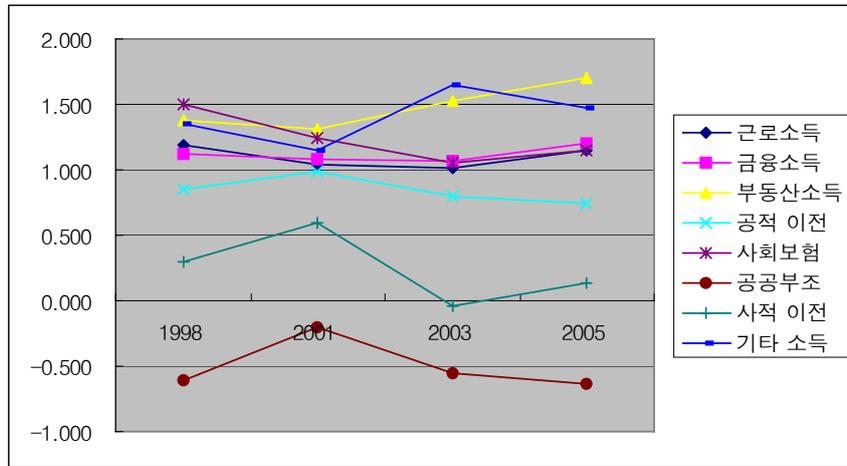
다. 부동산소득은 노인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부동산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8년 0.158에서 2001년 0.207, 2003년은 0.347, 2005년은 0.314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험소득의 영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력은 1998년 0.094에서 2001년 0.143, 2003년 0.104, 2005년 0.132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공부조소득은 분석 전기간에 걸쳐 -값을 가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값은 -0.005에서 -0.022로 미미하다. 총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사적 이전소득의 기여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사적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8년 0.061, 2001년 0.102, 2003년 -0.005, 2005년 0.025이다.

[그림 3-4]는 각 소득원천의 총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소득의 한계효과는 전 기간에 걸쳐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총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또한 추이도 큰 변화가 없는 등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소득의 한계효과는 1998년 1.381, 2001년 1.312, 2003년 1.529, 2005년 1.704로 대체로 분석 전기간에 걸쳐 절대값이 가장 커 소득원천 중 가장 불평등하게 분배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절대값이 커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불평등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 소득의 한계효과도 분석 전기간에 걸쳐 절대값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총소득의 분배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하지만 점차 절대값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불평등 정도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소득원천 중 한계효과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는 공공부조 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이다. 공공부조 소득은 분석 전 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2001년을 제외하고 -0.55에서 -0.63의 값을 갖는다. 이는 공공부조 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적 이전 소득의 한계효과는 1998년 0.302, 2001년 0.588, 2003년 -0.035, 2005년

0.131로 사적 이전소득의 분배는 총소득보다 더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4] 총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별 한계효과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은 크게 악화되었다가 다시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근로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점차 현재 근로소득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과거 기회를 반영하는 부동산소득의 비중은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됨으로서 노인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 직업경력을 반영하는 또 다른 소득원천인 사회보험소득도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 소득 역시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공부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다. 공공부조소득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비중이

작아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사적 이전 소득의 비중은 비교적 크며 노인가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가구의 소득결정요인 분석

<표 3-11>은 노인가구의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세전 가구 총소득에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에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변량의 5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현재 상태 변수로 거주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건강상태, 장애유무, 현재 근로상태, 가구주 연령, 가구주 혼인상태, 공공부조 소득 유무, 사적 이전소득 유무 등이고, 과거 기회 변수로 사회보험 급여 유무, 재산, 가구주 교육수준 변수 등과 부모 관련 변수로 아동기 경제적 생활상태, 부모교육수준, 상속증여 유무 변수 등이다.

현재 상태 변수 중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지역, 가구원수, 가구주 건강상태,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때, 유의수준 .05에서 서울 거주 노인가구는 군지역 거주노인가구보다 소득이 23.7%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광역시 거주 노인가구도 군지역 거주 노인가구보다 약 6.3% 정도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하면,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 노인가구의 소득은 연간 4.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할 경우, 현재 가구주의 건강이 안 좋을수록 노인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1> 노인가구의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Beta	t
(Constant)	6.424		30.438***
거주지역(기준: 군지역)			
서울	0.237	0.107	5.405***
광역시	0.061	0.033	1.658*
기타 시	0.021	0.012	0.605
가구주 성(남성=1)	0.043	0.028	0.783
가구원수	0.355	0.434	20.267***
가구주 건강상태	-0.04	-0.05	-2.747***
장애유무(장애=1)	0.027	0.013	0.73
현재 근로상태 (기준: 비근로)			
상용직	0.344	0.081	4.648***
시간일용직	0.144	0.047	2.739***
자영자 및 고용주	0.093	0.055	2.756***
가구주 연령	-0.009	-0.072	-3.644***
가구주 혼인상태(기준: 이혼/별거)			
유배우	0.161	0.105	2.19**
사별	0.22	0.143	3.224***
사회보험급여유무(유=1)	0.252	0.155	8.372***
공공부조소득유무(유=1)	-0.075	-0.023	-1.294
사적 이전유무(유=1)	0.038	0.012	0.736
재산	5.69E-06	0.166	9.55***
아동기경제적 생활상태	0.016	0.019	1.102
부모교육수준(고졸 이상=1)	0.048	0.027	1.553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유무(유=1)	-0.01	-0.005	-0.31
가구주 교육수준	0.026	0.175	8.134***
R2=.523 F=81.050***			

* p<.1 ** p<.05 ***p<.01

노인 가구의 근로상태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현재 노인가구주가 상용직으로 일하는 집단은 노인가구주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41.1% 높으며(유의수준 .01), 시간직이나 일용

직으로 근로하는 가구도 근로하지 않는 가구보다 15.5% 정도 가구소득이 높고(유의수준 .01), 자영자나 고용주인 경우도 근로하지 않는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9.7% 정도 더 높은(유의수준 .01)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주의 연령 또한 노인 가구의 소득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1세 증가하면, 가구소득은 약 0.9% 감소하는(유의수준 .01)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구주의 결혼상태도 노인가구 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할 때, 이혼이나 별거한 가구보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소득이 약 17.5% 더 높고, 사별한 경우도 이혼이나 별거한 경우보다 24.6%정도 더 높으며,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현재 상태 변수 중에서 거주주의 장애유무, 공공부조 소득유무, 사적 이전소득 유무 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퇴직 전 과거 관련 변수의 영향을 보면, 사회보험급여 유무, 재산, 가구주의 교육수준 변수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공적 연금의 급여수급은 퇴직 전 직업경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할 경우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노인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28.7%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많을수록 노인가구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인 가구주의 교육수준도 현재 노인소득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독립변수가 같을 때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하면, 노인가구소득은 2.6%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상태변수와 퇴직 전 과거 관련 변수가 현재 노인가구의 소

득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부모 관련 변수는 노인가구의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주지역,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혼인상태, 현재 근로상태 등의 현재 상태변수가 노인가구의 소득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급여 유무, 재산, 교육수준과 같은 과거 기회 변수 또한 현재 노인가구의 소득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 상속증여유무, 아동기 경제적 생활상태 등의 부모 관련 가족변수는 현재 노인가구의 소득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결론

이 장에서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 분석 및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근로소득이지만, 근로소득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의 총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가 주요한 요인이고, 근로소득의 단위당 불평등 한계효과는 분석 전기간 동안 1보다 크며, 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근로소득의 분배상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가구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총소득에 대한 부동산소득의 영향력은 비중의 증가와 함께 한계효과의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부동산소득의 비중은 2003년 이후 2번째로 높는데, 한계효과의 절대값이 가장 크며,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

산 소득의 경우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력 증가는 비중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회보험 소득의 비중은 1998년 6.3%에서 2005년에는 11.5%로 증가하였다. 사회보험 소득의 한계효과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1보다 커 총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절대값은 점차 줄어드는 추이를 보여주어, 사회보험소득의 분배상태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소득이전과 공공부조이다. 분석 전기간에 걸쳐 총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 3번째(20%내외)로 높지만, 총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2.5%(2005년) 정도로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사적 이전소득의 한계효과가 0.3-0.1 수준으로 총소득의 분배상태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의 한계효과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값을 가져, 노인가구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작아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또한 변화도 크지 않다.

넷째, 노인가구소득 결정요인의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 가구 소득 결정에 과거 기회 요인인 교육수준, 사회보험급여유무, 재산 등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사회보험소득이 있는 노인, 재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가구 소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젊었을 때의 차이가 노후 소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젊었을 때 불안정한 직업을 갖어, 공적 연금을 수혜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노후에도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 거주지역의 차이, 건강상태, 연령, 결혼형태, 근로상태 등도 노인가구의 소득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공공부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소득에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노인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노인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한 기제는 공공부조이다. 현재 노인대상 공공부조 제도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빈곤함에도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노인가구 하위 소득 20%의 평균 소득은 2005년 현재 연 193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노인들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빈곤위험을 덜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급여수준 인상과 중간층 노인까지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성을 높여 명실상부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자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젊은 사람에 대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가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보험소득은 현재 노후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저소득 노인들의 상당수가 공적 연금의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60세 이전 노동시장에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에서 배제되었음에 기인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노동시장 내 위치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등으로 실질적인 가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미래에 노후 소득 불안 및 노후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제4장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

제1절 서론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급속하게 심화되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는 1990년 0.286, 1993년 0.275, 1997년에 0.279로 매우 안정적이었으나, 1998년 0.309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식, 2002). 외환위기 이후의 불평등의 심화현상은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최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8.9% 감소한 반면에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오히려 7.8%나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정진호 등, 200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미발달로 인해 노인들 간의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근로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2-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변화되는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인·전승훈(2005)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2년도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0.417인데 반해 60세 이상~65세 미만 연령집단의 지니계수는 0.523, 65세 이상~70세 미만 연령 집단의 지니계수는 0.529로 연령이 증대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노년기 불평등의 심각성은 비단 오늘날 노인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대표적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 가구규모의 감소,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공적연금 제도의 발달 정도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인구의 고령화, 가구규모의 감소, 서비스 및 비정규직 산업의 증대 등은 모두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구조의 변화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나 조기퇴직의 증가는 이론적 가정에 따라 다소 그 영향의 방향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겠지만 가구 측면에서 보면 취업여성과 남편의 취업여부 등에 따라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끝으로 다소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직 공적연금의 발달만이 노년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Jenkins, 1995).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서구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핵가족의 진행 정도도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다른 국가와 달리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비록 공적연금이 도입되어 제도적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연금급여가 노인들의 소득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앞으로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년기 소득불평등 정도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우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관해 심도 깊게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득불평등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이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그 요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강병규·윤명수, 2003; 박성준, 2000; 성명재, 2001; 유경준, 1998; 정진호 외, 2002). 비록 연령에 따른 소득불평

등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소수 있긴 했지만(임병인·전승훈, 2005), 가구주 연령별 빈곤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는 데 머물러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 및 그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노년기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변화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장기적인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기간에 걸친 노년기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 파악을 위해서 1986년부터 5년 간격으로 조사된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노년기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며,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그리고 장기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정된 가정(assumptions)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장·단기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 및 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5절에서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노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존 연구에서 노후 소득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소득불평등 일반을 논의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①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 ② 노동시장 관련 요인, 그리고 ③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요인들 중에서 특히 노후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1) 거시적 요인

거시적 요인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거시요인들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명확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안국신·박완규·유항근(1995)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국신(1995)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반면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의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실업은 일관되게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거시변수 중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실업률이다(안국신, 1995; 이정우·이성림, 2001; 채구묵, 2007; Jenkins, 1995). 이경

우·이성립(2001)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해 1993년-1998년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98년 지니계수가 급상승한 원인이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있다고 보고 경기부양을 통해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채구묵(2007)의 연구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1985년-2004년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실업률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Jenkins(1995) 또한 1971-1986년 동안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원인으로 실업가구의 증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노동시장 관련 요인

다음으로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의 수요공급 변화 등 노동시장 요인과 노조 조직률 및 최저임금 등 제도적 요인 또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병구·윤명수, 2003; 박성준, 2000; 유경준, 1998; 채구묵, 2007; Dinardo, John, Nicole M. Fortin & Tomas Lemieux, 1996; Murphy, Kevin M. & Finnis Welch, 1993; Freeman, Richard B., 1993).

먼저, 노동시장 측면에서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변화를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본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학력, 성별, 경력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격 변화)와 집단의 분포 변화(수량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학력, 경력,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격변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Murphy(1993)는 1968-1990년의 CPS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 및 고용 변화가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수익률 변화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1963-1994년까지 CPS 자료를 사용하여 인종과 성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한 Gottschalk(1997)의 연구 또한 학력과 경력에 의한 수익률 증가가 고학력자와 숙련 노동자의 임금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에 기여한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수요공급에 대한 국내 연구 또한 인구특성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박성준(2000)은 1991-199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경력과 학력에 의한 수익률의 변화(가격 변화)와 노동자 특성의 분포 변화(수량 변화)로 분해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경력과 학력의 수익률 증가가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병구·윤명수(2003)는 1994년-200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각 요인별로 수량효과와 가격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박성준(2000)의 연구결과를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별로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속년수, 성별, 직종 등이 근로소득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들에서 가격효과가 수량효과를 압도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비율 증가, 대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 등도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채구묵, 2007).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큰 서구에서는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여부와 최저임금 수준 또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Dinardo(1996)는 CPS data를 이용해 1973년-1992년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킨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노조 조직률 하락과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하락 또한 임금 불평등 증가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성별로 구분할 때 여성이

최저임금 하락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reeman(1993)은 노조조직율의 하락이 생산직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의 상대적인 임금하락을 가져와 불평등 경향을 심화시키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Horrigan(1993)은 최저임금 증가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후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유경준(1998)이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조여부가 임금불평등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수준이 노조 유무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상 노조여부 등의 제도적 요인이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학력별 임금격차의 축소 등 노동시장 수요공급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요인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형태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및 소득구성 요인의 변화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여성가구주 가구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연령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 집단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 소득불평등이 주로 노인인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2; 임병인, 2005; 여유진·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김진옥, 2002; 정의철·김진옥, 2007; Jenkins, 1995) 연령 집단 내 소득불평등 완화가 주요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 간 소득불평등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분석 자료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임병인, 2005; Mookherjee, 1982)⁸⁾.

다음으로 학력의 이질화가 노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학력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 학력의 이질화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의 학력구성이 과거 전통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이로 인해 미래의 노인 소득분배 구조는 현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1999-2005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의철·김진옥(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 연령, 취업자 수 등의 다른 변수들보다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소득불평등의 전체 소득불평등에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량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학력 집단 간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구소득을 변화시킴으로써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소득층에서 가구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고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지에 따라, 여성의 소득활동이 남성의 소득활동 행위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단순하

8) Mookherjee(1982)의 연구결과는 영국의 Family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한 Jenkins(1995)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Jenkins(1995)는 그 이유를 Mookherjee(1982)가 소득 변수로 가처분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사용하였고, micro data가 아닌 group data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Jenkins(1995) p.60 note 21 참조).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연구들도 분석의 단위나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성명재, 2004; Cancian, 1993; Danzinger, 1980; Daly, 2004),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들이 있다(Burtless, 1999; Cancian, 1999; Juhn, 1997; Lerman, 1996; Karoly, 1995). Daly(2004)는 1968-1999년의 CPS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조 변화,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감소요인임을 밝혔으며, 성명재·김종면(2004) 또한 1982-2003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맞벌이 가구의 비중을 가상적으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온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반면, Juhn(1997)의 연구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주로 고소득 계층 여성의 임금상승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Lerman(1996)과 Karoly(1995)는 남성과 여성배우자의 임금의 상관관계 증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동시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또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욱, 2002; 성명재, 2002; Lerman, 1996). Lerman(1996)은 여성가구주 가구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이 결혼하였고 부부소득이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가구주 감소가 가구소득불평등의 감소를 이끄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을 영향 요인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크며(김진욱, 2002), 여성 가구주의 증가가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성명재, 200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적 가족규범의 해체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여성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노후의 소득불평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소득원의 변화 또한 가구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쳐 왔다(김용성, 2005; 남상섭, 2005;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여유진·김태완, 2006; 유경준·김대일, 2002; 정진호, 2001; 함재봉, 2005; Lerman, 1985; Jenkins, 1995). 많은 연구결과들이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가장 크며, 근로소득의 불평등 효과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여유진·김태완, 2006; 유경준·김대일, 2002; 정진호, 2001; 함재봉, 2005). 구인회·임세희(2007)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해 1992-2002년 사이 가구소득 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남성 근로소득 분배 악화가 전체 소득불평등도 증가의 5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주 소득원의 근로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다만 소득원별로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근로소득 불평등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유경준·김대일, 2002). 남상섭(2005)은 1990년대 후반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근로소득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재산소득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소득은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함재봉, 2005; Lerman, 1991).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의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공사 이전소득과 직접세,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공사 이전소득 모두 비근로자가구와 1인가구에서 불평등도 감소효과가 컸다.

이처럼 근로소득 불평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확대 및 성장, 그리고 사적 연금시장의 발달로 인해 연금급여가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연금급여의 분배 형태에 따

라 노후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활동시의 근로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노후 자산소득의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애주기에 걸쳐 노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불평등의 장기적인 경향을 전망함에 있어 공적 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사적보장체계의 발달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의 요소소득들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별, 세대별로 이들 요소소득의 비중과 기여도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해 볼 것이다. 그러므로 거시 경제적 요인이나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나 노조가입율의 변화 등의 요인들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제3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5년 간격으로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1951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표본추출 방법 및 조사대상을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및 2006년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할 것이며, 연도에 따라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에 차이가 있다.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2인 이상 근로자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농어촌 지역의 가구와 1인 가구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평등의 정도가 실제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변수는 가구소득이며, 가구규모에 따른 경제적 상

태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OECD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하였다(3장 참조).

2. 분석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연구내용, 즉, ① 연령별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② 노후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요소소득의 영향 분석, ③ 노후소득 불평등의 장기 추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연구내용별로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별 소득불평등 현황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후소득불평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연도별, 동년배 집단별로 소득불평등의 정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연도별, 연령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2) 소득불평등 단기 변화 및 요인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노후소득불평등의 단기변화 및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86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격으로 다섯 해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은 앞서 설명한 지니계수를 이용할 것이며, 개별 독립변수가 노후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 변화율을 산출하여 개별 독립변수가 노후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경향성을 고찰할 것이다. 개별 독립변수가 노후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Lerman과 Yitzhki(1985)

그리고 Jedrzejzak(2008) 등이 사용한 지니계수 분해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3장에 기술된 바와 같다.

3) 노후소득불평등 장기 추계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노후소득불평등의 장기적인 추이를 예측하는 것이다. 노후소득불평등의 장기추계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인의 생애소득에 걸친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노후 소득불평등의 장기전망을 요소소득에 기초하여 추정할 것이다. 즉, 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요소소득 내 불평등의 변화가 20년 동안 평균적인 변화정도로 변화된다면 추후 노후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전망을 하는 것이다.

제4절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과거 20년 동안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986년의 경우는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1991년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1991년 여성가구주가 약 13%에서 2006년에는 19%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연령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급속한 노령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6년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비중은 3.43%에 불과하였으나 해마다 점차로 증가하여 2006년 12.57%로 증가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1986년에 32.51%였으나 2006년에는 14.33%로 감소한 반면, 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는 1986년에 16.86%에서 20년이 지난 2006년에는 무려 26.58%에 이르렀다.

가구주가 종사한 산업구성을 보면 교육수준이나 연령처럼 중대한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농·어업의 비중이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이 도시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가구규모를 보면 5인 이상 대가족의 비중은 급속하게 줄어든 반면 2인가구와 같이 소규모 핵가족의 형태는 급속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1986년에는 5.71%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무려 4배가 증가되어 2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5인 이상 대규모 가구의 경우는 1986년에는 53.32%이었으나 2006년에는 11.51%로 거의 5배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과거 20년에 걸쳐 여성가구주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교육수준의 향상, 서비스산업의 확대 및 가구규모의 감소로 인한 핵가족화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연도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도 변수	1986 (N=1,489)	1991 (N=1,041)	1996 (N=1,453)	2001 (N=1,633)	2006 (N=2,841)
성별					
남성	1245 (83.61)	906 (87.03)	1192 (82.04)	1302 (79.73)	2294 (80.75)
여성	244 (16.39)	135 (12.97)	261 (17.96)	331 (20.27)	547 (19.25)
나이					
40대	976 (65.55)	666 (63.98)	772 (53.13)	881 (53.95)	1543 (54.31)
50대	462 (31.03)	315 (30.26)	512 (35.24)	573 (35.09)	941 (33.12)
60 이상	51 (3.43)	60 (5.76)	169 (11.63)	179 (10.96)	357 (12.57)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	484 (32.51)	282 (27.12)	387 (26.63)	326 (19.96)	407 (14.33)
중학교 졸	308 (20.69)	221 (21.25)	321 (22.09)	320 (19.60)	471 (16.58)
고등학교 졸	446 (29.95)	351 (33.75)	494 (34.00)	660 (40.42)	1151 (40.51)
대학교 졸	251 (16.86)	186 (17.88)	251 (17.27)	327 (20.02)	812 (28.58)
산업					
1차산업	15 (1.01)	2 (0.19)	17 (1.17)	18 (1.12)	29 (1.02)
제조업	403 (27.07)	304 (29.20)	367 (25.26)	384 (23.99)	738 (25.98)
건설업	289 (19.41)	205 (19.69)	295 (20.30)	222 (13.87)	406 (14.29)
서비스업	758 (50.91)	519 (49.86)	770 (52.99)	893 (55.78)	1664 (58.57)
기타	24 (1.61)	11 (1.06)	4 (0.28)	84 (5.25)	4 (0.14)
직종					
관리직	439 (29.48)	320 (30.74)	415 (28.56)	609 (37.29)	944 (33.23)
서비스직	280 (18.80)	182 (17.48)	131 (9.02)	34 (2.08)	318 (11.19)
생산직	736 (49.43)	529 (50.82)	903 (62.15)	948 (58.05)	1575 (55.44)
기타	34 (2.28)	10 (0.96)	4 (0.28)	42 (2.57)	4 (0.14)
가구규모					
2인 가구	85 (5.71)	86 (8.26)	218 (15.00)	344 (21.07)	669 (23.55)
3인 가구	186 (12.49)	166 (15.95)	366 (25.19)	454 (27.80)	818 (28.79)
4인 가구	424 (28.48)	381 (36.60)	571 (39.30)	581 (35.58)	1027 (36.15)
5인 이상	794 (53.32)	408 (39.19)	298 (20.51)	254 (15.55)	327 (1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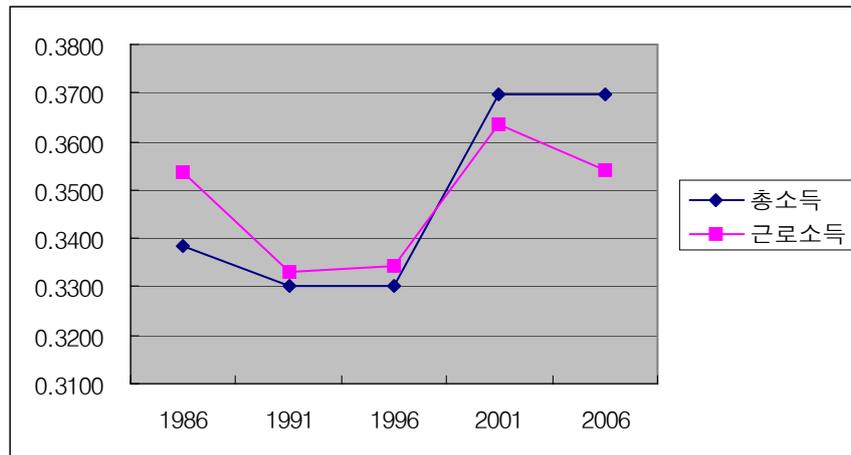
2. 소득불평등 경향 및 원인

여기서는 지난 20년간 가구소득 불평등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변화와 요소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총 가구소득의 불평등 변화 추이

지난 20년 동안 가구소득의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1]과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996년 이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총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4-1]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경향



<표 4-2>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1986~2006

	1986	1991	1996	2001	2006
총소득	0.3386	0.3301	0.3301	0.3698	0.3698
근로소득	0.3538	0.3329	0.3344	0.3633	0.3539

2) 연령별 총소득의 불평등 변화

[그림 4-2]는 조사연도에 연령별 총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노인인구의 소득불평등도가 생산인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연도에 따라 연령집단의 소득불평등도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60세 이후의 노인집단의 소득불평등도는 40대, 50대 생산인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1년도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와 2001년 56-60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도 소득불평등 정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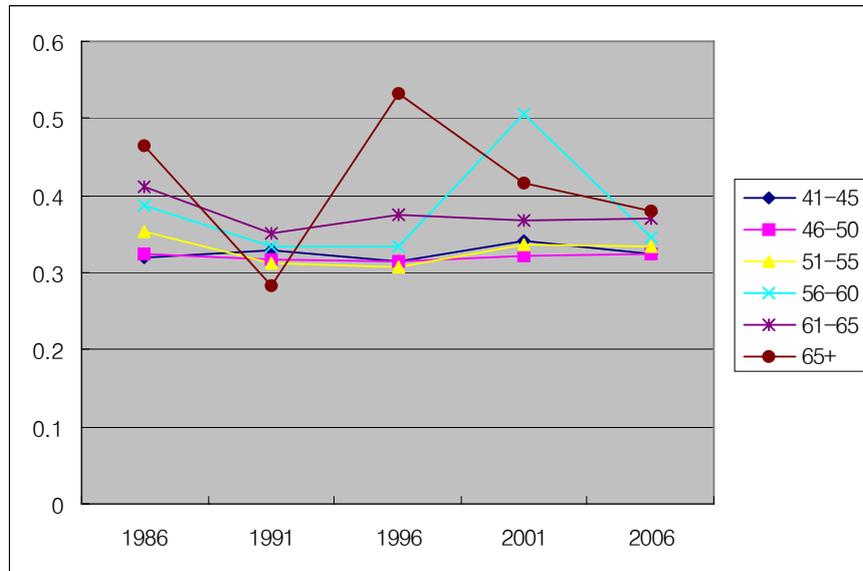
다음으로 연도별로 연령집단 간 불평등도 차이를 살펴보면 1986년에서 1996년 동안에는 감소하였다가 1996년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매 년도에 예외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았던 집단을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불평등 변화경향을 보면 61-65세 가구주의 경우는 1986년에서 1991년까지 불평등이 다소 감소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991년에 비해 불평등의 정도가 높기는 하지만 199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연령별 소득불평등도는 특정 시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시기 효과)와 동년배들 간의 소득분배의 차이(동년배 효과), 그리고

개인의 연령이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변화(연령효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2]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변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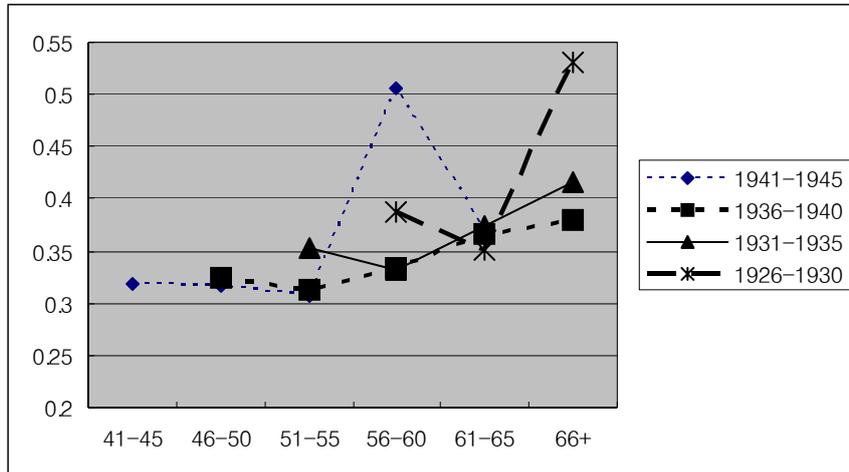
<표 4-3> 연도별, 연령별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

	1986	1991	1996	2001	2006
41-45	0.3195	0.3285	0.3134	0.3404	0.3236
46-50	0.3248	0.3164	0.3146	0.3221	0.3253
51-55	0.3535	0.3133	0.3076	0.3369	0.3346
56-60	0.3868	0.3328	0.3334	0.5057	0.3459
61-65	0.4111	0.3509	0.3744	0.3667	0.3699
65+	0.4649	0.2833	0.5315	0.4162	0.3792

3) 출생 동류집단별 불평등 변화 추이

연령효과를 시기효과 및 동년배 효과와 구분해 내기 위해 출생동류집단별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 4-3]과 같다. 몇 개의 관찰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전형적인 동류집단은 1936-1940년 사이에 출생한 동류집단으로 조사기간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다른 출생 동류집단들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독 1941-1945년 사이에 출생한 동류집단의 경우 56-60세, 즉 2001년에 즈음하여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IMF 경제 위기 시기에 52-56세 정도이어서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연령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3] 출생 동류집단별 불평등 변화 추이



<표 4-4> 출생 동류집단별의 연령별 지니계수

소득원	출생년도 연령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1921-1925	Before 1920
총소득	41-45	0.31948					
	46-50	0.31645	0.32482				
	51-55	0.30757	0.31327	0.35353			
	56-60	0.50571	0.33344	0.33279	0.38676		
	61-65	0.36986	0.36667	0.37437	0.35087	0.41106	
	66+		0.37924	0.41619	0.53147	0.2833	0.46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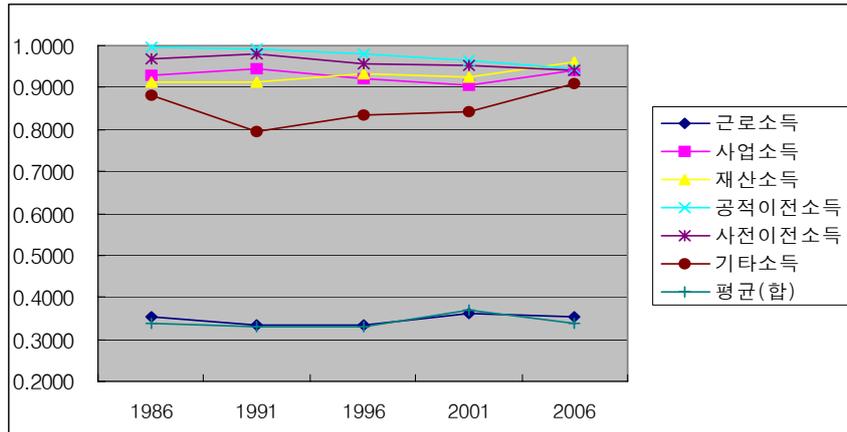
3. 소득불평등의 단기변화 및 요인

여기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변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요소소득이 불평등에 미친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요소소득의 기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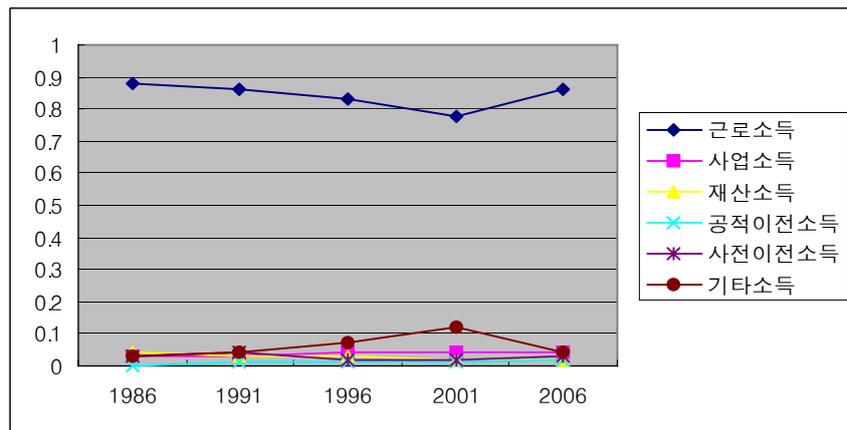
다음으로 이러한 불평등의 연도별 변화에 개별 요소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개별 요소소득의 연도별 불평등 변화경향 및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4-4]와 [그림 4-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요소소득별로 불평등의 변화경향을 보면, 총가구소득의 변화경향은 거의 근로소득의 변화경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6년 이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요소소득으로는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었다. 여기서 기타소득의 구성요소에는 기업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포함되어 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4-4] 요소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경향



한편, 요소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6년 이래 2001년까지 근로소득의 비중은 점차로 감소한 반면 기타소득의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외 비록 비중은 적지만 사업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 요소 소득의 비중 변화 경향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년도 별로 개별 요소소득이 총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요소소득별 지니상관관계(Rk), 요소소득의 지니계수(Gk), 그리고 요소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Sk)를 계산하여 개별 요소소득이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 요소 소득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는 1986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영향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의 경우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개별 불평등의 정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을 찾기 어려우나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불평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요소소득의 불평등정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1996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은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4-5> 연도별 총소득 및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분해 결과

연도	86년도	요소소득평균(원)	Rk	Gk	Sk	I/전체지니
1986	근로소득	233017	0.94	0.3538	0.88	86.34
	사업소득	7137	0.24	0.9298	0.03	1.78
	재산소득	9286	0.50	0.9132	0.04	4.77
	공적이전소득	484	0.29	0.9949	0.00	0.16
	사적이전소득	6739	0.44	0.9678	0.03	3.19
	기타소득	7244	0.53	0.8810	0.03	3.77
	평균(합)	263907		0.3386		100.00
1991	근로소득	491506	0.93	0.3329	0.86	80.10
	사업소득	15853	0.43	0.9438	0.03	3.42
	재산소득	17692	0.50	0.9142	0.03	4.24
	공적이전소득	2889	0.36	0.9907	0.01	0.55
	사적이전소득	21042	0.63	0.9788	0.04	6.87
	기타소득	23887	0.48	0.7933	0.04	4.82
	평균(합)	572870		0.3301		100.00
1996	근로소득	1139378	0.91	0.3344	0.83	76.95
	사업소득	51331	0.38	0.9202	0.04	4.00
	재산소득	41855	0.57	0.9319	0.03	4.92
	공적이전소득	9921	0.30	0.9820	0.01	0.65
	사적이전소득	25320	0.21	0.9558	0.02	1.11
	기타소득	99313	0.67	0.8356	0.07	12.38
	평균(합)	1367118		0.3301		100.00
2001	근로소득	1343280	0.91	0.3633	0.78	69.71
	사업소득	74911	0.38	0.9047	0.04	4.07
	재산소득	39372	0.44	0.9262	0.02	2.52
	공적이전소득	13579	0.05	0.9637	0.01	0.11
	사적이전소득	40814	0.33	0.9508	0.02	2.01
	기타소득	211120	0.77	0.8418	0.12	21.59
	평균(합)	1723075		0.3698		100.00
2006	근로소득	1726247	0.92	0.3539	0.86	82.82
	사업소득	78939	0.52	0.9400	0.04	5.69
	재산소득	31668	0.56	0.9597	0.02	2.48
	공적이전소득	36979	0.11	0.9432	0.02	0.54
	사적이전소득	51974	0.26	0.9415	0.03	1.87
	기타소득	77450	0.64	0.9102	0.04	6.59
	평균(합)	2003258		0.3399		100.00

2) 연령집단별 개별 요소소득의 지니분해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라 개별 요소소득의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 4-6> 및 <표 4-7>과 같다.

먼저, 연령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면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은 집단의 불평등도가 근로연령의 불평등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연도 내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시기별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 혹은 중·고령자의 불평등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은 노인의 경우에 가장 불평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과거 보다는 최근 들어 불평등 정도가 더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는 노인과 중·고령자 집단에서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요소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그 영향이 고연령층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에 따른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시기 및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재산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층에 있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이전의 경우도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 및 중·고령자 집단의 소득불평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적이전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6> 연령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요소소득	연령	연도				
		1986	1991	1996	2001	2006
근로소득	41-45	0.3328	0.3025	0.3230	0.3356	0.3370
	46-50	0.3407	0.3287	0.3236	0.3267	0.3295
	51-55	0.3719	0.3216	0.3099	0.3543	0.3383
	56-60	0.4233	0.3822	0.3381	0.4243	0.3493
	61-65	0.3778	0.4249	0.3870	0.3785	0.4181
	65+	0.4001	0.3822	0.4244	0.4465	0.4086
사업소득	41-45	0.9264	0.9489	0.9396	0.9229	0.9388
	46-50	0.9251	0.9360	0.8959	0.9095	0.9422
	51-55	0.9303	0.9426	0.9022	0.8821	0.9285
	56-60	0.9322	0.8995	0.9220	0.8841	0.9499
	61-65	-	0.9428	0.9501	0.8916	0.9286
	65+	-	0.0000	0.9337	0.8531	0.9416
재산소득	41-45	0.9177	0.9315	0.9412	0.9668	0.9757
	46-50	0.9100	0.8982	0.9296	0.9252	0.9570
	51-55	0.9123	0.8816	0.9072	0.8803	0.9573
	56-60	0.8972	0.9037	0.9339	0.9127	0.9430
	61-65	0.8219	0.8985	0.9391	0.8772	0.9334
	65+	0.8889	0.9086	0.8330	0.8829	0.9215
공적이전	41-45	0.9944	0.9955	0.9837	0.9817	0.9591
	46-50	0.9957	0.9889	0.9919	0.9747	0.9661
	51-55	0.9950	0.9868	0.9847	0.9678	0.9668
	56-60	0.9886	0.9604	0.9679	0.9559	0.9095
	61-65	0.9643	0.0000	0.9531	0.8938	0.8277
	65+	-	0.0000	0.9150	0.6347	0.8340
사적이전	41-45	0.9827	0.9919	0.9700	0.9564	0.9499
	46-50	0.9679	0.9689	0.9726	0.9742	0.9529
	51-55	0.9510	0.9587	0.9455	0.9555	0.9583
	56-60	0.9181	0.9246	0.9324	0.9137	0.9349
	61-65	0.9093	0.8057	0.9324	0.8650	0.8198
	65+	0.7365	0.8170	0.8024	0.9098	0.8640
기타 소득	41-45	0.8790	0.7537	0.7995	0.7862	0.9188
	46-50	0.8816	0.8373	0.7959	0.7791	0.9156
	51-55	0.8906	0.8239	0.8361	0.7564	0.9174
	56-60	0.8608	0.7610	0.8309	0.9231	0.8730
	61-65	0.7703	0.7254	0.8559	0.7787	0.9197
	65+	0.7250	0.6610	0.9457	0.7914	0.7731

<표 4-7> 연령별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비중 변화

요소소득	연령 연도	1986	1991	1996	2001	2006
근로소득	41-45	0.8920	0.8456	0.8789	0.8166	0.8810
	46-50	0.8946	0.8860	0.8455	0.8361	0.8760
	51-55	0.8649	0.8672	0.8248	0.8399	0.8691
	56-60	0.8740	0.8185	0.7950	0.6231	0.8558
	61-65	0.8001	0.8461	0.7861	0.6146	0.7493
	65+	0.7244	0.8030	0.5314	0.5738	0.6858
사업소득	41-45	0.0288	0.0274	0.0290	0.0433	0.0399
	46-50	0.0281	0.0225	0.0497	0.0419	0.0413
	51-55	0.0260	0.0371	0.0336	0.0425	0.0441
	56-60	0.0254	0.0315	0.0399	0.0314	0.0239
	61-65	0.0000	0.0094	0.0351	0.0740	0.0507
	65+	0.0000	0.0000	0.0408	0.0944	0.0228
재산소득	41-45	0.0337	0.0269	0.0200	0.0124	0.0073
	46-50	0.0345	0.0341	0.0238	0.0286	0.0140
	51-55	0.0339	0.0236	0.0335	0.0283	0.0140
	56-60	0.0355	0.0564	0.0503	0.0216	0.0331
	61-65	0.0516	0.0204	0.0465	0.0397	0.0324
	65+	0.1883	0.0174	0.0509	0.0327	0.0380
공적이전	41-45	0.0177	0.0589	0.0135	0.0299	0.0216
	46-50	0.0151	0.0129	0.0184	0.0140	0.0254
	51-55	0.0424	0.0176	0.0198	0.0142	0.0207
	56-60	0.0318	0.0384	0.0185	0.0227	0.0206
	61-65	0.1156	0.0711	0.0300	0.0576	0.0404
	65+	0.0807	0.0958	0.0357	0.0572	0.1249
사적이전	41-45	0.0177	0.0589	0.0135	0.0299	0.0216
	46-50	0.0151	0.0129	0.0184	0.0140	0.0254
	51-55	0.0424	0.0176	0.0198	0.0142	0.0207
	56-60	0.0318	0.0384	0.0185	0.0227	0.0206
	61-65	0.1156	0.0711	0.0300	0.0576	0.0404
	65+	0.0807	0.0958	0.0357	0.0572	0.1249
기타 소득	41-45	0.0265	0.0407	0.0513	0.0946	0.0388
	46-50	0.0264	0.0389	0.0604	0.0752	0.0346
	51-55	0.0304	0.0480	0.0855	0.0675	0.0400
	56-60	0.0308	0.0349	0.0840	0.2907	0.0366
	61-65	0.0201	0.0530	0.0767	0.1785	0.0550
	65+	0.0065	0.0838	0.3170	0.2061	0.0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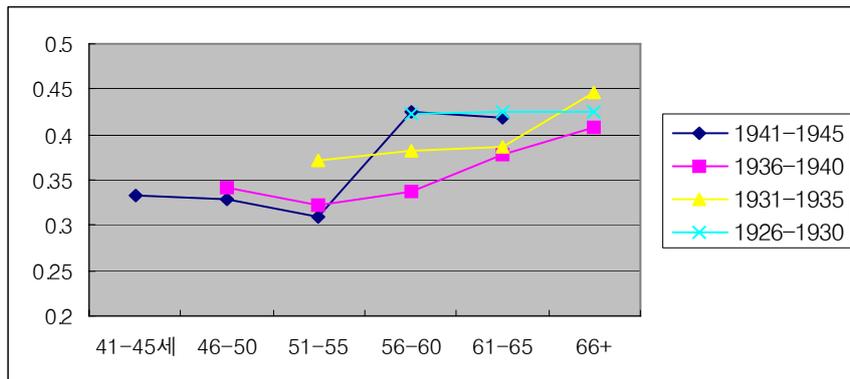
3) 출생동류집단별 개별 요소소득의 지니 분해

앞의 연령별 지니 분해는 연령의 효과(age effect)와 조사 시기의 효과(period effect)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생동류집단별로 요소소득의 지니 분해를 하였다.

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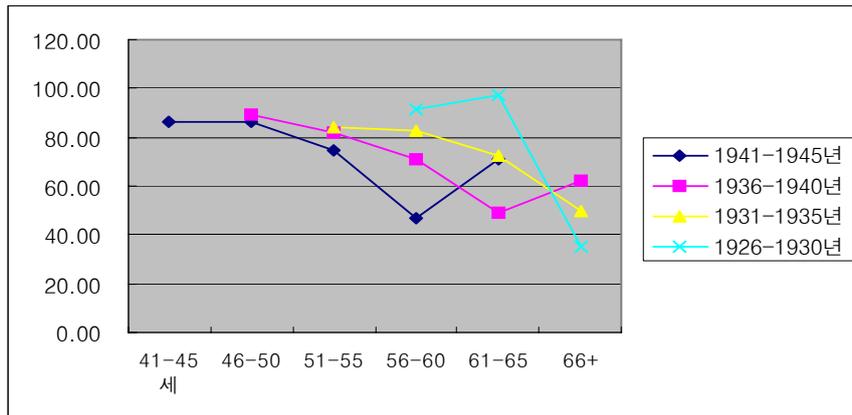
출생동류집단별로 근로소득의 동류집단별 불평등 변화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동류집단 내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출생동류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1996년까지는 최근 동류집단의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가 과거 동류집단의 불평등 정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 IMF 외환 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이었던 1941-45년에 출생한 동류집단들의 근로소득불평등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여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4-6] 출생 동류집단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



한편,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비중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동류집단에 걸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41-45년 출생 동류집단과 1936-40년 출생 동류집단의 경우는 노인시기에 이르러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동류집단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점차로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생동류집단별 분석에서 또 다른 특징은 과거 출생동류집단에 비해 최근 출생동류집단들에게 있어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56-60세 시기의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1941-45년에 출생한 동류집단의 경우 근로소득 불평등은 전체 소득불평등의 약 47% 정도를 설명하는 반면에 과거 출생동류집단으로 갈수록 그 비중은 점점 증대하여 1926-30년에 출생한 동류집단의 경우는 무려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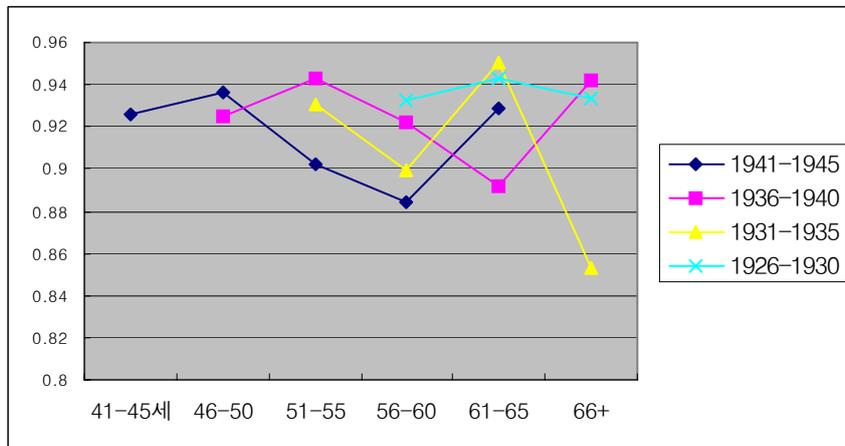
[그림 4-7] 출생 동류집단별 근로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② 사업소득

[그림 4-8]은 동류집단별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동류 집단 간에 일정한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득은 오히려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2001년에는 사업소득의 불평등도가 모든 동류집단에 걸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업소득의 증대로 인한 현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사시기별로 보면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는 1931-35년에 출생한 동류집단을 제외한 모든 동류집단에서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 다시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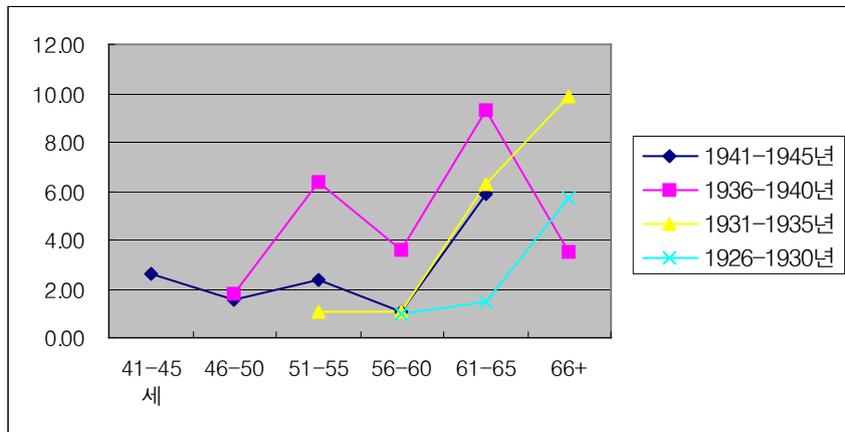
[그림 4-8] 출생 동류집단별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모든 동류집단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출생한 두 동류집단을 비교해보면 사업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6-40년에 출생한 동류집단에 비해 1941-45년 출생한 동류집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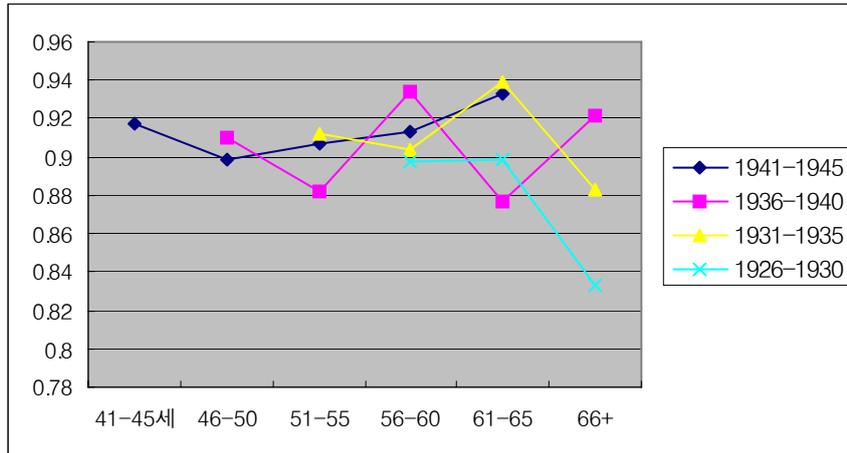
[그림 4-9] 출생 동류집단별 사업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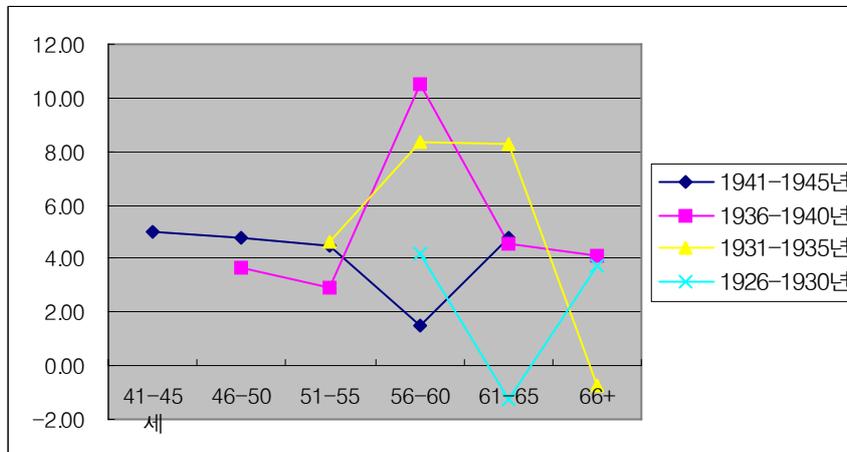
③ 재산소득

재산소득의 동류집단별 불평등 경향도 일정한 유형을 찾기 어려우며,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도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가장 최근 출생 동류집단인 1941-45년생의 경우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보다 5년 내지 10년 전에 출생한 동류집단의 경우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동류집단에 따른 차이이기 보다는 조사 시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6년에는 높았다가 1991년에는 낮아지고 다시 1996년에는 높아졌다가 2001년에는 낮아지는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도 출생동류집단에 따른 일정한 유형이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4-10] 출생 동류집단별 재산소득의 불평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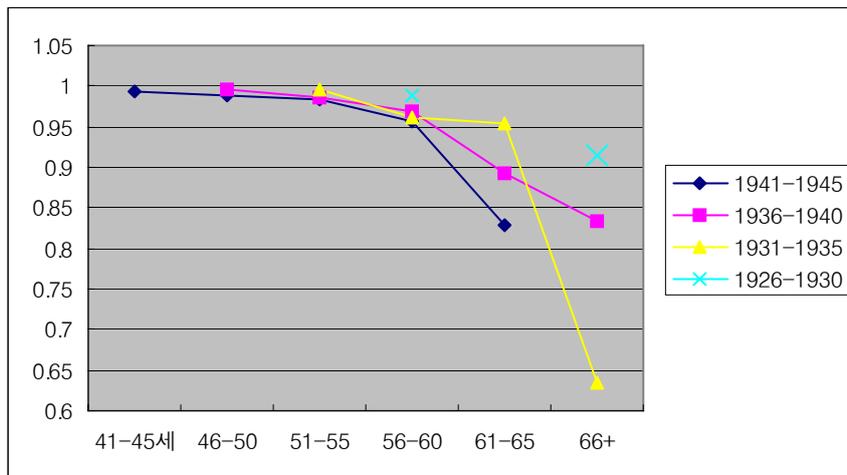
[그림 4-11] 출생 동류집단별 사업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④ 공적이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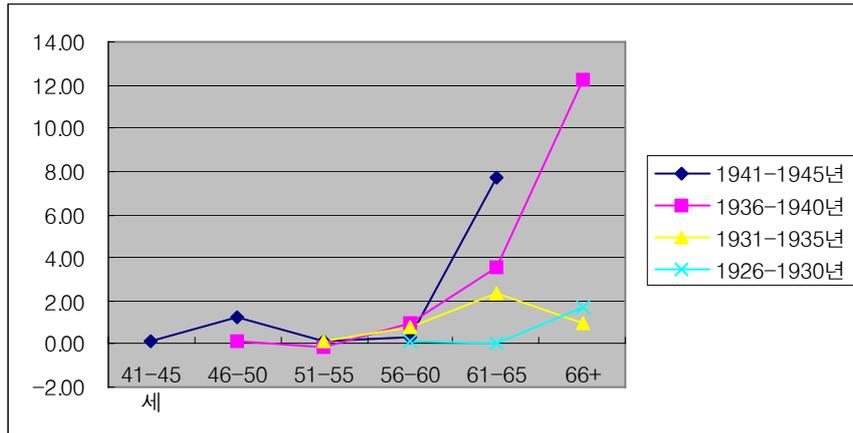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출생 동류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동류집단에 걸쳐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감소 경향은 66세 이상 연령 집단일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근로활동 기간에는 출생 동류집단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61세 이후에 들어 불평등의 정도에 동류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출생동류집단별 공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다음으로 이러한 공적 이전의 소득분배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61세 이후에 모든 동류집단에 걸쳐 그 비중의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동류집단별로 비교하면 최근에 출생한 동류집단의 경우가 오래전에 출생한 동류집단에 비해 공적이전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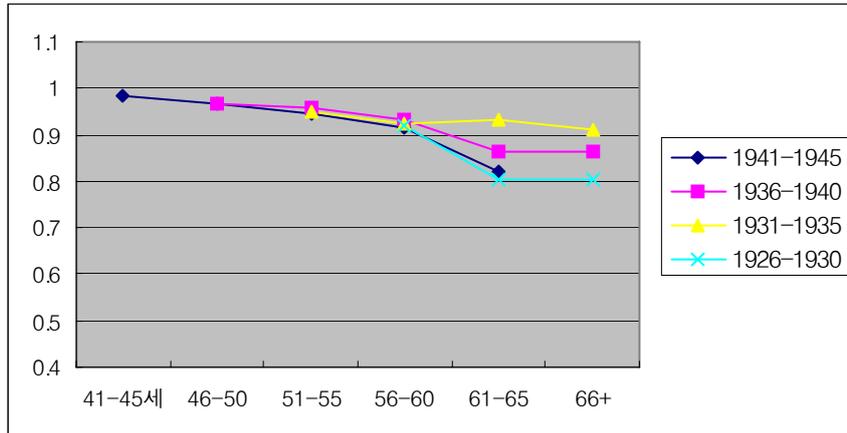
[그림 4-13] 출생동류집단별 공적이전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⑤ 사적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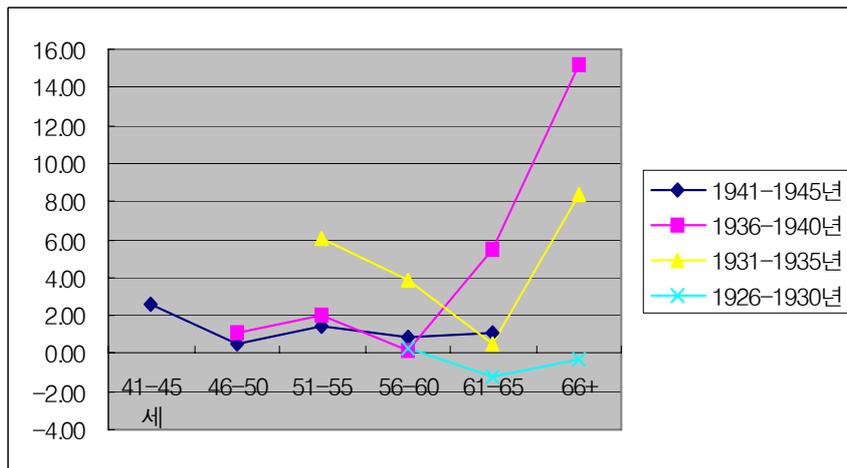
출생 동류집단별로 사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출생 동류집단에 걸쳐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의 변화는 근로시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노령기에 접어들어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동류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0세 이후에는 1931-35년 출생 동류집단의 경우에 사적이전의 불평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926-30년 출생 동류집단의 경우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출생동류집단별 사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한편, 사적이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출생동류집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비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1936-40년 출생 동류집단의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영향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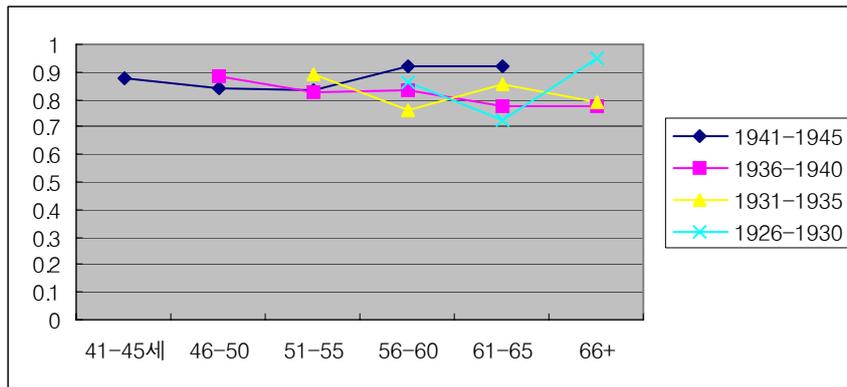
[그림 4-15] 출생동류집단별 사적이전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⑥ 기타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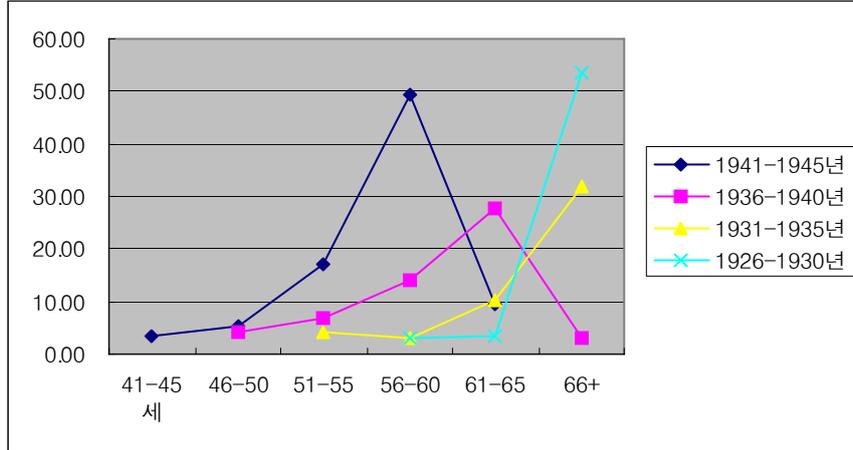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타 소득의 전체 불평등은 시기별로 점차로 증대되는 경향이었으나 이를 출생 동류집단별로 보면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직 1941-45년 출생 동류집단의 경우만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출생 동류집단의 경우는 기타 소득의 불평등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4-16] 출생동류집단별 기타 소득의 불평등 변화



한편, 기타 소득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들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타 소득의 주요 항목에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1년까지는 퇴직금과 반환일시금의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불평등 정도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퇴직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의 대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전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17] 출생동류집단별 기타 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중변화



<표 4-8> 출생코호트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소득원	출생년도 연령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1921-1925	Before 1920
근로소득	41-45세	0.33283					
	46-50	0.32874	0.34069				
	51-55	0.30985	0.32159	0.37187			
	56-60	0.42429	0.33807	0.38221	0.42327		
	61-65	0.41806	0.37853	0.38704	0.4249	0.3778	
	66+		0.40862	0.44651	0.42444	0.38218	0.40013
사업소득	41-45세	0.92638					
	46-50	0.93603	0.92508				
	51-55	0.90223	0.94263	0.93027			
	56-60	0.88412	0.92198	0.8995	0.93218		
	61-65	0.92855	0.8916	0.95013	0.94277	-	
	66+		0.94159	0.85314	0.93372	-	-

<표 4-8> 계속

소득원	출생년도 연령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1921-1925	Before 1920
재산소득	41-45세	0.91765					
	46-50	0.89815	0.91004				
	51-55	0.90715	0.88161	0.91231			
	56-60	0.91273	0.93385	0.90374	0.89723		
	61-65	0.93338	0.87721	0.93909	0.89845	0.82191	
	66+		0.92153	0.88291	0.83304	0.9086	0.88889
공적이전 소득	41-45세	0.99435					
	46-50	0.98885	0.9957				
	51-55	0.98466	0.98679	0.99499			
	56-60	0.95587	0.96785	0.96039	0.98864		
	61-65	0.82769	0.89383	0.95305	-	0.96429	
	66+		0.83404	0.63465	0.91498	-	-
사적이전 소득	41-45세	0.98271					
	46-50	0.96891	0.9679				
	51-55	0.94546	0.95866	0.95102			
	56-60	0.91372	0.93235	0.92456	0.91809		
	61-65	0.81975	0.86499	0.93235	0.80568	0.90927	
	66+		0.86397	0.9098	0.80236	0.81699	0.73647
기타소득	41-45세	0.87901					
	46-50	0.83729	0.88155				
	51-55	0.83607	0.82392	0.89055			
	56-60	0.92309	0.83094	0.76095	0.86081		
	61-65	0.91972	0.77871	0.85591	0.72535	0.7703	
	66+		0.77311	0.7914	0.9457	0.66103	0.72502

<표 4-9> 출생 코호트별 요소소득의 비중변화

소득원	출생년도 연령	1941-1945년	1936-1940년	1931-1935년	1926-1930년	1921-1925년	1920년 이전
근로 소득	41-45세	86.07					
	46-50	86.48	89.08				
	51-55	74.54	82.11	84.09			
	56-60	46.90	70.80	83.00	91.36		
	61-65	71.06	49.26	72.28	97.60	69.69	
	66+		61.96	49.56	35.34	95.90	56.28
사업 소득	41-45세	2.59					
	46-50	1.59	1.83				
	51-55	2.39	6.39	1.08			
	56-60	1.04	3.55	1.08	0.99		
	61-65	5.91	9.27	6.31	1.45	0.00	
	66+		3.51	9.86	5.73	0.00	0.00
재산 소득	41-45세	5.00					
	46-50	4.81	3.66				
	51-55	4.48	2.88	4.62			
	56-60	1.53	10.52	8.34	4.17		
	61-65	4.77	4.56	8.29	-1.22	7.04	
	66+		4.11	-0.75	3.77	-5.21	36.01
공적 이전 소득	41-45세	0.11					
	46-50	1.23	0.11				
	51-55	0.12	-0.11	0.14			
	56-60	0.32	0.97	0.77	0.12		
	61-65	7.68	3.51	2.33	0.00	1.21	
	66+		12.26	0.96	1.74	0.00	0.00
사적 이전 소득	41-45세	2.63					
	46-50	0.46	1.05				
	51-55	1.40	1.98	6.01			
	56-60	0.81	0.14	3.81	0.25		
	61-65	1.03	5.49	0.53	-1.18	20.42	
	66+		15.18	8.33	-0.28	9.96	7.41

<표 4-9> 계속

소득원	출생년도 연령	1941-1945년	1936-1940년	1931-1935년	1926-1930년	1921-1925년	1920년 이전
기타 소득	41-45세	3.59					
	46-50	5.44	4.26				
	51-55	17.07	6.75	4.06			
	56-60	49.38	14.01	2.99	3.10		
	61-65	9.55	27.89	10.26	3.36	1.64	
	66+		2.98	32.04	53.71	-0.65	0.31

4. 노후소득불평등 장기 추계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소득의 불평등 정도 및 그 기여하는 정도가 지속될 경우에 향후 노후 소득불평등의 경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장기적인 전망을 시도해 보았다. 노후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은 연도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요소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20년 동안 변화된 평균 증감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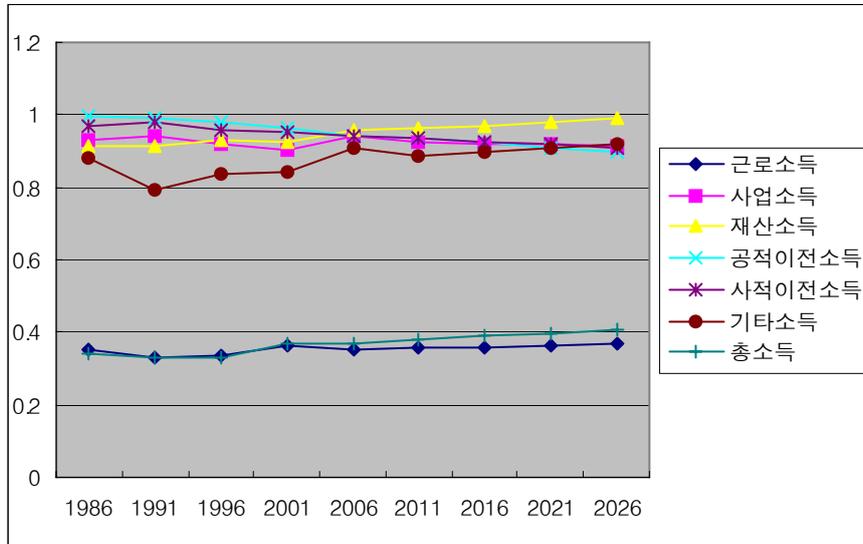
1) 연도별 전망

개별 요소소득의 불평등이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의 평균 증감에 기초하여 추정된 향후 20년간의 각 요소소득 및 총소득의 불평등 변화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 소득의 장기전망을 살펴보면, 소득분배구조가 향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을 개별 요소소득의 분배와 영향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면, 요소소득 중에서 재산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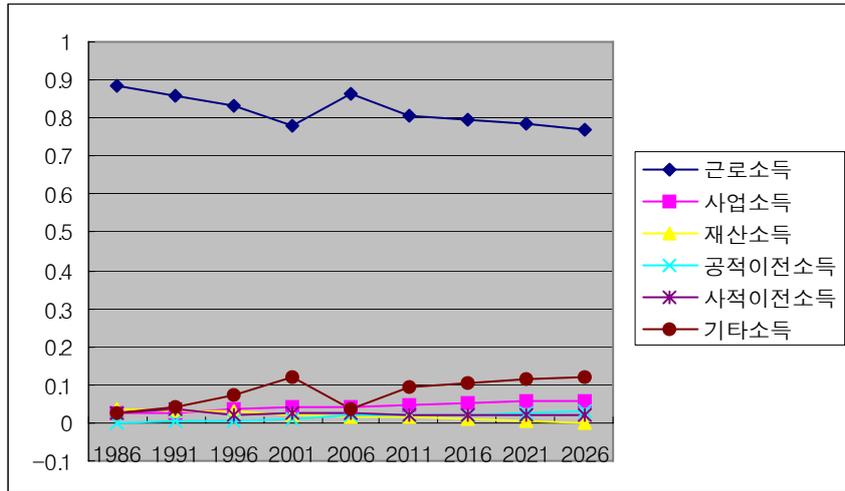
로소득, 사업소득 및 사적 이전 소득의 장기적인 불평등 경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요소소득 및 총소득의 불평등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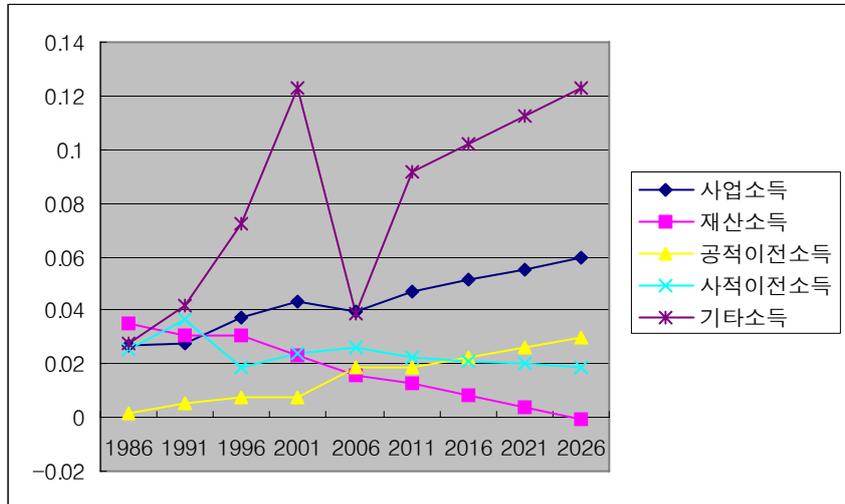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요소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근로소득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영향력 정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적이전 소득의 영향력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19] 요소소득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1



[그림 4-20] 요소소득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2



<표 4-10>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및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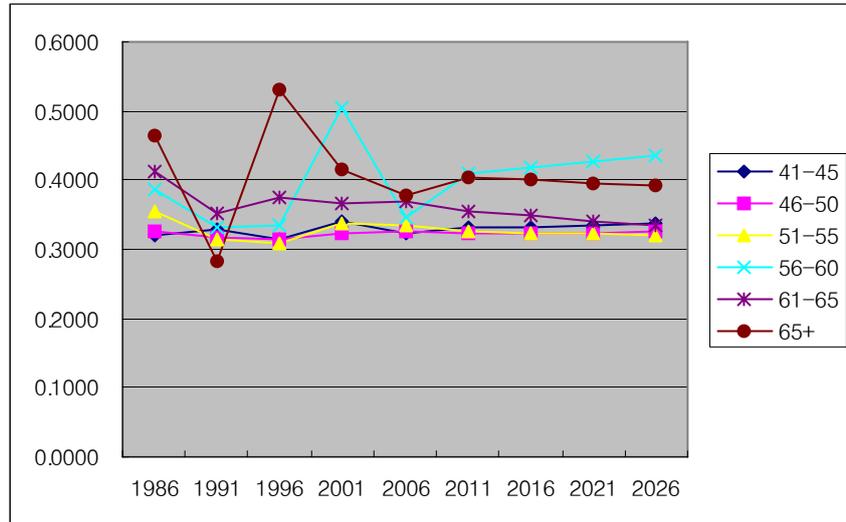
지니계수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2021	2026
근로소득	0.3538	0.3329	0.3344	0.3633	0.3539	0.3569	0.3599	0.3630	0.3661
사업소득	0.9298	0.9438	0.9202	0.9047	0.9400	0.9221	0.9202	0.9183	0.9164
재산소득	0.9132	0.9142	0.9319	0.9262	0.9597	0.9606	0.9711	0.9816	0.9921
공적이전	0.9949	0.9907	0.9820	0.9637	0.9432	0.9358	0.9228	0.9097	0.8967
사적이전	0.9678	0.9788	0.9558	0.9508	0.9415	0.9347	0.9266	0.9185	0.9105
기타소득	0.8810	0.7933	0.8356	0.8418	0.9102	0.8845	0.8952	0.9059	0.9166
총소득	0.3386	0.3301	0.3301	0.3698	0.3698	0.3783	0.3885	0.3987	0.4090
비중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2021	2026
근로소득	0.8830	0.8580	0.8334	0.7796	0.8617	0.8069	0.7948	0.7827	0.7706
사업소득	0.0270	0.0277	0.0375	0.0435	0.0394	0.0472	0.0512	0.0553	0.0593
재산소득	0.0352	0.0309	0.0306	0.0228	0.0158	0.0130	0.0084	0.0037	-0.0010
공적이전 소득	0.0018	0.0050	0.0073	0.0079	0.0185	0.0189	0.0225	0.0261	0.0297
사적이전 소득	0.0255	0.0367	0.0185	0.0237	0.0259	0.0224	0.0212	0.0200	0.0187
기타소득	0.0274	0.0417	0.0726	0.1225	0.0387	0.0916	0.1019	0.1122	0.1225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개별 요소소득 불평등의 변화와 이들이 미치는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여 총 소득 불평등의 장기전망을 보면, 2011년까지의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다가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연령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전망

소득 불평등의 장기적인 경향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의 소득불평등은 비록 미미하지만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과 중·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6-60세 연령집단의 경우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불평등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21]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경향



<표 4-11>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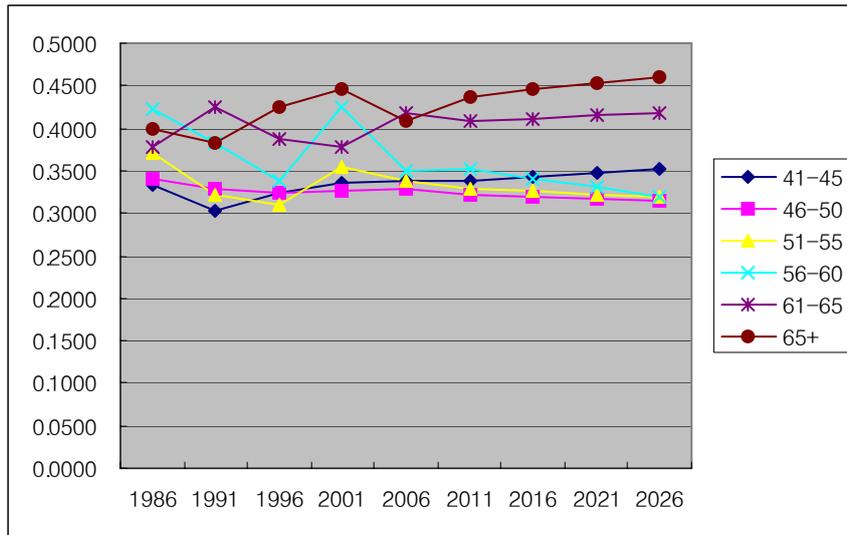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2021	2026
41-45	0.3195	0.3285	0.3134	0.3404	0.3236	0.3312	0.3332	0.3352	0.3372
46-50	0.3248	0.3164	0.3146	0.3221	0.3253	0.3226	0.3232	0.3239	0.3245
51-55	0.3535	0.3133	0.3076	0.3369	0.3346	0.3249	0.3235	0.3220	0.3206
56-60	0.3868	0.3328	0.3334	0.5057	0.3459	0.4083	0.4174	0.4265	0.4356
61-65	0.4111	0.3509	0.3744	0.3667	0.3699	0.3546	0.3479	0.3413	0.3346
65+	0.4649	0.2833	0.5315	0.4162	0.3792	0.4035	0.3997	0.3958	0.3920

이러한 전체적인 불평등 변화경향에 개별 요소소득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자.

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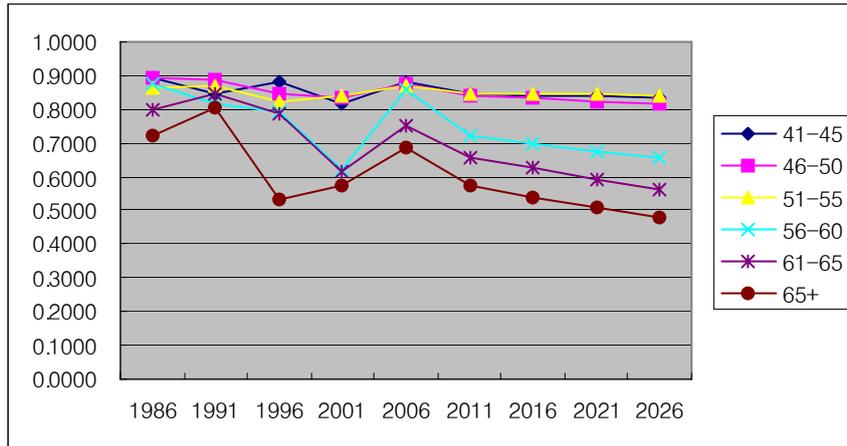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연령집단별로 장기전망을 해보면 아래 [그림 4-22]와 같이 나타난다. 근로 연령층인 40대, 50대 연령집단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노인 혹은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2] 연령집단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경향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집단과 중고령층인 61-65세 집단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인구층의 경우는 영향력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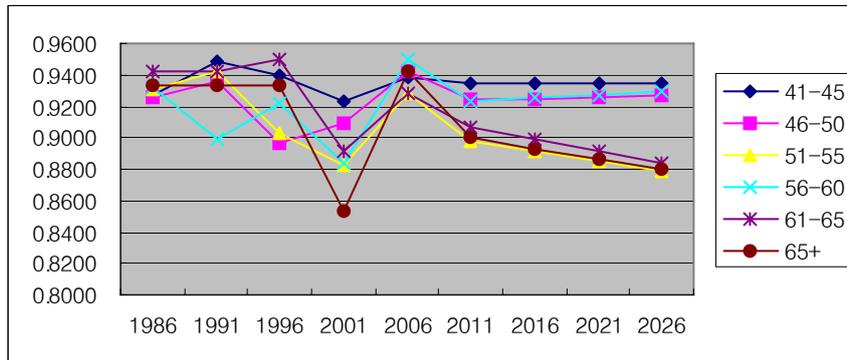
[그림 4-23] 근로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연령집단별)



② 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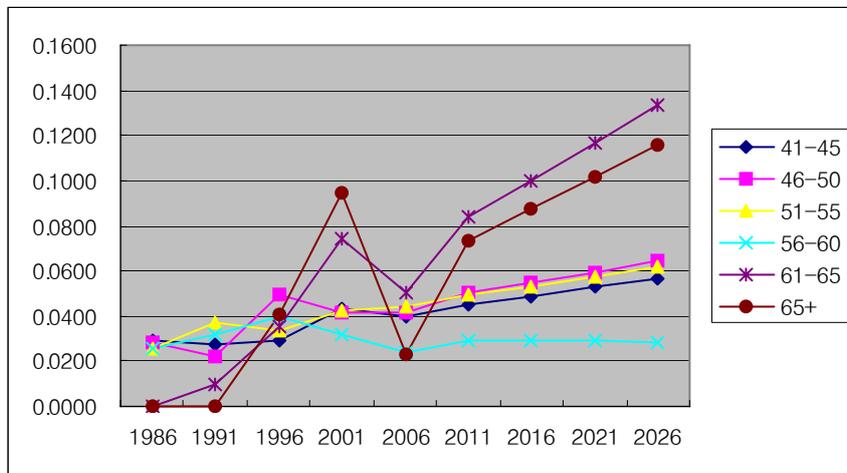
사업소득의 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노인 및 중·고령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동일한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24]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그리고 사업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노인 및 중고령층의 경우에 그 증가 속도가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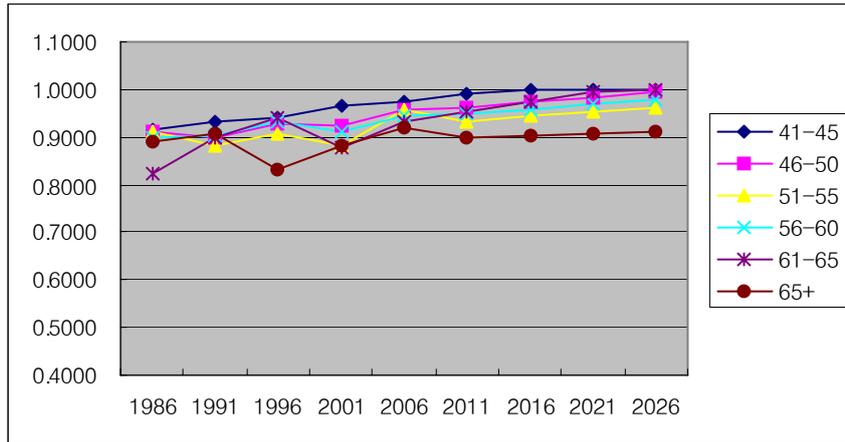
[그림 4-25] 사업소득이 총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연령집단별)



③ 재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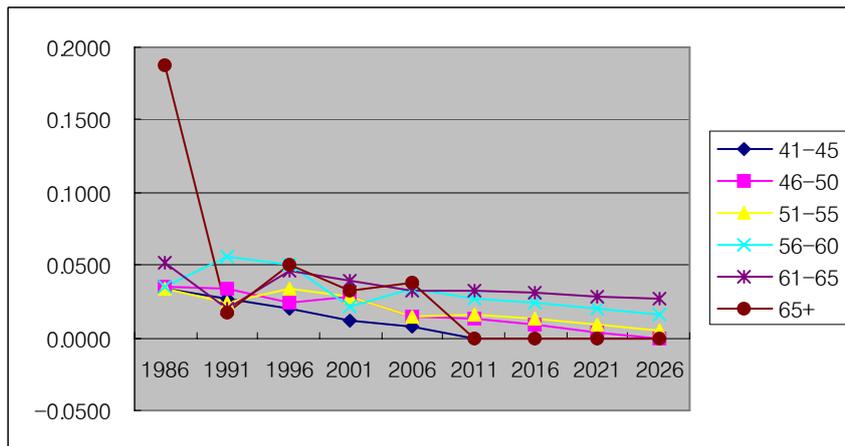
재산소득의 불평등 경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른 요소소득에 비해 크다란 변화는 없으나 점차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층 보다는 근로연령층의 재산소득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26] 재산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한편, 재산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 걸쳐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 감소는 근로연령층의 경우에 보다 급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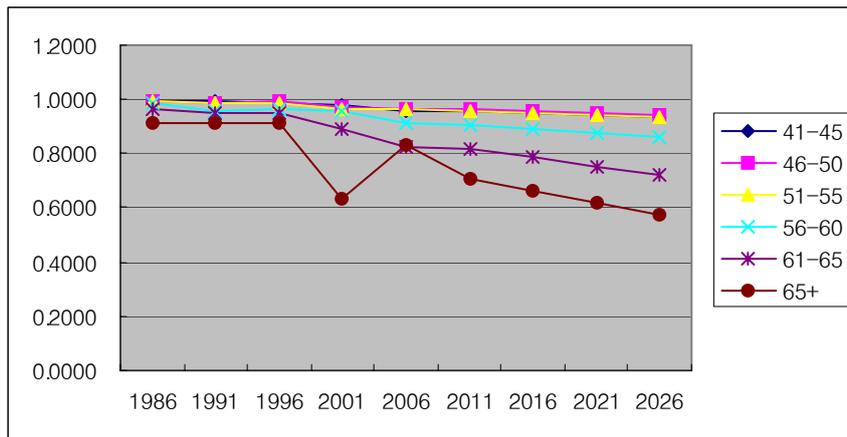
[그림 4-27] 재산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연령집단별)



④ 공적이전

공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공적이전 제도의 확대에 의해 장기적으로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연령집단별로 보면, 특히 노인 및 중·고령자들의 경우에 가장 크게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노인 및 중·고령자에 비해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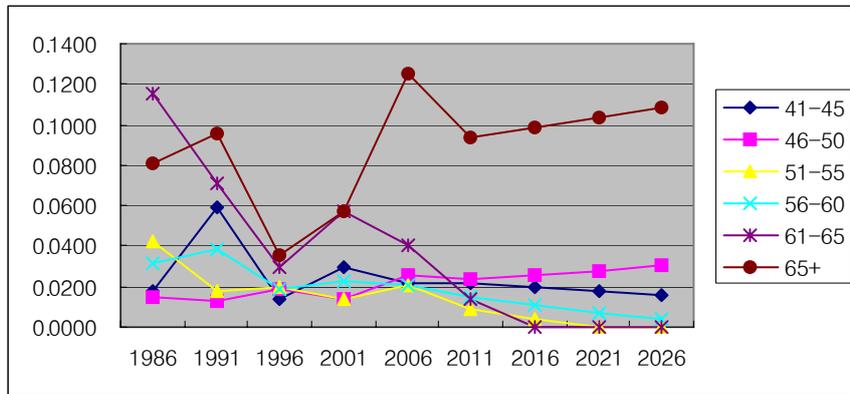
[그림 4-28]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이러한 공적이전의 불평등 경향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영향력이 매우 급속하게 빨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적이전의 영향력 증대는 노인 및 중고령층에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조금씩 그 영향력이 증가하기는 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적이전 분배가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을 제외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사적이전의 영향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적이전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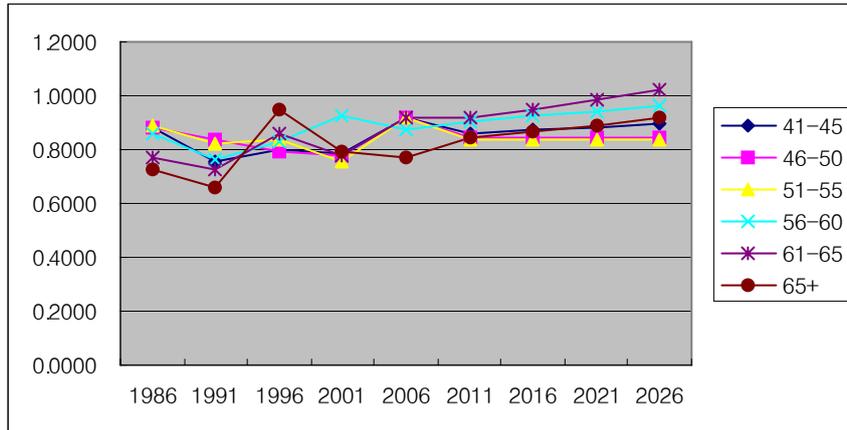
[그림 4-31] 사적이전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연령집단별)



⑥ 기타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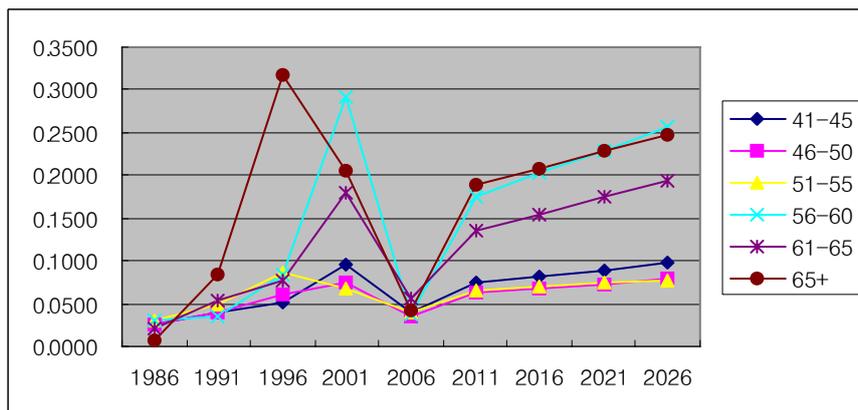
기타 소득의 장기적인 불평등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나 노인과 중·고령자의 경우는 비록 미미하기는 하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32] 기타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



한편, 기타 소득의 분배가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영향력의 증가는 노인과 중고령층에서 크게 나타나며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33] 기타소득이 총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경향(연령집단별)



제5절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가구소득의 과거 변화 경향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불평등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불평등이 증대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인집단의 불평등이 근로연령층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시기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출생동류집단별 소득불평등 추이를 살펴보아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20년간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불평등에 개별 요소소득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의 전반적 경향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형태를 지배함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불평등 경향은 거의 전체 소득과 동일하나 최근에 들어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다소 감소한 반면 총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200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요소소득으로는 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었다. 특히 기타 소득의 경우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는 점차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이전의 경우는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집단별로 개별요소소득의 영향을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경우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시기별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 혹은 중·고령자의 불평등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은 노인의 경우에 가장 불평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과거 보다는 최근 들어 불평등 정도가 더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는 노인과 중·고령자 집단에서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및 전체 소득불평등에서의 영향 정도는 출생동류집단별 분석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총소득의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연령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불평등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노인과 중·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요소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거의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인 및 중·고령자 집단의 경우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불평등이 증대되고 노인층의 경우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나 특히 노인층에서 증대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의 재산소득 불평등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그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의 경우는 불평등의 정도가 감소할 것이며, 특히 노인 및 중·고령자의 경우에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적이전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노인의 경우에는 불평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도 노인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하

나 그 외 연령층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대체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며 노인층에게서 아주 미미한 수준의 불평등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그 영향력도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밝혀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된 지난 20년간의 <도시가계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변수의 제약으로 인해 이미 언급하였듯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변수와 같은 다양한 설명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 추정을 함에 있어서도 요소소득의 불평등도와 기여도에 기초한 단순한 평균변화 정도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다 정밀한 장기전망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변인들이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 분석

제1절 서론

지금까지 불평등 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분석은 소득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소득의 불평등을 특정한 수치로 제시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은 불평등이 하나의 수치로서 대변되는 사회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지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평등의 문제를 분배구조의 특수한 형태이자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고 구성되는 사회적 실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비는 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소비는 소득과 일상생활 세계를 매개하는 고리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소득의 실현이자 동시에 개인 및 가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에 따른 특정 생활양식의 표현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의 이런 특성에 주목해, 소비를 경제적 복지(economic welfare)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소비는 노년기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더욱 유용한 수단으로 등장하는데 노년기에는 근로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복지의 충족에 있어 소득보다 실제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의 관점에서 노년기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대부분 소득 측면의 노인 빈곤(최현수·류연규, 2003; 석재은·김태완, 2000)에 관심을 두고 있다. 소비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소수 존재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일 소득구간내에서 노인가구의 소비양극화가 심각하다(김학주, 200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노인 소비가 소득의 분포와는 다르게 가지는 특수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비노인과 노인가구의 비교에 초점이 있어 노인집단 내부의 이질성과 불평등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의 불평등 구조를 소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한편, 소비를 중심으로 불평등 분석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한 가지는 소비의 총량적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생활양식으로서 소비 구조의 간극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듯 소비 중심의 분석이 이중적 측면을 갖는 이유는 소비가 가지는 이중성 때문인데, 즉, ‘소비지출’로 보았을 때 소비는 다분히 양적 개념인 반면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선호에 따른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의 표현으로 간주했을 때는 다분히 질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가 갖는 이러한 이중성에 주목하며,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를 총량적 측면과 생활양식의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여기서는 소비 불평등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노년기 소비의 총량적 불평등의 양상과 노년기 소비생활양식 유형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노년기 소비의 총량적 불평등의 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도 변화 추이는 시계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2]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대한 각 소비 비목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년기 소비생활양식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1] 노인가구의 소비생활 양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2] 노인가구의 소비생활양식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총량적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1998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횡단면적 차원에서 소비생활양식의 유형화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9차년도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노동패널 데이터 활용 이유에 대해서는 3장 참조).

3. 주요 개념의 정의

가. 총소비지출 불평등

본 분석에서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양적 측면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인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측정은 가장 일반화된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를 사용할 것이다.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로렌츠(Lorenz)가 고안한 로렌츠곡선의 측면에서이다. 이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정렬한 인구의 비율이 횡축을 나타내고, 인구의 하위 x%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비율이 종축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절대적 평등

선(사선)과 로렌즈곡선간의 차이의 비율이다. 이를 계산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 평균편차의 절반 (1/2)이 된다.

$$G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 1 + \frac{1}{n} - \left(\frac{2}{n^2\mu}\right)(Y_1 + 2Y_2 + \dots + nY_n) \quad (\text{단,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나. 소비생활양식

일반적으로 소비가 소득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던 배경에는 소득이 소비구조를 결정한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의가 자리잡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욕구를 ‘선호(preference)’로 표현하며 가구의 소비구조는 선호와 선호의 실현가능성, 즉 소득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본다. 여기서 선호는 시간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가구의 선호구조는 어떠한 재화에 대한 선호인지, 또는 그 선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논리적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가구가 갖는 소비에 대한 선호, 즉 욕구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에 의해 규정되고 변동될 수 있다. 가령, 커크(Kyrk, 1993)와 맥크래켄(McCracken, 1988) 등은 개인 혹은 가구의 욕구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체계와 같이 사회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적·문화적 가치체계와 같이 사회구조적으로 영향받는 변인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역시 개인 및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변동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소비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령,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소득, 가구규모, 가구구성, 구성원들의 활동 양태 등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이

같은 변동은 필연적으로 소비구조의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Magrabi et al, 1990).

이처럼 가구의 소비구조는 가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그 가구가 선택한 일종의 생활양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구조에 대한 분석은 소비지출함수에 대한 계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는 앵겔이론에 기반해 각 지출 비목들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측정함으로써 소비구조를 분석했다(윤정혜, 1984; 양세정, 1991; 김정숙, 1992; 정건화·남기곤, 1999; 소연경, 2000; 정건화, 2000). 이러한 방법은 거시적인 소비구조 변화를 제시할 수 있지만 보다 미시적인 영역에서 가구의 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가구가 선택하는 소비 상품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가구의 생활양식으로서 가구의 욕구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는 가구가 주어진 예산제약(가처분소득) 하에서 어떠한 소비항목에 얼마만큼을 지출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변화 경향을 보이는가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지출구조 혹은 소비패턴 개념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한 소비단위(가계)가 여러 가지 범주의 소비항목별로 지출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강이주, 199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소비패턴’ 개념을 활용해 가구의 소비생활양식을 측정하도록 하겠다.

다. 소비

본 연구에서 활용될 소비비목은 노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에서 조사하고 있는 11대 소비비목(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내구재, 기타)이다. 노동패널조사는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소비비목이 세분화되었

다. 그러나 소비구조의 총량적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대상 년도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장 대범위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2차년도 데이터의 정보에 맞추었다⁹⁾. 한편 소비생활양식 분석의 경우 분석대상이 횡단면적 데이터이므로 종단적 자료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해, 9차년도 데이터에서 조사하고 있는 20대 비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소비비목의 지출은 가구 규모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OECD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1인 조정 균등 소비지출액으로 전환하였다¹⁰⁾.

9) 한편, 최근으로 올수록 기타지출 부분이 세부적인 비목으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따라서 2차년도의 ‘포괄적’인 기타지출과 동등하게 맞출 경우 5차년도, 7차년도, 9차년도로 갈 수록 기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질 뿐만 아니라 이 비목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오류를 고려해 분석 결과에서 기타지출의 영향력은 해석에 주의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10) $Y^* = Y_i \sqrt{S_i}$ (Y^* 는 1인 균등화 소비지출, Y_i 는 가구 소비지출액, S_i 는 가구원 수)

<표 5-1> 노동패널의 연차별 소비변수 구성

2차년도	5차년도	7차년도	9차년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문화비	문화비	문화비	
내구재	내구재	내구재	내구재	
기타	통신비	통신비	통신비	
	용돈	용돈	부모님용돈	
			자녀용돈	
			기타가족용돈	
	기타	기타	피복비	피복비
			현금/각종기부금	현금/각종기부금
			국민/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타	생필품
				기타

4. 분석방법

가. 노인가구의 총소비불평등 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노인가구의 총소비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총 소비불평등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년도인 1999년, 2002년, 2004년, 2006년도의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의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의 총량적 소비불평등의 변화 경향에 대해 포착하도록 하겠다. 또한 노인가구의 총량적 소비불평등에 대한 각 소비비목의 기여도를 분해함으로써

어떠한 비목이 특히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히도록 하겠다. 각 소비비목의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분해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러만과 이차키(Lerman&Yitzhaki, 1994; 여유진 외, 2005)의 공변량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분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 참조)

나. 노인가구의 생활양식의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질적 측면인 생활양식의 유형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먼저, 생활양식의 유형화 작업을 위해 노인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사용될 자료는 노동연구원의 9차년도 노동패널 데이터이다. 군집분석은 어떤 개체나 대상들을 밀접한 유사성(similarity) 또는 거리(distance)에 의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체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는 다변량 기법이다(성웅현, 2002). 군집분석은 같은 군집에 속한 객체들끼리는 어떤 종류의 유사성이, 그리고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 사이에는 상대적 비유사성(거리)이 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각 객체가 군집의 개수, 내용, 구조 등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객체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군집구성원을 식별함으로써 전체 다변량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고 군집의 형성과정과 그 특성 그리고 식별된 군집간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과정의 총체를 군집분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김기영·전명식, 1990).

군집을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계층적 방식(hierarchical agglomerative methods)과 비계층적 방식(분리군집, partitioning methods)으로 구분된다. 계층적 방식은 군집의 수를 정하지 않고 자료의 계보적 구조를 구하여, 목적에 따라 대군집과 소군집으로 묶는 방법이다. 이때 한 군집은 다른 큰

군집에 포함되나 군집 사이의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나뭇가지와 같은 구조(계층도, dendrogram)를 가지게 된다. 반면 k-평균 군집방법으로 불리는 비계층적 방식은 미리 군집의 수를 지정하고 각 개체를 군집중심(centroid)이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할당하며, 미리 설정된 기준의 최적화에 근거해서 자료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계층적 군집방법에서는 일단 어떤 개체가 특정한 군집에 할당되면 다른 군집에 다시 할당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비계층적 군집방법은 어떤 개체가 초기에 할당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9차년도 노동패널 데이터에 조사된 10대 소비비목을 중심으로 비계층적 군집방법을 이용해 노인가구의 소비생활양식의 유형화를 시도하겠다.

다음으로 각 소비생활양식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니고 비연속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인 경우 일반적인 선형(linear)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시 종속변수가 이항형인가 혹은 다항형인가에 따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나뉘는데 본 분석에서는 선행하는 군집분석의 결과 도출된 군집 유형이 종속변수가 되므로 그 개수에 따라 이항 또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선택하였다.

1)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변수 선정 : 가구의 소비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가구주 연령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소비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연령층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간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와 기호 및 선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각 연령층간에는 독특한 소비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욕구가 변화한다는 점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 소비패턴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젊었을 때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욕구와 나이가 들었을 때 추구하는 욕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호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욕구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소비패턴이 차별화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생애주기모형을 통해 설명되는데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증가한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다(구성열, 1982; 김영숙, 1983; 박상학, 1992). 이처럼 총적인 소비지출 규모 면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소비비목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가령, 김영숙(1989)은 1963년에서 1981년까지의 시계열적 차원에서 가구주 연령에 따른 비목별 가계소비지출의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및 기타소비지출 등의 비목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임을 제시했다. 박선미·김영숙(1992) 역시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고 광열비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제시했다. 정희수·권혁일(2004)은 특히 ‘주택소비’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대변하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소비의 차이화에 대해 검토했다. 특별히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즉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는데 성영애·양세정(1997)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 및 구조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계는 소비지출규모나 지출비목간의 배분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가계특성이 소비지출비목에 미치는 영향력의 형태에 있어서도 비노인가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② 교육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계가 경험하게 되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가계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하프스트롬과 던싱(Hafstrom&Dunsing, 1972)은 가계의 지출비목을 ‘현재지향적’ 지출비목과 ‘미래지향적’ 지출비목으로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거비, 가사용품 및 가구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육비, 선물비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하는 미래중심적 지출비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연구로 김기욱(1988)의 연구결과 가구주의 교육연수는 외식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이미용비와 정적 상관관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민(1992)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의와 개인교통,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영숙(1996)의 연구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③ 가구규모

가구규모는 가구의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최은숙(1986)은 가구원 수는 소득 다음으로 소비지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특히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교통비 등의 비목에 있어 가구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밝혔다. 김영숙(1988)은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비지출분석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각 비목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은 소비단위와 비목의 성격에 따라서 그 차이의 정도가 다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 경우 사치재의 성격을 가지는 재화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고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는 재화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게 되며, 주거비와 같은 가

계단위로 소비되는 비목보다는 식료품비와 같은 개별 소비자단위로 소비되는 비목에 가구원 수의 변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성민(1992)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족이 함께 모이거나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식비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다는 점을 밝혔다. 가구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자녀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스잇과 페다익(Douthitt&Fedyk, 1988)은 자녀의 유무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비해 음식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④ 주거형태

주거는 자산의 일환으로서 모딜리아니와 브룸버그(Modigliani&Brumberg, 1954)는 가계의 소비가 현재와 미래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자산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계 경제가 안정화 돼, 보다 가계의 욕구에 충실한 소비패턴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차례에 걸쳐 주택가격의 급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오늘날 생계에 가장 큰 부담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의 주거 형태는 소비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주거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전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주거관련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월세의 경우처럼 주거관련 비용이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패턴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주거 형태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배순영(1991)은 임대료부담이 가계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가계가 겪는 경제문제지각은 소득에서 기인하는 것보다 임대료 부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궁

극적으로 가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계의 경제문제에 대한 지각을 높여 궁극적으로 가계의 전략적 자원 배분으로서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가계의 주거형태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를 분석한 이성민(1992)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검토되어, 가계 소득과 함께 주거 소유 형태가 소비지출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문숙재·정순희(1995)의 경우 자가보유가계는 월세거주가계보다 외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 및 신발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전세거주가계는 월세거주가계에 비하여 교육비와 교통통신비에 더 많이 지출하는 등 주거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소비비목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황덕순과 정운영(1998)은 자가소유가계와 임차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임차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주거비, 교양·오락·휴가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자가소유가계의 경우 교육비·자녀양육비, 의료비, 경조금 및 현금, 세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혜련·최현자(1999)는 주거보유 형태별로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가계는 식료품비와 교육비에 그들의 예산을 가장 많이 할당하는 반면에 월세거주가계는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예산을 가장 많이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소유 형태에 따른 소비지출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⑤ 거주지역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발전상태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비롯하여 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 등은 가계의 소비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여러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통합체인데 이 같은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물질적으로

가계의 소비패턴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차이에 따라 가계의 생활양식은 달라지고 또한 소비지출 양식이 달라질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을 초점에 놓고 소비패턴을 고찰한 연구는 윤정혜(1984), 최은숙(1986)등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통해 지역에 따른 소비패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서울시나 직할시 등의 대도시와 기타도시로 나누어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이성민(1992)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분석 결과 대도시에 비해 기타도시가 외식과 일반가구 등의 비목에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 및 가구의 소비생활 양식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은 가장 대표적인 소비사회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이다. ‘과시적 소비론’을 주장한 베블렌(Veblen)은 『유한계급론』에서 미국 상류계층의 소비행태가 타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으며, 과시적인 여가와 과시적인 소비는 상류계급(유한계급)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표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Veblen, 1899). 현대사회의 소비에 대해 분석한 부르디외 역시 유사한 논의를 제기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아비투스(habitus)’라고 불리는 계급간 특정한 문화적 성향, 즉 취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적인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비투스의 상징이자 표현체인 소비는 다시금 계급적 정체성을 형성 및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계층 및 계급을 구성하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직업, 재산 등 다양한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급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계급과 소비양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장미혜(2002)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사회계층을 전문·경영인계급으로 구성된 경제문화적 특권집단, 화이트칼라 중심의 문화적 특권집단, 노동계급 중심의 경제문화적 비특권집단으로 구분해 각 집단별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과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소비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직업과 같은 사회계층적 지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에 따른 소비양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류재술(1992)은 봉급생활자 가구와 노무자가구의 소비구조 변동추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교육·교양오락비와 같은 2차적 소비지출의 비중은 봉급자가구가 높지만 식료품비, 주거비와 같은 1차적 소비지출의 비중은 노무자 가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노무자 가구는 저소득층이면서 고용기회가 불안정하여 그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 소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자(2000)는 가구주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을 두 가지 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한 축은 1977년부터 1996년까지에 대한 종단적 검토이며 다른 한 축은 1996년도 기준의 횡단적 분석이다. 분석 결과 지난 20여년 간 직업 유형에 따른 소비가 양적 및 구조적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밝혔다.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직업은 특히 도시 임금노동자의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피복·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다른 소비비목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비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소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분석에 포함시킬 독립변수를 다음 <표 5-2>와 같이 정의한다.

<표 5-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과 정의

변수	변수설명
가구규모	연속변수
가구주 연령	연속변수
가구주 교육수준	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2년제 대학, 전문대학 7=4년제 대학 8=대학원석사 9=대학원박사
거주유형	0= 비자가 1= 자가
거주지	0= 서울 1=비서울
사회경제적 지위	1=하하 2=하상 3=중하 4=중상 5=상하 6=상상

제3절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구조 분석

1. 노년기 소비불평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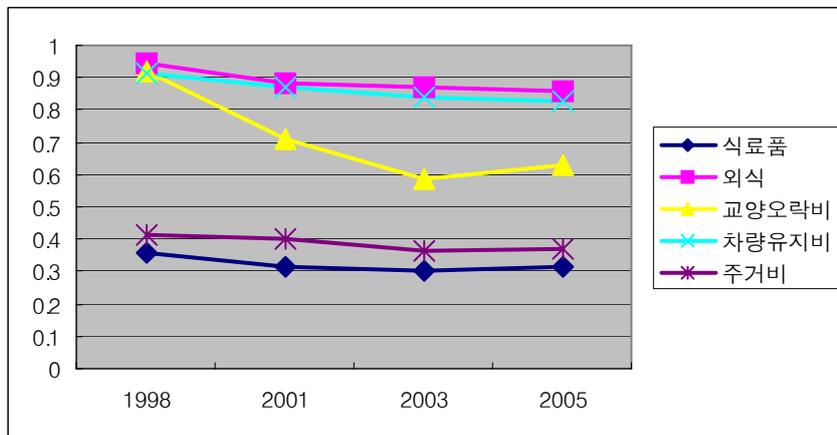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비불평등의 총량적 변화경향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소비 및 소비요소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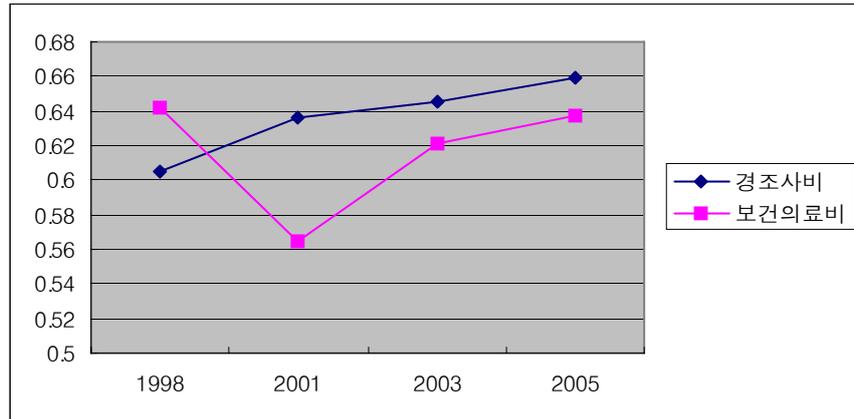
	1998	2001	2003	2005
총소비지출	0.36122	0.3554	0.34604	0.34104
식료품	0.3599	0.31203	0.3006	0.31449
외식	0.94637	0.88361	0.87004	0.85616
공교육	0.95379	0.97675	0.97839	0.95343
사교육	0.95566	0.96352	0.96353	0.95062
차량유지비	0.91211	0.87186	0.83863	0.82533
주거비	0.41254	0.4006	0.36644	0.36917
경조사비	0.60527	0.6363	0.64572	0.65879
보건의료비	0.64206	0.56469	0.62105	0.63783
교양오락비	0.92028	0.7098	0.58834	0.62748
내구재	0.97221	0.95838	0.95594	0.96004
기타지출	0.75347	0.56561	0.48639	0.45892

총소비지출의 지니계수는 1998년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와 함께 기존에는 수동적 소비층이었던 노년층이 보다 적극적인 소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세부적인 소비비목별 지니계수의 변화추이는 [그림 5-1]과 [그림 5-2]를 통해 도식화되었다. 먼저 [그림 5-1]은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비목을 제시한 것으로서, 외식, 차량유지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식료품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거비와 식료품비 지니계수와 같이 생존과 직결되는 비목의 지니계수는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교양오락비, 차량유지비, 외식비와 같이 대중소비문화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비목들의 경우 비록 절대적인 지니계수의 크기는 크지만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5-1] 노인가구의 소비비목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감소비목)



[그림 5-2] 노인가구의 소비비목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증가비목)



2. 소비지출 요소별 소비불평등의 요인분해

총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니계수의 증감을 살펴보는 것은 소비에 있어서 불평등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비목이 전체 불평등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총소비지출 지니계수를 각 소비비목별로 분해를 해서 기여도를 분석해야 한다.

노인가구 총소비지출의 지니계수는 세부 소비비목별 지니계수, 총소비지출에서 각 소비비목이 차지하는 비중, 지니상관계수로 분해될 수 있다. 총 소비지출에 대한 각 소비비목별 절대적 기여도는 전술한 비목별 지니계수와 비목별 비중, 그리고 지니상관계수의 곱을 통해 산출되며 이는 각 소득원천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대값을 보여준다. 각 비목별 절대적 기여도를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 상대적 기여도이며 상대적 기여도를 통해서 개별 비목이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계효과는 각 소비비목

의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소비비목별 비중으로 나누어준 값이며, 이는 각 소비비목이 총소비지출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준다(한계효과가 1보다 작으면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비해 개별 비목이 상대적으로 더 평등함을 의미, 1보다 크면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비해 더 불평등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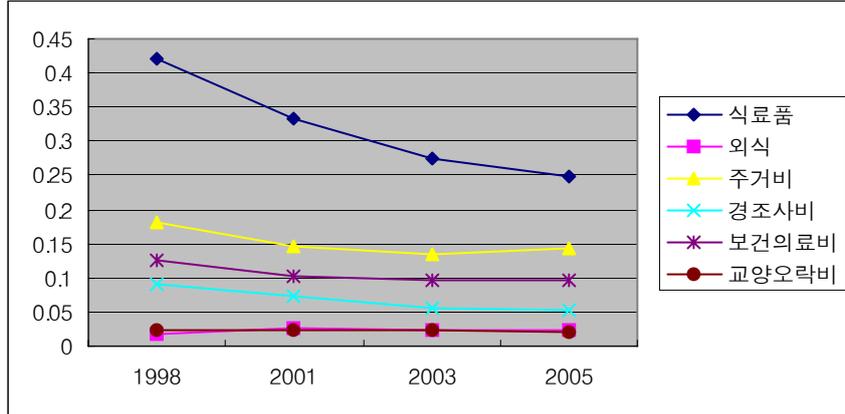
먼저, <표 5-4>, [그림 5-3], [그림 5-4]는 총소비지출에서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식료품, 외식,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차량유지비, 공교육,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적 비중이 공교육, 사교육에 비해 높은 차량유지비의 비중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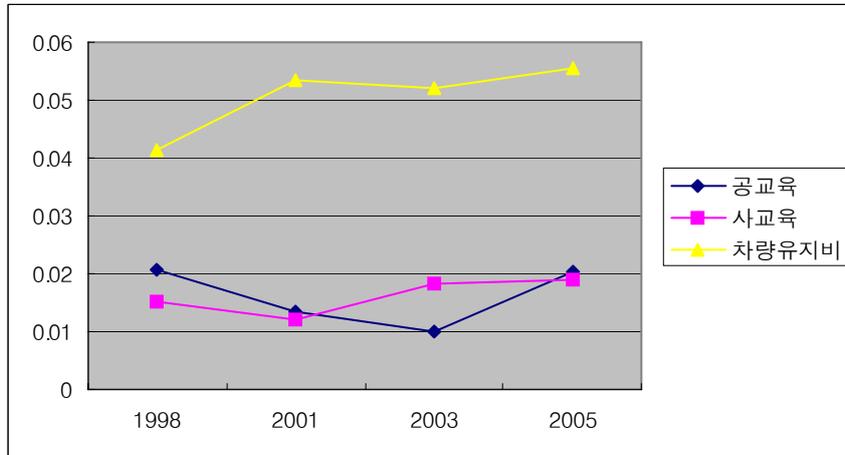
<표 5-4>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의 변화추이

	1998	2001	2003	2005
식료품	0.421518	0.332365	0.274884	0.247412
외식	0.01768	0.026869	0.024511	0.023851
공교육	0.020545	0.013321	0.010124	0.020365
사교육	0.015075	0.01218	0.018443	0.018958
차량유지비	0.041499	0.053498	0.05224	0.055399
주거비	0.181443	0.14528	0.134727	0.144524
경조사비	0.09185	0.072751	0.056561	0.051954
보건의료비	0.126752	0.101039	0.095689	0.095898
교양오락비	0.022824	0.024836	0.022257	0.020662
내구재	0.004473	0.009842	0.007102	0.009613
기타지출	0.056339	0.208019	0.303462	0.311365

[그림 5-3]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의 변화추이(감소)



[그림 5-4]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의 변화 추이(증가)



<표 5-5>, [그림 5-5], [그림 5-6]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비목별 상대적 기여도의 변화 경향을 보여준다.

식품,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비목별 상대적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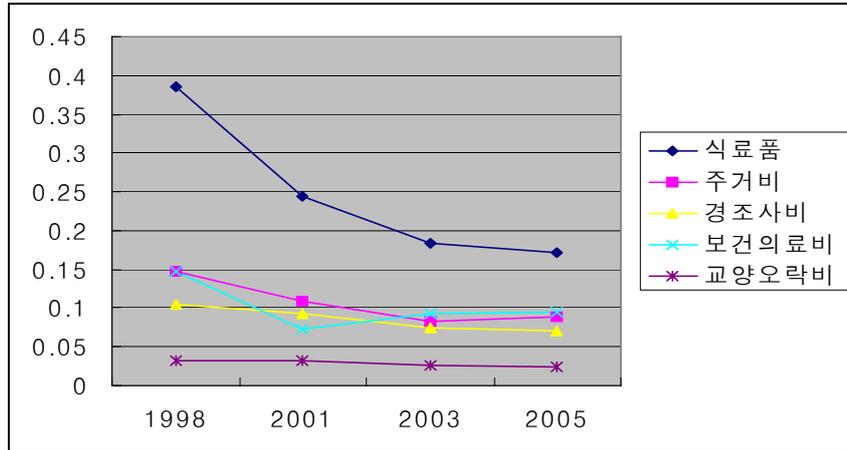
비의 상대적 기여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1998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여도는 1998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경조사비와 교양오락비의 상대적 기여도도 1998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존에는 다분히 선택재로 간주되던 비목의 지출에서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목은 차량유지비, 외식, 공교육, 사교육 등이다. 특히 차량유지비의 상대적 기여도는 가장 큰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개별 비목 가운데 노인 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목으로 분석되었다. 외식은 차량유지비 다음으로 상대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비목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교육의 상대적 기여도는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2005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교육의 상대적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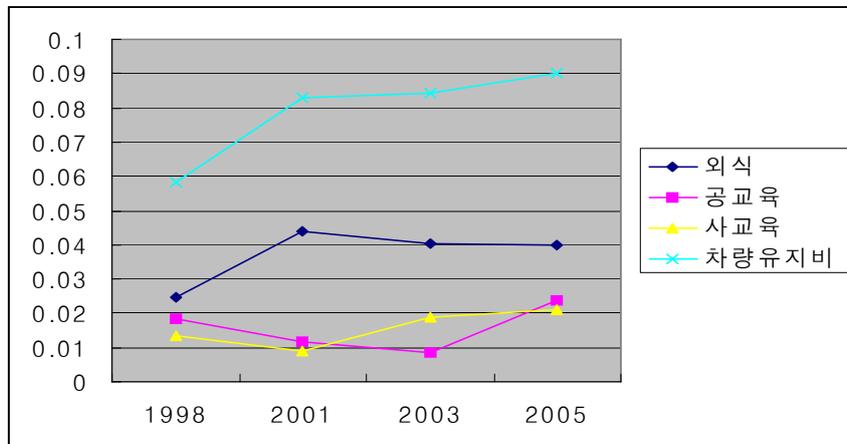
<표 5-5>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지출 비목별 상대적 기여도의 변화추이

	1998	2001	2003	2005
식료품	0.386239	0.24371	0.18280795	0.17051643
외식	0.024841	0.043933	0.04036953	0.03990465
공교육	0.018163	0.011447	0.00833601	0.02367072
사교육	0.013484	0.008859	0.01871299	0.0210569
차량유지비	0.058283	0.082938	0.08417861	0.0901388
주거비	0.148124	0.109163	0.0824003	0.08843577
경조사비	0.105537	0.09214	0.07562197	0.07101659
보건의료비	0.147722	0.072729	0.09225767	0.09416952
교양오락비	0.032129	0.03247	0.02576235	0.02500225
내구재	0.003252	0.010449	0.00749643	0.01491794
기타2	0.062225	0.305905	0.41129811	0.40355948

[그림 5-5]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비목별 상대적 기여도(감소)



[그림 5-6]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비목별 상대적 기여도(증가)



<표 5-6>은 각 비목별 기여도의 한계효과가 어떤 추세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보여준다.

한계효과가 1보다 커서 총소비지출의 불평등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비목

은 외식, 교육(공교육+사교육),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등이다. 외식과 차량유지비의 한계효과는 분석 전기간에 걸쳐 한계효과가 1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 절대값 또한 비목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소비비목 중 가장 불평등하게 소비되고 있는 비목임을 알 수 있다. 외식, 차량유지비에 비해 절대값은 다소 적지만 경조사비의 한계효과 역시 분석 전기간에 걸쳐 1보다 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비목이다. 한편, 노인가구에서 교육의 한계효과는 1998년과 2001년의 경우 1보다 작아서 총소비지출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지 않은 비목이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1보다 커져서 총소비지출 불평등 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비목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소비지출 비목별 기여도의 한계효과 변화추이

	1998	2001	2003	2005
식료품	0.916305	0.73326	0.665036	0.689201
외식	1.404996	1.63507	1.646986	1.673103
공교육	0.884053	0.859343	0.823407	1.162323
사교육	0.894465	0.727368	1.014666	1.110717
차량유지비	1.40444	1.550306	1.611385	1.627084
주거비	0.816369	0.751396	0.611608	0.611912
경조사비	1.14902	1.266518	1.337	1.366922
보건의료비	1.165434	0.719813	0.964143	0.981978
교양오락비	1.407725	1.307371	1.157479	1.210039
내구재	0.726854	1.06163	1.055521	1.551819
기타지출	1.104467	1.470561	1.355354	1.296099

제4절 노년기 소비생활양식 차이 분석

앞 절에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양적 불평등도에 대한 분석 결

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질적 측면에서 노인가구의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노인가구의 소비생활양식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시켰으며 다음으로 각 소비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생활양식의 특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구하고자 하였다.

1. 노인가구 소비생활양식 유형화

노동패널 9차년도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지출에 관한 20개 비목(<표 5-1> 참조)을 변수로 투입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5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타 군집에 비해 보건의료 지출비중이 탁월하게 높은 군집이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군집을 ‘의료지출형’ 생활양식으로 유형화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월등히 높고 부모및자녀 용돈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군집이다. 조사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용돈 가운데 자녀에 대한 용돈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고, 노인 중심의 생활양식보다 자녀 중심의 생활양식을 구사하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군집을 ‘갹거루족형’ 생활양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세 번째 군집은 타 군집에 비해 주거비와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이다. 이에 따라 세 번째 군집을 ‘주거지출형’ 생활양식으로 유형화하였다.

네 번째 군집은 외식비, 경조사비, 헌금 및 기부와 부모 및 자녀 이외의 친척 및 기타 가족에 대한 용돈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이다. 그 밖에 차량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으로서 이 군집을 ‘사교형’ 생활양식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섯 번째 군집은 식료품과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으로서 이 군집을 ‘생존중심형’ 생활양식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5-7> 노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I	II	III	IV	V
식료품	19.9	18.1	24.6	22	44.5
외식	0.7	1.8	0.6	2.9	0.9
교육	0.5	11.0	0.4	2.5	0.4
자동차유지비	0.5	8.1	0.6	7.5	0.6
주거비	15.1	8.1	36.6	12.4	15.9
경조사비	4.1	3.4	3.3	7.6	3.2
헌금/기부	1.2	1.0	1.8	2.7	0.93
보건의료	38.7	3.9	7.7	6.1	7.9
교양오락	1.5	1.2	2.1	2.5	2.1
통신비	3.5	6.7	6.1	6.1	5.1
부모및자녀 용돈	0.4	16.4	0.3	1.2	0.8
기타 가족 용돈	3.7	5.5	2.4	11	4.3
의류	1.4	2.7	2.1	2.9	2.2
국민연금건강보험	1.1	4.8	1.5	4.3	1.5
필수품	7.5	6.1	9.8	7.4	9.2
기타	0.1	1.2	0.2	1.0	0.5
합계	100	100	100	100	100
N	97	114	156	291	291
유형화	의료지출형	케어부족형	주거지출형	사교형	생존중심형

2. 소비생활양식의 결정요인 분석

앞에서 분석된 각 생활양식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8> 소비생활양식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
(기준군집 : 썩거루족형)

	의료지출형		사교형		주거지출형		생존중심형	
	B	Exp(B)	B	Exp(B)	B	Exp(B)	B	Exp(B)
가구규모	-1.518**	0.219	-.441**	0.643	-1.302**	0.272	-1.119**	0.327
연령	0.063**	1.065	-.011	0.989	0.044*	1.045	0.069**	1.071
교육수준	-.111	0.895	0.166*	1.180	-.034	0.967	0.004	1.004
사회적지위	-.260	0.771	0.124	1.132	-.483**	0.617	-.416**	0.659
주거형태(소유)	-.069	0.933	0.144	1.155	-.563	0.569	-.215	0.807
성별(남성)	1.06**	2.885	0.505*	1.657	0.412	1.51	0.708**	2.029
거주지역(서울)	0.104	1.11	0.33	1.391	0.716**	2.047	0.363	1.438
Intercept	-.901		1.495		1.253		-0.738	
Model-fit	chi square 296.717 df=28 -2loglikelihood=2262.936							

의료지출형은 기준군집인 썩거루족형에 비해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구규모의 승산비는 낮으나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성별 변수의 승산비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썩거루족형보다 의료지출형 생활양식을 보일 승산은 2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형은 썩거루족형에 비해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구규모의 승산비는 낮으나 가구주 교육수준과 성별 변수의 승산비는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출형은 썩거루족형에 비해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가구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일수

록 이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거주지역변수의 승산비가 높아,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생활양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생존중심형은 썬거루족형에 비해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성별이 남성일수록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구주 성별의 승산비가 높게 나타나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썬거루족형보다 생존중심형 생활양식을 보일 확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제5절 결론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지출 불평등의 총량적 변화경향에 대한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지니계수는 1998년의 0.36122에서 2001년도에는 0.3554, 2003년도에는 0.34604, 2005년도에는 0.3410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소비지출 비목에 따라 불평등의 경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특히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유의미한 함의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비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외식비 지출의 지니계수는 분석 전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으며(0.94637→0.88361→0.87004→0.85616)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증가한 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0.01768→0.026869→0.024511→0.023851). 외식비의 높은 지니계수 값은 외식비가 불평등하게 소비되는 비목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후 지니계수

값의 꾸준한 감소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노인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증가했다는 점은 2000년대에 접어들며 노인가구의 외식지출이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외식비의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후에 0.024841에서 2001년에는 0.043933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0.04036953, 0.03990465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비록 외식비 지출이 대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계층간 매우 불평등하게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01년 이후 소폭의 감소는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식지출의 한계효과가 분석 전기간에 걸쳐 1보다 크게 나타난 점도 외식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비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량유지비 또한 외식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비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유지비의 지니계수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꾸준히 감소했으며(0.91211→0.87186→0.83863→0.82533)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0.041499→0.053498→0.05224→0.055399), 차량에 대한 지출이 노인가구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차량에 대한 지출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998년의 0.058283에서 2005년의 0.0901388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한계효과도 분석 전기간에 걸쳐 1보다 크게 나타나 차량유지비에 대한 노인가구의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소폭으로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조사비는 비중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기여도 역시 감소하는데 상대적 기여도의 감소는 비중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계효과는 분석 전기간 동안 1보다 커서 총소비지출 불평등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비목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 가족문

화의 해체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라는 맥락 속에서 경조사비와 같은 지출이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를 짐작할 수 있으나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계효과가 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가구간에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외식, 차량유지비와 같이 현대적 소비문화를 반영해주는 비목 지출과 경조사비 지출은 모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수반되는 비목 지출인데 이는 소비생활 양식에 대한 분석 중 “사교형”으로 분류된 유형에 대응된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사교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교형” 소비생활양식이 타 영역에 비해 계층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며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지위 요인, 남성과 같은 젠더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식료품, 주거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비목들은 지니계수와 비중, 상대적 기여도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계효과도 분석 전기간에 걸쳐 1보다 작게 나타나, 생활필수품 관련 비목에 있어서는 소비의 평등성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활필수적인 비목 중심의 소비생활양식이 독자적으로 유형화됨으로써 이들 비목에 대한 총량적 불평등의 감소경향과 무관하게 여전히 필수적인 지출 중심의 생활양식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노인가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생활양식은 연령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 거주할수록 식료품중심의 “생존중심형”보다 “주거지출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 노인이 주로 생활필수품 위주의 생활양식을 보이는 가운데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비의 지니계수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감소했다가(0.64206 → 0.56469) 2003년과 2005년에 다시 증가해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

했다.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역시 지니계수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2001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계효과는 1998년에만 1 이상이었으며 이후 1보다 작아 총소비지출의 불평등보다 평등하게 분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2000년도 이후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다소 평등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부분적으로 의약분업과 이로인해 약제비의 상당수가 보험의 포괄대상이 된 점 등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2003년과 2005년에 불평등성이 증가하는 부분은 고가이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소득층의 이용율이 높아지는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의료지출형” 소비생활양식이 독자적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이 유형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의료비 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의료 욕구가 크게 발생한 노인가구의 경우 의료비지출이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타 부분에 대한 소비가 제약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2000년대 이후, 최근에 노인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계효과 역시 2003년 이후부터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일반 가구에서 교육비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교육불평등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인가구에서 자녀 및 손자녀 세대의 교육지출을 원조하는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소비생활양식 유형화에서 이에 해당하는 유형이 “캥거루족형”이다. 타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을 수록, 그리고 여성가구주일 수록 캥거루족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일수록 자녀 및 손자녀 세대에 대한 원조가 노인 가구 소비지출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외식, 차량유지비 등 현대 소비문화의 흐름이 노인세대까지 대중화되었으나 또한 동시에 이러한 소비영역은 노인가구 소비지출 불평등을 가장 크게 규정하는 비목이 되고 있다. 부르디외와 같은 소비사회학자들이 지적했듯 이같은 영역의 소비는 단지 현재적 소비능력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쌓여온 문화적 취향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며, 노인집단 가운데서도 특히 교육수준과 직업계층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은 매우 수동적인 소비주체였으며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동질적인 소비집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앞으로 노인세대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의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향후 현대적 소비문화와 밀접한 소비항목을 중심으로 노인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비문화적 양극화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단 노인집단 내부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저소득·취약노인에 대한 정책적 처방에 있어서도 생계와 필수적으로 연관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선택재적이지만 현대사회의 대중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외식, 차량유지비 등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교양오락지출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노인과 관련된 교양오락 인프라의 부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비의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감소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건의료지출이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타 집단과 비교해 가구 지출 구성이 지나치게 보건의료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보건의료 욕구가 발생한 노인가구에서 여타 부문에 대한 욕구가 미충족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욕구가 발생한 노인가구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

스 및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점과, 노인가구 소비생활양식에서 타집단에 비해 교육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한 축으로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성이 노인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다른 한 축으로는 노부모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성이 비노인집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식료품과 주거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양식의 지배적인 유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주거지출이 지배적이라는 점은 거주지에 따라 생존과 관련된 욕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주거관련 비용이 높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인층의 주거와 관련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6장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살펴본 노년기 불평등

제1절 서론

노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노인은 단일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별로 그 욕구와 삶의 실태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석재은 외, 2005).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노인을 비노인과 구분되는 한 집단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러한 다양성이라는 중립적인 개념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노년기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 의하면, 전생애에 걸쳐 누적되어온 불평등이 노년기에 뚜렷하고도 다각적인 형태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ortimer and Shanahan, 2004).

그런데 노년기의 불평등에 주목한 몇 연구들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연계망이 경제적인 자원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차원으로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망에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출발점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첫째는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의 정치 문화나 조직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연계망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미시적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계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Lin 2001: 19)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이중 후자에 속하는 연구로 노년기의 관계의 패턴에서 나타난 불평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적 자원으로서의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에서는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2절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심을 두고 행해진 연구의 관심분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심사는 노인이 사회적 연계망의 제특성과 그 결정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연구, 두 번째는 연계망이 노인의 삶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 세 번째는 사회적 연계망이 노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연계망 자체의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는 사회적 관계를 유형화하거나(박경숙, 2000), 연락빈도와 같은 연계망의 제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김안나, 2003; 정순돌, 2004). 사회적 연계망의 결정요인과 관련해서는 성, 연령, 결혼상태, 동거유형, 자녀수, 거주지, 건강상태와 같은 등과 같은 노인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학력, 최장기 직업,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검토된 주요 변인들이다.

한편 노년학 분야의 연구 중에는 사회적 연계망 자체보다는 사회적 연계망이 노인의 삶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은데(김재일, 2001; 노병일·모선희, 2007; 최정아·서병숙, 1992; 황미영, 1999),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 기능의 수행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 또는 우울이라고 하는 사회적 연계망의 효과(effects, return)(박경숙 2003; 이기홍, 2005; 이호성, 2005)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개

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연계망이 독립적이고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한 개인의 거주지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발견된다(Fischer et al, 1977). 특히 한국노인의 경우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이 세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실제 분석을 통하여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하여 이웃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다각적인 영향력이 언급되고 있다(김영범·박준직, 2006; 박경숙, 2000; 황미영, 1999). 또한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남녀는 사회구조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적 연계망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이 있다. 즉 여자들은 권력과 위세의 기초가 경제·정치·이념적인 자원을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비친족 끈을 형성할 기회가 적으며, 친족간의 유대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친족중심적인 사회적 연계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Moore, 1990; Spitze, L. and Logan, J. 1989). 결혼상태나 자녀수도 노후에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일차적 비공식관계의 유지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변수이다. 결혼한 사람들의 연계망은 친족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배우자가 연계망의 성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연계망 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Hurbert and Acock, 1990; Rossi and Rossi, 1990).

건강상태는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며 건강한 노인이 지역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는 등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게 된다(박경숙, 2000). 또한 교육, 직업, 경제수준 등이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Dannefer, 2003), 이는 교육수준이 높거나 사회계층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

육은 누적된 삶의 기회의 유불리함을 보여주는 변수이며, 평생동안의 직업은 계층적 지위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기회와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사회적 연계망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변수들이다.

제3절 연구방법

1. 자료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하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65세 이상 3,278명에 대한 전국대표성을 가진 조사자료로¹¹⁾ 2004년 6월 28일~9월 10일(75일간) 기간 중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지역(김영범·박준식, 2006; 노병일·모선희, 2007)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전국적인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사는 노인의 일반특성, 가족 및 친구관계, 가구형태, 직업 및 경제상태,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사회활동, 노인 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이용실태 및 욕구,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생활환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 결정요인을 밝힘에 있어 내적 타당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연계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연계망의 제특성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11) 본 조사는 180개 표본조사구의 9,308가구에 대한 가주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가구의 총 노인 3,482명중 3,278명의 노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2. 분석틀 및 주요 변수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다양한 특성중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연계망의 규모와 유대의 특징인 접촉 빈도, 사회적 연계망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Fiori 등에 의한 연구(2007)는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연계망의 구조와 기능, 관계의 질이라는 3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중 관계의 질에 관한 경험적 검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연계망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적 연계망을 이루는 관계에 기초하여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을 유형화하려는 몇몇 작업들이 있었다(박경숙, 2000; 정경희, 1995; Fiori et al, 2007). 본 연구의 유형화 작업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출발점으로 하고자 한다. 로시와 로시(1990)는 전 생애 단계에 있어서의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세대간의 관계는 감정적인 유대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도구적 지원을 교환하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웬거(1999)는 친구와 이웃은 노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고 본다. 친구는 선택에 기초한 라포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관계로 친근함과 상호적인 지지의 교환을 큰 특징으로 한다. 반면 이웃은 근접성과 공간적 공유에 기초한 관계로 도구적인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고 비공식적인 모니터링 체계로서 작동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두 관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계망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크게 노인의 현재의 특성과 노인의 생애경험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현재 노인의 특성으로는, 거주지, 성, 나이, 건강상태와 같은 배경적 특징과, 결혼상태, 자녀수, 형제자매수 등과 같은 가용한 연계자원, 현재의

소득수준, 근로상태, 교육수준, 최장기 종사 직업을 포함하도록 한다(표 6-1 참조).

가. 주요 종속변수 설명

1) 연계망의 크기

노인의 연계망의 크기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수, 손자녀수, 형제자매수, 친척유무, 친구이웃수, 참여단체수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활용한 자료가 연계망 파악을 목적을 한 조사가 아니지만, 켄터의 위계적 대체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으로부터의 거리에 기초한 동심원상의 관계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평균 연계망의 크기는 18.4명(범위: 0~41명, 표준편차: 6.4)이다.

2) 연계망의 다양성

노인이 갖고 있는 연계망의 다양성은 연계망 중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과 8종류의 연계끈(tie)중 노인이 갖고 있는 끈의 종류라고 하는 다양성의 두 측면이 분석되었다. 전체 연계망 중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5.7%(표준편차: 0.1)로 매우 친족중심적임을 볼 수 있다. 한편 평균 연계 끈 종류는 5.5개(표준편차:1.3)로 나타났다.

<표 6-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 변수	1)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	연계된 끈의 수	
	2) 연계망의 다양성	연계끈 중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	
	(1) 연계망중 친족의 비율		
	(2) 연계끈의 다양성	연계끈의 종류	
	3) 연계망 유형	고립형, 전통적 가족중심형, 수정가족중심형, 지역사회중심형, 다층형	
	4) 접촉빈도	각 연계끈과의 연간 접촉일수	
독립 변수 ¹⁾	노인의 배경적 특성	거주지	0 농어촌 1 도시
		성	0 여자 1 남자
		연령	만 나이
	노인의 연계망 가용성	건강상태	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 기능상태 제한 있음
		결혼상태	0 무배우 1 유배우
		자녀와의 동거 여부 ²⁾	0 자녀와 비동거 1 자녀와 동거
		자녀수 (비동거자녀수) ²⁾	생존자녀수(비동거자녀수)
		형제자매수 ²⁾	생존형제자매수
	노인의 경제적 특성	소득수준	가구소득(원)
		근로형태	0 비근로 1 근로중
		교육수준	글자 모름, 무학이나 글자 해독, 서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 교육년수로 연속변수화
		최장기 종사 직종	1. 고위임직원·관리자 및 전문가
			2. 기술공·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3. 서비스 판매종사자			
	4. 생산직 종사자작		
	5. 기타(무직포함)		

주: 1) 자녀와의 접촉 빈도의 경우 자녀의 특징(형제자매순위, 성, 연령, 가족상황, 직업)이 포함됨. 2) 종속변수에 따라 다변량분석에 포함여부가 달라짐.

3) 연계망 유형

노인의 삶에 있어서 자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적되어 왔다(박경숙, 2000; 최정아·서병숙,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계망을 자녀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하여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즉, 유형화의 큰 축을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가 여부, 별거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부,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때 별거자녀와의 밀접한 관계는 차타고 2시간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주1회 이상의 접촉이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밀접한 관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이차적인 비공식 관계인 친구이웃과 주 1회 이상의 접촉을 유지하거나 단체활동을 주 1회 이상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표 6-2> 참조).

<표 6-2> 노인의 연계망 유형화

유형	일차적 비공식집단(자녀)		이차적 비공식 집단	%
	자녀와 동거	별거자녀와 밀접한 접촉	친구·이웃, 참여단체	
고립형	×	×	×	20.0
전통적 가족중심형	○	○ 또는 ×	×	21.1
수정 가족중심형	×	○	×	43.5
지역사회 중심형	×	×	○	4.2
다층형	○	×	○	11.2
	×	○	○	
	○	○	○	
전체				100.0(2,987)

4) 접촉빈도

연계된 끈 각각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는 각 끈과의 연간 접촉빈도로 측정하였다. 조사시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는 365회로, 주 2~3회는

131회, 주 1회 정도는 52회, 2주에 1회 정도는 26회, 월 1회 정도는 12회, 3개월에 1회 정도는 4회, 6개월에 1회 정도는 2회, 년 1회 이하는 1회,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0회로 전환하여 연속변수화 하였다. 단체의 경우는 5종류의 단체(종교, 문화활동, 운동, 사교, 정치단체)각각의 참여빈도를 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합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접촉이 많은 자녀와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는 각각 63.9일(표준편차:107.3)과 229.4일(표준편차:158.0)이다.

나. 분석방법

종속변수별로 노인의 제특성에 따른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표 6-1>에서 정리된 것과 같은 분석모형에 기초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및 다범주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제4절 경험적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결과

노인의 연계망 크기를 살펴보면 10개 이하인 비중이 16.0%, 11~15개가 19.3%, 16~20개가 30.4%, 21~25개가 22.2%, 25개 이상이 12.2%로 평균 18.4명이다. 연계끈의 존재 자체가 관계의 친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망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으로 인하여 노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있는 측면이 될 것이다.

노인의 배경적 특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읍면부 지역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계망의 크기가 자녀수, 형제자매수 등과 같은 가용한 연계끈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사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읍면지역 거주노인일 수록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 즉 연계망 가용성자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연계망 중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의 40% 정도가 연계망의 90% 이상을 친족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이 노후생활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관계임을 볼 수 있다. 연계망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 고연령 노인에게서 친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망의 크기에서는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친족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계망이 얼마만큼 다양한가를 살펴보면 3개 이하가 11.7%, 4개 12.7%, 5개 25.0%, 6개 26.7%, 7개 이상이 23.9%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경우 끈의 종류가 다양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연계끈을 갖고 있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다양한 연계망을 갖고 있는 등 가용한 자원이 많을수록 연계망 구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교육수준의 경우도 연계망의 다양성과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졌던 노인일수록 다양한 연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망의 유형을 보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고립형의 노인이 20.0%에 달하고 있다.

한편 동거자녀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통적 가족중심형이 21.1%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노인이 43.5%이다. 이는 세대간의 독립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적정수준의 교류를 유지하는 세대관계로 ‘수정 확대가족’으로 일컬어지는 형태로(Shanas, 1979), 우리도 별거가 반드시 세대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별거부양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을 뜻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와는 동거하지도 별거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만을 맺고 있는 노인은 4.2%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역사회가 갖는 의미는 다른 유형의 연계망을 갖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클 것이다. 마지막 유형은 다층형으로 자녀와 동거하거나 별거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갖고 있는 형태로 11.2%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다층형은 부양의 교환이라는 점에서의 강점과 동시에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삶의 다양함과 정보획득 상의 유리함을 동시에 향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연계망의 유형은 연계망의 특성 중에서 제특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노인에게서 고립형의 비율이 26.8%로 도시지역 노인의 16.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층형의 비율도 8.9%로 도시지역의 12.3%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고립형의 비율이 높고(각각 18.2%와 22.7%) 다층형이 비율이 낮은 것(각각 12.3%와 9.6%)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은 수정가족중심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각각 50%와 39.5%) 전통적 가족중심형의 비율이 낮다(각각 14.2%와 25.5%). 또한, 무배우인 경우보다 유배우인 경우가 수정가족중심형의 비율이 높다(각각 49.3%와 36.0%).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자노인의 경우 무배우 상태가 많고 그런 경우 자녀와 동거할 비율이 유배우 상태에 비하여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노인의 연령과 기능적 제한여부에 따른 유형분포를 살펴보면, 노인의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경우 전통적인 가족중심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여성노인, 후기노인, 기능장애노인 등이 다른 노인에 비하여 가족중심적·가족의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노인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립형의 비율이 감소하고 전통적 가족중심형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형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중심형의 비율과 다층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 유형은 노인의 경제적 측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간 종사한 직업별로 연계망 유형을 비교해보면 다른 유형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전통적 가족중심형의 경우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 크기

(단위: %)

특성	10개 이하	11~15개	16~20개	21~25개	25개 이상	계 (명)
전체	16.0	19.3	30.4	22.2	12.2	100.0(3,029)
지역						
읍·면부	12.3	16.6	28.8	27.0	15.3	100.0(977)
동부	17.8	20.6	31.1	19.9	10.7	100.0(2,052)
성						
남자	17.2	18.4	30.0	21.4	13.1	100.0(1,858)
여자	14.0	20.8	31.0	23.5	10.8	100.0(1,171)
연령						
65~69세	15.2	20.4	33.0	22.5	8.9	100.0(1,214)
70~74세	13.8	18.5	33.6	22.8	11.3	100.0(902)
75세 이상	19.1	18.7	23.6	21.0	17.5	100.0(9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7	18.3	30.9	23.9	12.2	100.0(2,072)
제한 있음	18.8	21.6	29.1	18.5	12.1	100.0(956)
결혼상태						
무배우	24.6	19.7	27.8	17.3	10.6	100.0(1,317)
유배우	9.3	19.1	32.3	25.9	13.4	100.0(1,711)
자녀수						
2명 이하	60.4	25.5	12.2	1.7	0.2	100.0(498)
3명	17.5	36.7	34.9	10.3	0.6	100.0(523)
4명	5.3	29.7	42.6	17.4	5.0	100.0(672)
5명	3.7	8.7	44.0	34.7	9.0	100.0(634)
6명 이상	4.7	1.8	15.7	38.7	39.0	100.0(702)
형제·자매수						
0명	26.2	24.1	25.7	15.0	9.0	100.0(625)
1명	17.4	23.6	28.1	21.3	9.7	100.0(602)
2명	15.6	20.6	32.0	21.9	9.9	100.0(551)
3명	13.1	17.7	32.5	24.5	12.2	100.0(455)
4명	9.1	13.8	35.1	25.0	16.9	100.0(366)
5명 이상	5.9	11.6	32.8	30.1	19.7	100.0(418)

<표 6-3> 계속

특성	10개 이하	11~15개	16~20개	21~25개	25개 이상	계 (명)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1.4	20.3	27.6	19.7	11.0	100.0(900)
50~100만원 미만	14.0	19.8	30.1	22.9	13.3	100.0(782)
100~150만원 미만	15.1	18.8	30.7	20.9	14.5	100.0(376)
150~200만원 미만	10.7	19.0	35.6	25.8	8.9	100.0(255)
200~300만원 미만	15.0	19.9	31.9	19.7	13.6	100.0(334)
300만원 이상	12.4	16.3	32.4	27.6	11.4	100.0(382)
취업유무						
미취업	18.6	20.4	29.4	20.1	11.5	100.0(2,098)
취업중	10.2	17.0	32.5	26.8	13.6	100.0(932)
교육수준						
초교 이하	16.6	19.6	28.9	22.6	12.2	100.0(1,507)
초등학교	14.4	19.4	33.5	20.6	12.1	100.0(382)
중·고등학교	15.9	18.7	30.2	20.9	14.2	100.0(612)
전문대 이상	15.5	19.1	32.3	23.5	9.7	100.0(528)
최장기 종사 직종						
고위전문직	18.2	17.0	31.3	21.3	12.2	100.0(267)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15.6	21.6	30.4	20.8	11.6	100.0(181)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2.1	23.6	33.4	14.7	6.3	100.0(391)
생산직 종사자	14.8	19.0	28.9	24.2	13.2	100.0(1,915)
기타(무직포함)	14.0	16.6	35.1	20.1	14.2	100.0(271)

<표 6-4>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 중 친족의 비율

(단위: %)

특성	78% 이하	78.1%~90% 이하	90.1~95% 이하	95.1%이상	계 (명)
전체	29.1	29.6	17.9	23.4	100.0(3,029)
지역					
읍·면부	23.0	28.4	20.4	28.2	100.0(977)
동부	32.0	30.2	16.7	21.1	100.0(2,052)
성					
남자	26.4	30.1	19.4	24.1	100.0(1,858)
여자	33.4	28.8	15.5	22.3	100.0(1,171)
연령					
65~69세	36.9	30.2	16.5	16.4	100.0(1,215)
70~74세	26.4	31.5	19.8	22.4	100.0(902)
75세 이상	21.4	27.0	17.9	33.7	100.0(912)
기능상태 ³⁾					
제한 없음	32.8	31.1	17.8	18.3	100.0(2,072)
제한 있음	21.0	26.4	18.2	34.4	100.0(957)
결혼상태					
무배우	31.0	27.3	18.0	23.8	100.0(1,318)
유배우	27.7	31.4	17.8	23.1	100.0(1,711)
자녀수					
2명 이하	53.9	20.3	6.1	19.7	100.0(498)
3명	38.5	29.1	16.9	15.5	100.0(523)
4명	29.9	29.8	21.4	18.9	100.0(672)
5명	20.0	34.1	20.1	25.2	100.0(634)
6명 이상	11.9	32.5	21.2	34.5	100.0(702)
형제·자매수					
0명	25.7	26.2	18.3	29.9	100.0(625)
1명	28.2	28.4	18.5	24.8	100.0(302)
2명	30.9	28.3	18.4	22.4	100.0(551)
3명	27.8	33.6	18.0	20.7	100.0(455)
4명	33.7	31.7	15.6	19.1	100.0(366)
5명 이상	28.3	33.1	18.1	20.5	100.0(418)

<표 6-4> 계속

특성	78% 이하	78.1%~90% 이하	90.1~95% 이하	95.1%이상	계 (명)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5.3	26.5	18.0	30.2	100.0(900)
50~100만원 미만	26.7	30.3	20.7	22.4	100.0(782)
100~150만원 미만	31.0	32.0	16.4	20.6	100.0(376)
150~200만원 미만	32.8	27.9	21.6	17.9	100.0(255)
200~300만원 미만	30.9	33.5	14.6	21.1	100.0(334)
300만원 이상	37.2	31.2	13.9	17.9	100.0(382)
취업유무					
미취업	29.3	29.7	16.7	24.3	100.0(2,098)
취업중	28.7	29.5	20.5	21.3	100.0(932)
교육수준					
글자모름	23.7	28.3	20.6	27.4	100.0(1,507)
글자해독	27.7	31.5	16.5	23.3	100.0(382)
초등학교	32.4	29.0	17.2	21.4	100.0(612)
중·고등학교	41.6	32.7	12.1	13.6	100.0(528)
전문대 이상					100.0)
최장기 종사 직종					
고위전문직	51.6	31.5	7.0	9.9	100.0(267)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44.6	28.3	14.3	12.9	100.0(171)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7.3	29.0	16.3	17.5	100.0(391)
생산직 종사자	23.5	28.5	19.6	28.4	100.0(1,915)
기타(무직포함)	24.2	38.2	20.4	17.2	100.0(271)

<표 6-5>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의 다양성(연계곤의 종류)

(단위: %)

특성	3개 이하	4개	5개	6개	7개 이상	계 (명)
전체	11.7	12.7	25.0	26.7	23.9	100.0(3,029)
지역						
읍·면부	10.0	13.2	27.5	26.5	22.9	100.0(977)
동부	12.4	12.5	23.9	26.9	24.4	100.0(2,052)
성						
남자	14.4	15.9	28.4	26.3	15.1	100.0(1,858)
여자	7.4	7.6	19.8	27.4	37.8	100.0(1,171)
연령						
65~69세	8.1	6.0	19.9	29.1	36.9	100.0(1,215)
70~74세	9.4	12.6	26.7	30.2	21.1	100.0(902)
75세 이상	18.7	21.6	30.2	20.2	9.3	100.0(912)
기능상태 ³⁾						
제한 없음	10.4	9.2	22.3	29.5	28.6	100.0(2,072)
제한 있음	14.4	20.2	30.9	20.7	13.8	100.0(957)
결혼상태						
무배우	22.5	20.7	32.1	23.4	1.2	100.0(1,318)
유배우	3.3	6.5	19.6	29.3	41.4	100.0(1,711)
자녀수						
2명 이하	26.0	14.5	22.7	21.5	15.3	100.0(498)
3명	9.4	9.8	24.4	26.3	30.1	100.0(523)
4명	8.0	11.6	24.8	27.0	28.6	100.0(672)
5명	7.5	14.4	23.9	28.3	25.9	100.0(634)
6명 이상	10.5	13.0	28.4	29.1	19.0	100.0(702)
형제·자매수						
0명	26.6	29.5	29.4	13.0	1.4	100.0(625)
1명	8.0	12.0	25.7	33.3	21.0	100.0(602)
2명	6.8	9.3	24.5	29.9	29.5	100.0(551)
3명	8.1	7.7	23.6	30.5	30.1	100.0(455)
4명	7.8	5.2	21.9	30.9	34.2	100.0(366)
5명 이상	5.6	5.3	23.4	26.5	39.3	100.0(418)

<표 6-5> 계속

특성	3개 이하	4개	5개	6개	7개 이상	계 (명)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8.8	16.8	29.8	25.5	9.1	100.0(900)
50~100만원 미만	8.5	11.0	25.1	29.5	25.9	100.0(782)
100~150만원 미만	7.4	12.6	19.0	26.9	34.2	100.0(376)
150~200만원 미만	8.3	11.7	17.4	30.2	32.6	100.0(255)
200~300만원 미만	11.1	10.9	25.0	24.1	28.9	100.0(334)
300만원 이상	8.2	8.8	25.0	23.7	34.4	100.0(382)
취업유무						
미취업	14.0	14.2	25.9	25.4	20.5	100.0(2,098)
취업중	6.4	9.3	23.1	29.7	31.5	100.0(931)
교육수준						
초교이하	13.2	14.3	28.9	27.6	16.1	100.0(1,507)
초등학교	10.2	15.2	18.4	28.9	27.3	100.0(382)
중·고등학교	10.1	9.1	26.6	25.1	29.2	100.0(612)
전문대 이상	10.2	10.4	17.0	24.7	37.7	100.0(528)
최장기 종사 직종						
고위전문직	9.4	2.6	11.7	22.5	53.9	100.0(267)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5.4	9.7	18.1	26.2	40.6	100.0(181)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7.7	12.2	20.6	30.8	18.6	100.0(391)
생산직 종사자	11.5	14.1	28.4	26.7	19.4	100.0(1,915)
기타(무직포함)	11.0	15.7	24.8	25.9	22.6	100.0(271)

<표 6-6> 노인의 특성별 연계망 유형

(단위: %)

특성	다층형	지역사회 중심형	수정가족 중심형	전통적 가족중심형	고립형	계 (명)
전체	11.2	4.2	43.5	21.1	20.0	100.0(2,987)
지역						
읍·면부	8.9	3.3	42.5	18.5	26.8	100.0(967)
동부	12.3	4.6	44.0	22.4	16.7	100.0(2,020)
성						
남자	12.3	4.6	39.5	25.5	18.2	100.0(1,835)
여자	9.6	3.5	50.0	14.2	22.7	100.0(1,153)
연령						
65~69세	12.3	4.1	48.7	14.6	20.3	100.0(1,198)
70~74세	11.6	4.4	43.2	20.3	20.5	100.0(890)
75세 이상	9.6	4.0	36.8	30.6	19.0	100.0(900)
기능상태 ³⁾						
제한 없음	12.6	5.0	44.7	17.5	20.2	100.0(2,043)
제한 있음	8.3	2.3	40.9	29.0	19.5	100.0(945)
결혼상태						
무배우	11.6	4.5	36.0	30.6	17.3	100.0(1,298)
유배우	11.0	3.9	49.3	13.9	22.0	100.0(1,689)
자녀수						
2명 이하	10.0	5.1	39.7	18.8	26.5	100.0(488)
3명	14.3	4.6	43.1	18.0	19.9	100.0(516)
4명	11.0	2.4	46.6	21.8	18.2	100.0(664)
5명	12.7	4.5	43.6	19.7	19.5	100.0(623)
6명 이상	8.8	4.5	43.5	25.6	17.6	100.0(696)
형제·자매수						
0명	8.4	3.5	41.3	26.3	20.4	100.0(618)
1명	11.2	3.8	43.3	23.8	18.0	100.0(596)
2명	12.7	4.3	43.9	20.8	18.4	100.0(544)
3명	10.6	3.9	51.3	12.8	21.3	100.0(443)
4명	11.1	5.2	44.6	20.2	18.9	100.0(361)
5명 이상	14.3	4.9	37.7	19.5	23.5	100.0(413)

<표 6-6> 계속

특성	다층형	지역사회 중심형	수정가족 중심형	전통적 가족중심형	고립형	계 (명)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8.2	5.2	54.5	2.4	29.9	100.0(889)
50~100만원 미만	8.4	4.5	54.0	8.8	24.4	100.0(770)
100~150만원 미만	11.6	4.5	45.1	23.6	15.3	100.0(371)
150~200만원 미만	13.2	5.9	35.1	34.6	11.3	100.0(251)
200~300만원 미만	16.4	1.7	24.9	45.8	11.2	100.0(327)
300만원 이상	18.1	1.9	16.7	57.7	5.6	100.0(379)
취업유무						
미취업	12.3	4.8	40.1	24.6	18.2	100.0(2,070)
취업중	8.8	2.7	51.2	13.4	24.0	100.0(918)
교육수준						
초교이하	7.9	4.3	53.6	8.1	26.1	100.0(1,489)
초등학교	10.4	3.5	40.7	27.4	18.1	100.0(375)
중·고등학교	12.3	3.5	31.4	38.5	14.3	100.0(605)
전문대 이상	20.3	5.0	30.6	33.8	10.3	100.0(518)
최장기 종사 직종						
고위전문직	15.6	8.1	46.1	10.0	20.3	100.0(259)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14.6	3.0	48.4	16.1	17.9	100.0(179)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5.6	5.1	43.5	19.3	16.6	100.0(386)
생산직 종사자	8.5	3.4	43.8	22.8	21.5	100.0(1,893)
기타(무직포함)	17.4	5.2	35.3	26.5	15.6	100.0(267)

<표 6-7> 노인의 특성별 연계종류별 접촉 빈도

(단위: 일수)

특성	자녀	친구·이웃
전체	63.9	229.4
지역		
읍·면부	56.8	267.2
동부	67.4	211.3
성		
남자	65.4	194.2
여자	62.9	251.6
연령		
65~69세	71.1	2087.7
70~74세	62.6	238.1
75세 이상	55.5	251.9
기능상태		
제한 없음	64.6	225.0
제한 있음	62.5	239.4
결혼상태		
무배우	60.3	257.2
유배우	66.5	208.2
자녀수		
2명 이하	46.4	215.5
3명	66.3	205.0
4명	71.7	225.6
5명	66.4	243.3
6명 이상	61.5	249.2
형제·자매수		
0명	54.6	240.6
1명	62.1	245.1
2명	64.7	229.3
3명	67.3	237.9
4명	70.8	217.1
5명 이상	68.9	195.6

<표 6-7> 계속

특성	자녀	친구·이웃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62.9	270.6
50~100만원 미만	53.4	241.7
100~150만원 미만	71.9	215.1
150~200만원 미만	64.8	201.9
200~300만원 미만	58.3	194.2
300만원 이상	84.6	170.4
취업유무		
미취업	64.3	220.6
취업중	63.0	248.7
교육수준		
초교 이하	61.9	272.1
초등학교	54.3	216.4
중·고등학교	61.9	206.5
전문대 이상	79.2	145.5
최장기 종사 직종		
고위전문직	73.0	127.2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86.1	133.4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76.2	217.6
생산직 종사자	59.5	258.7
기타(무직포함)	55.3	213.9

접촉빈도의 경우¹²⁾ 노인의 제특성별 접촉이 많은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상반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 성, 연령과 같은 배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점이 보인다.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농어촌 지역노인에 비하여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높지만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적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적은 대신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는 높은 경향

12) 각 관계별(손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로 접촉빈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형제·자매, 단체참여빈도의 경우 R² 값이 너무 적어 보고하지 않음.

을 보인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하여 친구·이웃과의 접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촉이 많은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가구소득, 교육수준, 최장기 종사직종 등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즉,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최장기종사직종의 직종상 지위가 낮을수록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 다양한 접촉기회와 활동이 있어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자체는 적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2. 다변량 분석

가. 연계망의 크기와 다양성

연계망 크기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성, 연령, 건강상태와 더불어 결혼상태, 자녀수, 형제수와 같은 가용한 연계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연계망의 크기가 크다. 이러한 특성을 통제하고도 현재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는 가구소득이라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누적된 경험의 차이를 가져오는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계망의 구성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친족의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유무, 자녀 및 형제자매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고도 근로형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최장기 종사직종과 같은 과거의 계층적 차이와 현재의 계층적 차이가 연계망의 구성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 친족의 비율이 낮고,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계망 중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또한 고위전문직과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는 무직에 비하여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친족 연계를 많이 맺고 있어서 연계망중 친족의 비중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연계끈의 종류는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다양하다. 또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과 같은 연계끈의 가용성이 연계끈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계끈이 다양하고 고위전문직의 경우 제일 다양한 연계끈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후의 사회적 연계에 있어서 현재 및 과거의 계층적 지위가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와 구성에 있어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노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 자본과 인적자본에 있어서의 차이는 노후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가용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어 저출산 및 친족규모의 축소는 가용한 가족관계의 저하를 가져와 노후의 사회적 연계망을 축소시킬 가능성 또한 발견된다.

<표 6-8> 연계망크기의 결정요인 분석

변수명	연계망 크기	친족의 비율	연계근의 종류
절편	-6.44(1.09)***	0.56(0.04)***	6.73(0.30)***
거주지	-0.25(0.15)	-0.01(0.00)	-0.04(0.04)
성	-0.96(0.18)***	0.01(0.01)	-0.06(0.05)
연령	0.13(0.01)***	0.00(0.00)***	-0.04(0.00)***
건강상태	-0.64(0.15)***	0.03(0.00)***	-0.17(0.04)***
결혼상태	1.02(0.17)***	0.02(0.01)***	0.92(0.05)***
자녀수	2.87(0.04)***	0.02(0.00)***	0.09(0.01)***
형제수	1.16(0.04)***	0.01(0.00)***	0.17(0.01)***
근로형태	0.31(0.16)	-0.01(0.01)*	0.07(0.04)
소득수준	0.00(0.00)**	-0.00(0.00)**	0.00(0.00)***
교육수준	0.10(0.02)***	-0.00(0.00)***	0.03(0.01)***
최장기 종사 직종			
고위전문직	0.49(0.35)	-0.03(0.01)**	0.03(0.10)**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0.09(0.36)	-0.01(0.01)**	0.00(0.10)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0.53(0.29)	0.01(0.01)	-0.02(0.08)
생산직 종사자	-0.06(0.24)	0.01(0.01)	-0.04(0.06)
기타(무직포함) (준거)			
R2	0.71	0.19	0.45

주: ***p<0.001. ** p<0.01 * p<0.05

나. 연계망 유형의 결정요인

노인의 연계망 유형에 관한 다범주 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결과에 의하면 전통적 가족중심형과 고립형의 노인은 성, 결혼 상태, 자녀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및 근로형태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무직에 비하여 고위전문직의 경우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일수록, 유배우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고립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립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정가족중심형과 고립형은 성, 건강상태, 자녀수, 근로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고립형보다 수정가족중심형을 이루는 경향이 높다. 또한, 기능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수정가족중심형에 비하여 고립형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녀수의 경우 전통적 가족중심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수정가족중심형을 이룰 가능성이 고립형에 비하여 높다. 또한 일을 하고 있을수록 수정가족중심형을 이룰 가능성이 낮다.

지역사회중심형의 경우 도시지역 거주노인이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에 비하여 고립형보다는 지역사회중심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립형에 비하여 그 가능성이 낮다. 소득수준이나 근로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시켜주지는 않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중심형일 가능성이 높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증대시켜 고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표 6-9> 연계망 유형의 결정요인 분석

변수명	5유형(비교집단: 고립형)							
	전통적 가족중심형		수정 가족중심형		지역사회 중심형		다층형	
	b	(S.E.)	b	(S.E.)	b	(S.E.)	b	(S.E.)
절편	-2.18	(1.13)	-0.53	(1.59)	0.97	(0.78)	-5.03	(1.03) ^{***}
거주지	0.20	(0.17)	0.46	(0.24)	0.47	(0.11) ^{***}	0.21	(0.15)
성	-0.68	(0.20) ^{***}	-0.71	(0.29) [*]	-0.12	(0.13)	-0.15	(0.19)
연령	0.01	(0.01)	-0.02	(0.02)	-0.02	(0.01)	0.04	(0.01) ^{**}
건강상태	-0.26	(0.17)	-0.72	(0.26) ^{**}	0.05	(0.11)	0.27	(0.15)
결혼상태	-0.62	(0.18) ^{***}	-0.39	(0.25)	-0.02	(0.13)	-1.21	(0.18)
자녀수	0.10	(0.04) [*]	0.17	(0.06) ^{**}	0.10	(0.03) ^{***}	0.13	(0.04) ^{***}
소득수준	0.01	(0.00) ^{***}	0.00	(0.00)	0.00	(0.00)	0.01	(0.00) ^{***}
근로형태	-0.37	(0.18) [*]	-0.67	(0.27) [*]	0.03	(0.12)	-0.47	(0.17) ^{**}
교육수준	0.09	(0.02) ^{***}	0.06	(0.03)	0.04	(0.01) [*]	-0.012	(0.02)
최장기 종사 직종 (준거:무직)								
고위전문직	-1.21	(0.37) ^{***}	0.43	(0.48)	-0.21	(0.27)	-2.02	(0.41) ^{***}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0.37	(0.38)	-0.40	(0.59)	0.05	(0.29)	-0.45	(0.40)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0.18	(0.30)	0.19	(0.41)	0.16	(0.24)	-0.05	(0.31)
생산직 종사자	-0.20	(0.26)	-0.16	(0.36)	0.07	(0.20)	0.30	(0.25)
Likelihood Ratio X^2	7035.42(df=14)							

다층형과 고립형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고립형에 비하여 다층형을 이룰 확률이 낮아진다. 즉 나이가 많아지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한편, 자녀수가 많을수록 다층형의 가능성이 고립형에 비하여 높다. 이는 다층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립형에 비하여 다른 유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노후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층형일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다른 유형의 경우와 함께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립형에 비하여 다른 유형의 연계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립형 대비 다층형의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인이 가장 장기간 종사한 직업이 고위전문직인 경우 고립형에 비하여 다층형의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다. 접촉빈도

접촉빈도는 노인의 제특성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의 특성이 가장 많이 보고된 접촉이 많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촉빈도를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인관련 변수는 거주지역, 자녀동거 여부, 노인의 소득수준과 직업 등이다. 또한 자녀의 특성으로는 자녀의 성, 자녀의 가족상황, 자녀의 직업, 거주거리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면 별거자녀와의 접촉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에 대한 의무감과 실제적인 접촉이유 등의 발생이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접촉이 빈번하며 고위전문직이나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등과 같은 계층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졌던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높다. 이는 노인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 자녀와의 접촉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남자인 경우 접촉빈도가 높는데 이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가 맞벌이를 하고 있을 경우 접촉빈도가 매우 높는데 이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양육 등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모를 위한 접촉이라기보다는 자녀의 필요에 의한 접촉이라는 측면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부모가 맞벌이 가족의 일과 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와 접촉빈도가 높다는 점도 두드러지는 점인데 이는 직업이 있는 경우 절대적인 시간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거주거리라고 하는 물리적 요건 또한 부모와의 접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친구·이웃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노인이 농어촌지역 노인에 비하여 접촉빈도가 낮고 결혼하거나 별거자녀수가 많을수록 친구·이웃과의 접촉이 낮아져 친구·이웃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선택되는 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낮다.

<표 6-10> 빈번한 접촉을 하는 자녀/친구·이웃의 접촉빈도 결정요인

변수	자녀와의 접촉빈도	친구·이웃
절편	264.3(30.3)***	273.4(48.3)***
<노인의 특성>		
거주지	-10.2(3.9)**	-24.6(6.7)***
성	-2.0(4.8)	-8.1(7.9)
연령	-0.8(0.5)	0.5(0.6)
건강상태	0.4(3.8)	-14.3(6.6)
결혼상태	-3.2(4.4)	-12.4(7.4)
자녀동거 여부	-13.7(4.4)**	-18.7(7.4)*
별거자녀수	-0.7(1.2)	1.0(1.7)
친구·이웃수	-	-2.6(1.6)
소득수준	0.9(0.0)**	11.8(7.1)
교육수준	0.46(0.5)	-0.1(0.0)**
근로형태	-2.5(4.1)	-7.3(0.9)***
최장기 종사 직종		
고위전문직	14.8(9.0)	-18.5(15.2)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26.0(9.5)**	-33.0(16.1)*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9.2(7.5)*	3.1(12.9)
생산직 종사자	8.2(6.4)	19.5(11.0)
<자녀의 특성>		
형제자매순위	0.4(1.5)	-
자녀의 성	9.1(3.5)**	-
연령	0.2(0.4)	-
가족상황(준거:홀벌이부부)		
맞벌이	19.4(3.8)***	-
미취업	-24.2(13.9)	-
무배우	-2.3(7.2)	-
자녀의 직업(준거: 무직)		
고위전문직	-30.6(12.2)*	-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28.1(12.1)*	-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4.9(13.2)	-
생산직 종사자	-32.8(11.6)**	-
거주거리	-40.1(1.2)***	-
R ²	0.32***	0.16***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경제적 자원과 구분되는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연계망에 나타난 불평등에 주목한 본장의 연구는 평생경험해온 불평등이 누적되어 노후의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 가구소득이라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수준, 최장기 종사직업이라고 하는 생애사적 불평등의 누적적 요인이 사회적 연계망의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경제적 자원의 규모를 보여주는 소득수준의 경우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사회적 연계망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소득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연계망의 크기가 크며 친족의 비율이 낮고 연계망이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낮다.

<표 6-11> 사회적 연계망에 나타난 노후불평등 (요약)

	연계망 크기	연계망의 다양성		연계망 유형	접촉빈도	
		친족의 비율	연계망의 종류		자녀	친구·이웃
소득수준	○	○	○	○	△	×
교육수준	○*	○*	○*	△	×	△
최장기종사 직업	×	△	△	△	△	△
연계망 가용성	○*	○*	○*	○	×	×
주요 배경변수	성, 연령, 건강	연령, 건강	연령, 건강	거주지, 성, 연령, 건강	거주지, 자녀동거 여부, 자녀특성	거주지, 자녀동거 여부

한편, 교육수준은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계망의 크기도 크며 다양한 연계끈을 갖고 있는 등 연계망의 크기와 구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교육수준이라고 하는 인적자본이 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년기에 자녀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형화한 연계망 유형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층적 연계망을 가질 확률을 높게 갖고 있다.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번하여 연계망의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수준이 높을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최장기 종사 직업의 경우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성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위 전문직이나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의 경우 타 직업에 비하여 연계망의 구성이 다양하다. 즉 이들 집단은 다양한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와의 접촉빈도에서는 노인의 최장기 종사직종이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의 경우 자녀와 좀 더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접촉빈도가 높다는 점과 함께 고려해보면, 자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중산층적 특성을 갖고 있는 노부모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자녀의 지위상승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맞벌이하는 자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감을 많이 느끼는 중산층의 경우, 상류층처럼 대체인력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노부모가 직접 중요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인의 거주지, 건강상태, 성 등이 중요한 배경적 변수로 나타

났으며,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있어서의 노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맞벌이 여부, 자녀의 성, 거주거리 등과 같은 자녀의 특성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계망 유형에 관한 분석결과 우리사회에서의 노년기의 세대관계는 동거부양에서 별거하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정확대가족으로 무개의 중심이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자원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크게 존재하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서적 유대, 정보의 교환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적 연계망의 불평등은 무시할 수 없는 노후의 삶의 불평등의 한 측면이다.

둘째, 노후의 사회적 연계는 현재 및 과거의 계층적 지위의 영향력 하에 있다. 즉 전통적 자본과 인적자본에 있어서의 차이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본간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노후의 사회적 연계에 있어 자녀를 비롯한 가족관계의 가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출산 및 친족규모의 축소는 가용한 가족관계의 저하를 가져와 노후의 사회적 연계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시대에서의 노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있어 어떻게 의미있는 비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친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조소득 노인인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은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사회적 연계망 자체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조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연계망의 다차원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한 좀더 조밀한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제1절 서론

건강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삶의 질의 핵심이며, 건강이 쇠락하는 노년기에 그 중요성은 극대화된다. 특히 사회 환경과 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년기 건강은 당사자인 노인 개인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과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이미숙, 1999: 195).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속도로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하여 재정안정과 사회발전의 중대한 압박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정형선·송양민·이규식, 2007). 이에 따라 노년기 건강문제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중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노년기 건강문제의 관건은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남자 75.1세, 여자 81.9세인데 비해서(통계청, 2006),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남자가 68.5세, 여자가 69.6세인 것으로 보고된다(강은정 외, 2007: 81). 이는 오래 살지만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겪는 기간이 길어지는 노년기 건강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질병구조는 만성질환이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의 일반적 질병구조의 양상인 것으로 보고된다(이규식, 2003). 실제로 2005년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과 사고를 제외하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 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및 폐렴 등 모두가 만성질환으로 구성되며(통계청, 2006b), 이러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에서 노년층은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하겠다.

의료사회학자들은 만성질환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과 병리적 과정에만 초점을 두는 생의학적(Biomedical)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건강과 질병을 사회적 산물로 간주하며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는 의료사회학자들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개인이 처한 사회적 및 환경적 조건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Jones, 1994. pp. 1-6; Link and Phelan, 1995).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속성을 강조하는 의료사회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또는 지리적 위치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기회나 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수준의 차이를 구조화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왔으며, 이를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ies)으로 개념화하였다(Alwin and Wray, 2005; House, 2001). 지난 이삼십년간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사회 환경 개선과 의료의 발달로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준이 절대적으로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간의 건강 격차가 여전히 상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이미숙, 2005 재인용; House, 2001).

이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제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강영호, 2007; House et al., 2005).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에서도 사회집단 간 건강격차의 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포함되고 있다(강혜원·조영태, 2007).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의해 건강수준의 격차가 나타나는 건강불평등의 양상은 노년기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생물학적 기능이 감퇴함에 따라 건강이 쇠락하는 집단으로서 확일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노년기 건강상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국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강혜원·조영태, 2007; 김승곤, 2004; 김진영, 2007; 김혜련·강영호·윤강재·김창석, 2004; 우혜봉·윤인진, 2001; Grundy·Slogget, 2003; House et al., 1994; Multau·Schooler, 2002). 오히려 교육수준과 같이 생애 전반기에 결정된 사회적 조건들이 생애에 걸쳐 개인의 삶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불평등이 노년기에 더욱 심화된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Breeze et al., 2001; Herd et al., 2007; House et al., 1994; 2005).

노년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불평등의 차원에서 건강상태를 규명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승미(2002) 및 강혜원·조영태(2007)의 두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능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노인의 건강격차의 기제를 분석함으로써, 만성질환 여부와 같은 의료적 건강상태나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행동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우혜봉·윤인진(2001)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기능적 건강 및 의료적 건강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영역으로 검증되어야 할 정신적 건강에 대한 규명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이들 연구가 우리나라 노년기 건강불평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노년기 건강불평등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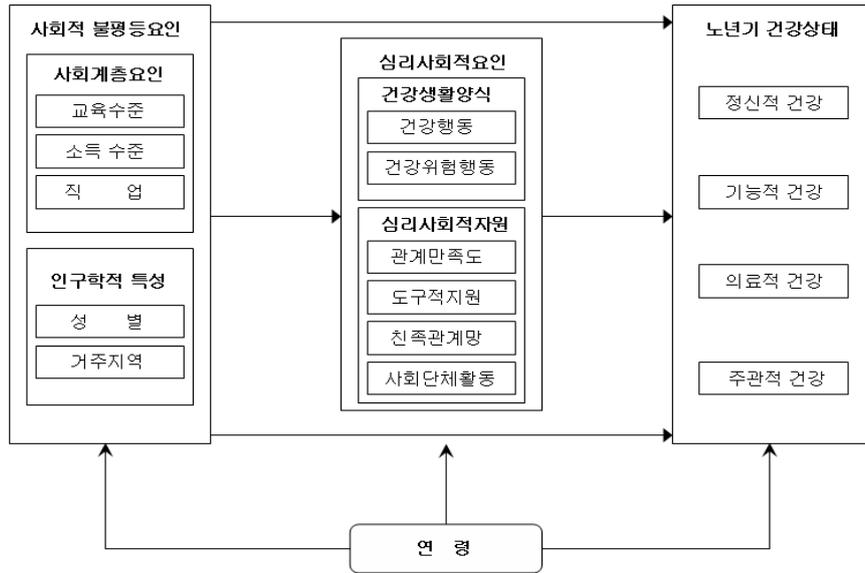
다차원적인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 요인과 이들 요인이 건강격차를 만들어 내는 기제를 규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의료사회학적 이론 및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년기 건강불평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앞서, 제2장을 통해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건강상태의 격차를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교육, 직업 및 소득의 사회계층 요인과 함께 성별과 거주지역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들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에 의해 노년기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의 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위험행동과 심리사회적 자원을 중간변수로 설정하며, 이들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을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노년기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이 단순히 질병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 차원의 통합된 안녕을 의미하는 세계보건기구(WHO, 1974)의 공식정의 및 신체적 건강을 의료적 차원, 기능적 차원 및 자기평가적 차원으로 분류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김정희, 1994)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건강상태를 정신적 건강, 기능적 건강, 의료적 건강 및 주관적 건강의 4개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불평등 요인, 심리사회적 중간기제 및 결과적 양상으로서 노년기 건강상태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이 연구의 내용은 [그림 7-1]의 연구 모델로 요약된다.

[그림 7-1] 연구모델: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요인과 심리사회적 기제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도 개혁 및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조사 항목은 7개 조사영역(A. 인구, B. 가족, C. 건강, D. 고용, E. 소득, F. 자산, G.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으로 구성된다.

인구학적 변수 외에 건강, 가족, 고용 및 소득 등 다양한 영역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공공자료 중 노년기 건강상태에 관련되는 사회적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로 고려되었다.

<표 7-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성별 (N=4155)	남자	1736	41.8	41.8
	여자	2419	58.2	100.0
연령 (N=4155)	65-69세	1505	36.2	36.2
	70-74세	1171	28.2	64.4
	75-79세	823	19.8	84.2
	80-84세	423	10.2	94.4
	85-89세	160	3.9	98.2
	90+	73	1.8	100.0
교육수준 (N=4134)	무학	1694	41.0	41.0
	초등학교졸업	1305	31.6	72.6
	중학교졸업	414	10.0	82.6
	고등학교졸업	460	11.1	93.7
	전문대·대학 졸업 대학원이상	249 12	6.0 .3	99.7 100.0
월평균가구소득 (N=3676)	50만원이하	1694	46.1	46.1
	50만원-100만원	672	18.3	64.4
	100만원-150만원	244	6.6	71.0
	150만원-200만원	378	10.3	81.3
	200만원-250만원	273	7.4	88.7
	250만원-300만원 300만원이상	114 301	3.1 8.2	91.8 100.0
가구형태 (N=4155)	독거	621	14.9	14.9
	노인부부가구	1746	42.0	57.0
	2세대가구	873	21.0	78.0
	3세대가구 기타	765 150	18.4 3.6	96.4 100.0
거주지역 (N=4155)	서울	716	17.2	17.2
	광역시	1032	24.8	42.1
	중소도시	1207	29.0	71.1
	읍면부	1200	28.9	100.0

원자료의 전체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약 10,000명의 확률표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만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7-1>에 제시된 분석결과와 같다.

2. 변수 및 척도

사회적 불평등 요인, 심리사회적 기제 및 노년기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주요변수 및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는 <표 7-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2> 주요 변수 및 척도

구분	변수		척도
통제	연령		65세 이상
사회적 불평등 요인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남성
		거주지역	서울/광역시/시/읍면, 도시/농어촌
	사회계층	교육수준	무학/초졸/중졸/고졸/전문대이상/대학원, 교육연한
		소득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심리사회적 기제	건강위험행동	음주/흡연/비만, 규칙적운동/건강검진/민간보험	
	심리사회적 자원	독거여부/자녀+손자녀수/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미래간병인유무/ 참여사회단체수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우울감(1년2주이상)/CES-D ¹⁾ /정신질환의사진단	
	기능적 건강상태	ADL지수 ²⁾ , IADL지수 ³⁾	
	의료적 건강상태	고혈압/당뇨/암/만성폐질환/간질환/심장질환/ 뇌혈관/ 관절염류마티스/전립선/요실금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5점)/상대적건강만족도(100점)	
	건강상태(통합) ⁴⁾	정신적, 기능적, 의료적, 주관적 건강상태	

주: 1)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atistics-Depression 척도의 10개 항목 중 일주일간 하루 이틀 이상 증세를 경험한 항목의 수, 4개 이상일 경우 위험집단.
 2) ADL지수 :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7개 항목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의 수.
 3) IADL: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교통 수단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걸고받기, 약챙겨먹기 10개 항목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의 수.
 4) 건강상태(통합): 건강상태 4개 요인(정신적, 기능적, 의료적 및 주관적 건강)에 대한 요인점수.

제3절 분석결과

1. 연구대상 노인집단의 전반적 건강상태

이 연구에서는 건강을 다차원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정신적 건강, 기능적 건강, 의료적 건강 및 주관적 건강의 4개 차원에서 연구대상자인 노인 집단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표 7-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일 년 동안 2주 이상 우울 증세를 경험’한 여부에 대한 주관적 척도에서 전체 대상 노인의 15.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준화된 우울증 척도(CES-D)의 10개 항목을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44.6%가 척도 점수 4점 이상인 우울증세의 위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반 정도가 우울증세의 위험이 있으며, 노인들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에 비해 실제로 훨씬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의 위험집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우울 증세를 보이는 노인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비율은 2.9%로 매우 낮아서,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우울 증세와 관련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인식부족과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 우울증은 보다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울 증세를 가진 환자들이 전문가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직접 찾지 않고 신체화된 증세만으로 반복적인 진료를 받음으로써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노년기 우울증은 노인 개인의 복지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률의 증가 등 사회병리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한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함께 노인 인구의 우울 증세를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7-3> 정신적 건강상태

척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우울증 2주 이상 (N=4155)	없다	3524	84.8	84.8
	있다	631	15.2	100.0
CES-D10 기준 우울증 (N=4123)	없다	2286	55.4	55.4
	있다	1837	44.6	100.0
정신과 질환 진단 (N=4155)	없다	4035	97.1	97.1
	있다	120	2.9	100.0

두 번째로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가 건강상태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7개 문항(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기능을 측정하는 10개 문항(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의 수를 각각 기능적 건강상태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표 7-4>에 제시된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인 90.4%의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기능에 불편이 없고, 약 10%의 노인이 ADL 항목 중 하나 이상 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관리 등 도구적 기능의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좀 더 높은 비율인 약 25%의 노인이 하나 이상의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기능적 건강상태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ADL (N=4155)	.00	3757	90.4	90.4
	1.00	111	2.7	93.1
	2.00	62	1.5	94.6
	3.00	37	.9	95.5
	4+	188	4.5	100.0
IADL (N=4155)	.00	3121	75.1	75.1
	1.00	224	5.4	80.5
	2.00	177	4.3	84.8
	3.00	123	3.0	87.7
	4+	510	12.3	100.0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노년기 건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질환 유병이라 하겠다. <표 7-5>는 10대 주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노인집단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의 노인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 26%의 노인들이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으며 전체의 약 20%에 달하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수반함으로써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당뇨병 진단도 약 17%의 노인에 해당되고, 다음으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폐질환, 암 및 악성종양, 간질환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에만 해당하는 전립선의 경우 9.7%가, 여성 노인에만 해당하는 요실금의 경우는 0.8%의 유병률을 보임으로써 남성 노인의 전립선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5> 의료적 건강상태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고혈압 (N=4155)	없다	2515	60.5	60.5
	진단Y_일상N ¹⁾	1107	26.6	87.1
	진단Y_일상Y ²⁾	535	12.9	100.0
당뇨병 (N=4154)	없다	3475	83.7	83.7
	진단Y_일상N	394	9.5	93.1
	진단Y_일상Y	285	6.9	100.0
암 및 악성 종양 (N=4155)	없다	4043	97.3	97.3
	진단Y_일상N	51	1.2	98.5
	진단Y_일상Y	61	1.5	100.0
만성폐질환 (N=4155)	없다	4007	96.4	96.4
	진단Y_일상N	68	1.6	98.1
	진단Y_일상Y	80	1.9	100.0
간질환 (N=4154)	없다	4091	98.5	98.5
	진단Y_일상N	42	1.0	99.5
	진단Y_일상Y	21	.5	100.0
심장질환 (N=4155)	없다	3839	92.4	92.4
	진단Y_일상N	116	2.7	95.1
	진단Y_일상Y	203	4.9	100.0
뇌혈관 (N=4155)	없다	3920	94.3	94.3
	진단Y_일상N	46	1.1	95.5
	진단Y_일상Y	189	4.5	100.0
관절염 및 류마티스 (N=4154)	없다	3070	73.9	73.9
	진단Y_일상N	252	6.1	80.0
	진단Y_일상Y	832	20.0	100.0
전립선 (남성, N=1735)	없다	1566	90.3	90.3
	진단Y_일상N	116	6.7	96.9
	진단Y_일상Y	53	3.1	100.0
요실금 (여성, N=1930)	없다	1915	99.2	99.2
	진단Y_일상N	11	.6	99.8
	진단Y_일상Y	4	.2	100.0

주: ¹⁾ 의사진단 있으나(Yes), 일상생활 어려움은 없음(No)

²⁾ 의사진단 있고(Yes),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있음(Yes)

전체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어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으나, 많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의 고통을 겪고 있어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의 차원에서나 가족과 국가의 의료비용 차원의 부담이 크다. 의학적 처방과 치료에만 초점을 두는 의료중심의 관점을 벗어나 노년기 만성질환을 사회적 건강과 부담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떤 노인들이 만성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이러한 취약성이 노화라는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끝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노년기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분석하였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질병의 이환 및 유병 등 객관적인 상태와 매우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개인의 건강수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척도로서 고려되고 있다(Ross and Bird, 1994). 이 연구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5점 척도)’ 및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100점 척도)’를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척도로 활용하였다.

<표 7-6>의 분석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으로 평가하는데 비해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가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함으로써 건강이 쇠락하는 노인집단의 특성이 드러난다. 한편, <표 7-6>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만족도에서는 58%가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인지하며 42%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40% 이상의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은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노년기 건강문제가 질병이나 평균수명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의 ‘건강한 노화’가 노년기 보건 및 복지 정책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7-6> 주관적 건강 상태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주관적 건강상태 (N=4155)	매우 좋음	59	1.4	1.4
	좋은 편	759	18.3	19.7
	보통	1342	32.3	52.0
	나쁜 편	1513	36.4	88.4
	매우 나쁨	482	11.6	100.0
건강 상태 만족도 (동년배 비교) (N=4155)	0	345	8.3	8.3
	10	188	4.5	12.8
	20	290	7.0	19.8
	30	503	12.1	31.9
	40	345	8.3	40.2
	50	740	17.8	58.0
	60	551	13.3	71.3
	70	563	13.5	84.8
	80	402	9.7	94.5
	90	134	3.2	97.7
	100	94	2.3	100.0

2. 노년기 건강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

가. 정신적 건강불평등

표준화된 CES-D 척도를 정신적 건강상태의 지표로서 적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노인집단의 우울증세의 수준을 ‘불평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생애에 걸쳐 삶의 조건의 차이를 만드는 교육, 소득, 직업의 사회계층 요인과 함께 성별 및 거주지역을 고려하였다. 먼저 <표 7-7>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게 되면, 65세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CES-D 척도에 의한 우울증세의 점수가 일관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일하위집단에 대한 비교 검증(Scheffe test)의 결과를 살펴 보게 되면, 75~79세 연령대가 우울증세의 위험집단으로 전환되는 초고령

전환 시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울증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높은 우울증세는 여성 노인들이 경험해 온 사회적 조건의 상대적 불평등에 기인할 가능성, 즉 젠더 효과로 볼 수 있겠으나, 관련 변수들 통제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표 7-7>의 분석결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령 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연령 효과를 통제한 분석모델에서 검증하기로 한다.

<표 7-7>에서 거주지역은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및 읍면부(농어촌)로 분류한 것으로서, 거주지역에 따른 삶의 조건이 노인집단의 우울증세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우울증세의 차이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 요인 중에서 우선 교육수준에 따라 우울증세의 점수가 일관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의 차원에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존의 노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House et. al., 2005), 노년기의 정신건강이 교육수준에 따른 생애 경험과 삶의 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양상으로 이해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하위집단 분석결과,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 간에 우울증세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의 경우 성장기에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무학이 41%에 달하였다. 이후 이들 노인세대가 살아 온 생애는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화의 역사였다.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노인들과 최소한의 학교교육을 통해 문자를 해독하고 근대교육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노인들 사이에는 이후 생애

과정에 걸쳐 사회적 적응력의 의미 있는 차이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증세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한 증세만이 아니라, 성장기의 최소한의 교육차이로 인한 사회 적응력 및 삶의 조건의 차이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불평등 양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세가 높게 나타나는, 즉 사회계층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불평등의 양상을 보인다. 특히 동일집단분석에서 50만 원 이하의 빈곤층이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의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개인의 삶의 조건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의 경우 생애에 걸친 직업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원자료에서 최종 직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우울증세의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고위전문직, 준전문가 및 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집단과 서비스 및 판매, 생산직, 주부와 무직 등 기타 집단 사이에 노년기 우울증세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직 등 직업지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였던 노인들이 전문직이나 사무직 등 상대적으로 직업지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였던 노인들에 비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우울증세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직업지위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이상 <표 7-7>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개인의 삶의 조건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 및 직업의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노년기 우울증세의 정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소득 및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우울증세의 정도가 높아지는 불평등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무학의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이하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은 노인집단이 정신건강의 차원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CES-D)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정신적 건강상태(CES-D)		
		평균	동일하위집단 ¹⁾	차이 검증 ²⁾
성별 (N=4122)	남자	17.14		t=-9.718***
	여자	18.83		
연령 (N=4122)	65-69세	17.34	A	F=19.104***
	70-74세	17.81	A B	
	75-79세	18.81	A B C	
	80-84세	19.41	B C	
	85-89세	19.99	C	
	90세+	20.54	C	
교육수준 (N=4101)	무학	19.51	A	F=42.283***
	초등학교졸업	17.75	A B	
	중학교졸업	17.09	A B	
	고등학교졸업	16.29	A B	
	전문대_대학졸업	16.14	B	
	대학원이상	14.67	B	
월평균가구소득 (N=3646)	50만원이하	19.06	A	F=16.911***
	50만원-100만원	17.67	A B	
	100만원-150만원	17.57	A B	
	150만원-200만원	17.00	B	
	200만원-250만원	16.87	B	
	250만원-300만원	16.67	B	
	300만원이상	17.02	B	
최종 직업 (N=4122)	고위전문직	16.03	A	F=9.982***
	준전문가및사무직	16.75	A	
	서비스및판매	18.29	B	
	생산직	18.37	B	
	기타(무직 등)	18.28	B	
거주지역 (N=4155)	서울	18.32		F=2.234
	광역시	18.03		
	중소도시	17.83		
	읍면부	18.38		

주: ¹⁾ Scheffe test using harmonic mean sample size

²⁾ * p<.05, ** p<.01, *** p<.001

나. 기능적 건강불평등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신체적 기능 상태가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 및 직업 등에 의해 경험된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적 양상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8> 및 <표 7-9>와 같다. 자료분석은 정신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7-8>의 종속변수는 ADL 지수로서 일상생활의 기능 7개 항목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의 수로서, ADL지수가 높을수록 기능 장애가 많아 기능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표 7-8>의 분석결과에서 일상생활 수행 기능은 연령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하고, 나머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들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는 신체적인 기능이 생애과정에서 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삶의 질과 관련되기 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연령에 따라 점점 더 악화되는 노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된다.

연령변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를 동일하위집단 분석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5~79세를 전후해서 기능저하가 뚜렷하고, 이후 85세에서 기능저하가 다시 한 번 심화되고, 90세를 넘으면 일상생활 기능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ADL 10개 항목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 수를 측정한 IADL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표 7-9>에서도 사회적 불평등 요인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다. 일상생활 기능(ADL)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기능(IADL)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하되는 노화의 현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서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도구적 기능의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결과로부터 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삶의 조건이 서울과 농어촌에 비해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불평등의 양상을 추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표 7-8>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능적 건강상태(ADL)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기능적 건강상태(ADL)		
		평균	동일하위집단 ¹⁾	차이 검증 ²⁾
성별 (N=4154)	남자	.38		t= .872
	여자	.34		
연령 (N=4155)	65-69세	.13	A	F=66.104***
	70-74세	.23	A	
	75-79세	.43	A B	
	80-84세	.66	B	
	85-89세	1.47	C	
	90세+	2.03	D	
교육수준 (N=4134)	무학	.50		F=6.593***
	초등학교졸업	.27		
	중학교졸업	.20		
	고등학교졸업	.28		
	전문대_대학졸업	.34		
	대학원이상	.00		
월평균가구소득 (N=3676)	50만원이하	.36		F=1.519
	50만원-100만원	.28		
	100만원-150만원	.33		
	150만원-200만원	.43		
	200만원-250만원	.25		
	250만원-300만원	.46		
	300만원이상	.39		
최종 직업 (N=4155)	고위전문직	.40		F=1.027
	준전문가및사무직	.27		
	서비스및판매	.22		
	생산직	.37		
	기타(무직 등)	.37		
거주지역 (N=4155)	서울	.40		F=.626
	광역시	.37		
	중소도시	.35		
	읍면부	.32		

주: 1) Scheffe test using harmonic mean sample size
 2) * p<.05, ** p<.01, *** p<.001

연령에 따라 도구적 기능이 저하되는 정도를 <표 7-9>에서 살펴보면, 도구적 기능은 일상생활 기능에 비해 기능 저하의 연령대가 빨리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0~74세를 전후해서 변화가 뚜렷하고, 80세 이후에는 5년 단위의 연령 차이에 따라 도구적 기능의 저하가 심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표 7-8>과 <표 7-9>의 기능적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노년기에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기능이나 생활관리 등 도구적인 기능은 성별, 교육,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요인과 관련되기 보다는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의료적 건강불평등

의사의 진단에 의한 만성질환의 유병 상태를 의료적 건강상태로 개념화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9개의 주요 만성질환 중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질환의 개수를 의료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표로 적용하였다. <표 7-10>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에 따른 의료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연령에 따른 만성질환의 유병상태를 살펴보면, 65세 이후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의 숫자가 증가하다가 75세~79세에 이르러 최대치가 되고(평균 .6877),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90세 이후에는 거의 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평균 .3973). 이는 노화의 진행과 더불어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다가 평균 수명에 가까운 75세~79세에 정점을 이루고, 80세 이후에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노인들은 사망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의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에 의해 평균적인 만성질환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9>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능적 건강상태(IADL)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기능적 건강상태(IADL)		
		평균	동일하위집단 ¹⁾	차이 검증 ²⁾
성별 (N=4154)	남자	1.04		t=-1.818
	여자	1.19		
연령 (N=4155)	65-69세	.45	A	F=153.304***
	70-74세	.77	A B	
	75-79세	1.34	B	
	80-84세	2.27	C	
	85-89세	4.05	D	
	90세+	5.42	E	
교육수준 (N=4134)	무학	1.62		F=22.560***
	초등학교졸업	.82		
	중학교졸업	.73		
	고등학교졸업	.76		
	전문대_대학졸업	.77		
	대학원이상	.25		
월평균가구소득 (N=3676)	50만원이하	1.10		F=2.250*
	50만원-100만원	.97		
	100만원-150만원	1.13		
	150만원-200만원	1.39		
	200만원-250만원	.95		
	250만원-300만원	1.40		
	300만원이상	1.41		
최종 직업 (N=4155)	고위전문직	1.05		F=1.657
	준전문가및사무직	.83		
	서비스및판매	.91		
	생산직	1.09		
	기타(무직 등)	1.18		
거주지역 (N=4155)	서울	1.43	B	F=4.781**
	광역시	1.03	A	
	중소도시	1.01	A	
	읍면부	1.14	A B	

주: ¹⁾ Scheffe test using harmonic mean sample size

²⁾ * p<.05, ** p<.01, *** p<.001

<표 7-10>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적 건강상태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의료적 건강상태(만성질환수)			
		평균	동일하위집단 ¹⁾		차이 검증 ²⁾
성별 (N=4154)	남자	.4143			t=-1.818***
	여자	.6391			
연령 (N=4155)	65-69세	.4412	A	B	F=65.890***
	70-74세	.5679	A	B	
	75-79세	.6877		B	
	80-84세	.5934	A	B	
	85-89세	.5500	A	B	
	90세+	.3973	A		
교육수준 (N=4134)	무학	.6470			F=14.856***
	초등학교졸업	.5556			
	중학교졸업	.4396			
	고등학교졸업	.3370			
	전문대_대학졸업	.3614			
	대학원이상	.2500			
월평균가구소득 (N=3676)	50만원이하	.6151			F=5.622***
	50만원-100만원	.4836			
	100만원-150만원	.4754			
	150만원-200만원	.4577			
	200만원-250만원	.4103			
	250만원-300만원	.3684			
	300만원이상	.5282			
최종 직업 (N=4155)	고위전문직	.3393	A		F=7.314***
	준전문가및사무직	.4222	A	B	
	서비스및판매	.7020		C	
	생산직	.6160		B C	
	기타(무직 등)	.5342	A	B C	
거주지역 (N=4155)	서울	.5908			F=.942
	광역시	.5320			
	중소도시	.5286			
	읍면부	.5442			

주: ¹⁾ Scheffe test using harmonic mean sample size

²⁾ * p<.05, ** p<.01, *** p<.001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따라 노인집단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여성 노인(평균 .4143)이 남성 노인(평균 .6391)에 비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더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병률이나 유병기간이 더 길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하겠다(Ross · Bird, 1994; Verbrugge, 1989).

그런데 <표 7-10>의 결과만으로는 성별에 따른 질환 수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남성과 여성이 경험해 온 사회적 조건이나 삶의 질의 차이에서 기인한 불평등의 양상인지는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들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서 더 많은 의료 수요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의료시설이나 생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집단의 만성질환의 수를 비교해 보았다. <표 7-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및 읍면부로 구분한 거주지역에 따라 만성질환의 보유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교육, 소득 및 직업의 사회계층 요인은 공히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6470)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2500)에 이르기까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만성질환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해서도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노인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수가 평균 0.5282개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사한 와병상태에 있는 노인들 중 고소득 집단이 보다 쉽게 의사의 진단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표 7-10>의 분석결과 만으로는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을 기준으로 직업과 노년기 만성질환 유병의 관

계를 살펴보면, 고위전문직에 종사하였던 노인집단이 평균적으로 낮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가장 적고(.3393), 다음으로 준전문 및 사무직, 생산직 순이며 서스비 및 판매직에 종사하였던 노인들에게서 만성질환의 수가 가장 많았다(.7020). 노인들이 생애과정에서 종사하였던 직업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소한 은퇴 시 직업이 노년기 만성질환 유병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 이전의 직업 경험에 의한 차별화된 삶의 질이 누적되어 노년기의 만성질환의 유병에 차이를 만드는 불평등의 양상을 시사한다.

이상 <표 7-10>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노인들이 낮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성별이나 교육, 직업, 소득 등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가 노년기 만성질환 유병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링크와 펠런(Link and Phelan, 1995)의 주장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로써 노년기 만성질환을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과 의료적 대응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차, 교육, 소득, 직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차별화된 삶의 기회와 조건에 따라 만성질환의 이환 및 치료의 경험이 달라지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 주관적 건강불평등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표 7-11>의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65세 이후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가 점점 나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¹³⁾ 동일집단 후속 검증에 의하면 70세 및 75세가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75세

13) 주관적 건강평가 척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쁨(1), 나쁜 편(2), 보통(3), 좋은 편(4), 매우 좋음(5)

이상의 연령집단이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동일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75세가 노년기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정신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상태 및 의료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75세가 건강수준 저하의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되는 것과 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 밖에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고려된 모든 변수들이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자신의 건강을 더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여성 노인의 낮은 평가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삶의 조건을 경험해 온 성(젠더)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겠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거주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좋게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평균 2.72)과 읍면부 지역 노인(평균 2.54)들 사이에 주관적 건강상태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주관적 건강평가에는 신체적 기능과 함께 심리적 속성이 포함되는데, 복잡하고 경쟁적인 수도 서울이라는 사회 환경에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겠으나, 여타 관련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표 7-11>의 결과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회계층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구대상 노인의 교육수준이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일관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집단 분석의 결과를

보게 되면, 무학인 집단(평균 2.35)이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뚜렷한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우울증세를 지표로 한 정신적 건강상태에서도 무학인 집단이 취약집단으로 나타났던 <표 7-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신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속성이라는 점에서 이 둘 두 가지 차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은 무학집단의 건강위험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척도와 분석모델의 타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수준에 있어서도 소득이 많을수록 노인집단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동일집단 분석결과를 보면, 특히 50만원 이하로 가장 빈곤한 노인 집단이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집단에 비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인 200만원~250만원인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데, 소득이 더 많은 노인들과의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를 교육수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무학의 학력과 50만 원 이하의 월소득 노인집단의 건강 취약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은퇴 시기의 최종 직업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에서는 고위전문직과 준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이 서비스 및 판매직 또는 생산직 종사 노인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이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특징되는 직종의 계층화 양상이 노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7-11>의 결과를 종합해 보게 되면, 65세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건강수준이 성별, 거주지역, 교육, 소득, 직업 등 사회적 불평등의 속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들 요인에 의해 차별화된 생애 경험과 삶의 조건이 노년기 주관적 건강인식의 격차로 나타나는 건강불평등의 양상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11>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건강상태(5점 척도)		
		평균	동일하위집단 ¹⁾	차이 검증 ²⁾
성별 (N=4155)	남자	2.83		t=-12.512***
	여자	2.46		
연령 (N=4122)	65-69세	2.78	A	F=24.663***
	70-74세	2.66	A B	
	75-79세	2.42	B C	
	80-84세	2.42	B C	
	85-89세	2.34	C	
	90세+	2.34	C	
교육수준 (N=4101)	무학	2.35	A	F=70.122***
	초등학교졸업	2.64	A B	
	중학교졸업	2.88	A B	
	고등학교졸업	3.01	B	
	전문대_대학졸업	3.06	B	
	대학원이상	4.08	C	
월평균가구소득 (N=3675)	50만원이하	2.43	A	F=23.524***
	50만원-100만원	2.72	B	
	100만원-150만원	2.72	B	
	150만원-200만원	2.80	B	
	200만원-250만원	2.90	B	
	250만원-300만원	2.86	B	
	300만원이상	2.86	B	
최종 직업 (N=4155)	고위전문직	3.08	A	F=24.543***
	준전문가및사무직	2.99	A	
	서비스및판매	2.50	B	
	생산직	2.46	B	
	기타(무직 등)	2.61	B	
거주지역 (N=4155)	서울	2.72	A	F=6.285***
	광역시	2.65	A B	
	중소도시	2.60	A B	
	읍면부	2.54	B	

주: ¹⁾ Scheffe test using harmonic mean sample size

²⁾ * p<.05, ** p<.01, *** p<.001

3.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이상에서는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의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정신적, 기능적, 의료적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분석결과로부터 건강불평등의 양상에 대한 함의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분석모델은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따른 건강수준의 단순한 차이를 검증하였을 뿐,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들이 어떤 기제를 통해서 건강차이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노년기 건강불평등은 노년기의 건강상태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학적 특성과는 무관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건강과 관련되는 삶의 조건이나 경험의 차이가 나게 되고 그 결과 건강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심리사회적 자원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평등 요인들이 노년기 건강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기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심리사회적 자원과 위험요인에 대한 가설은 교육, 소득, 직업 등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그 자체로 건강과 직접 관련되거나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요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필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동 또는 장애가 되는 위험행동을 달리 하도록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심리사회적 자원과 건강위험행동을 사회적 불평등 요인과 노년기 건강상태를 매개하는 중간변수로 설정하여 노년기 건강불평등을 구조를 정신적, 기능적, 의료적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각기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¹⁴⁾ 경로분석의 모델 구성함에 있어, 건강불평등의 차원에서

14) 심리사회적 자원은 독거여부, 자녀와 손자녀 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미래의 간병수발자 여부 및 참여하는 사회단체수의 5개 항목에 대한 요인변수로 산출하였으며, 건

직업의 중요성이 크지만 이 연구의 원자료가 은퇴 시 직업에 한정되어 제외하고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 만 사회계층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정신적 건강불평등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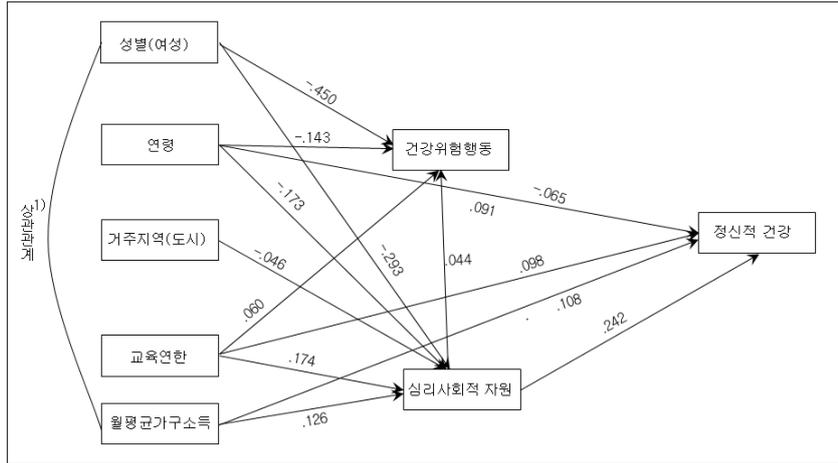
노년기 정신건강의 불평등 구조를 규명한 분석모델과 결과는 [그림 7-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정신적 건강상태는 우울증세를 측정된 CES-D 척도점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상태로 측정되었다. [그림 7-2]의 경로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할 경우 성별과 거주지역은 노년기 정신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만드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성별의 효과는 심리사회적 자원을 매개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293 \times .242 = -.071$). 이로써 앞서 <표 7-7>에서 제시되었던 우울증세의 성차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보다 여성과 남성이 갖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차이, 즉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젠더’ 효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거주지역은 서울, 광역시 및 기타 시를 도시로, 읍·면부를 농어촌으로 분류하여 지역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¹⁵⁾ [그림 7-2]의 분석결과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농어촌 노인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자원이 적고, 그 결과 우울증세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간접효과: $-.046 \times .242 = -.011$). 이는 농어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에 비해서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의미인데, 농어촌이 친족이나 이웃관계 등 심리사회적 자원을 얻기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위험행동은 음주여부, 흡연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비만여부, 무료1차 건강검진여부 및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의 6개 항목에 대한 요인변수로 산출하였다.

15) 도시와 농어촌의 거주지역 구분은 이후의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림 7-2]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주: 1) 외생변수 간 상관관계 표시 생략
2) 경로계수: 표준화 회귀계수(P<.05)

사회계층 요인의 효과를 보게 되면, 노인들의 교육연한이 길수록 심리 사회적 자원이 많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아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며(간접효과: $.173 \times .242 = .042$),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교육연한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나는 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직접효과: $.098$). 이것은 교육수준이 개인에게 심리사회적 자원을 풍부하게 해 줌으로써 노년기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그 밖에도 교육수준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의미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본 소득 수준의 효과도 교육수준의 효과와 유사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자원의 확보에 유리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아지는 양상과 함께(간접효과: $.126 \times .242 = .030$), 그 밖에도 소득이 높을수록 노년기 우울 증세의 정도가 낮아져 정신건강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직접효과: $-.078$).

끝으로 [그림 7-2]에서 사회적 불평등 요인과 중간기제 요인을 모두 통

제하고도 연령이 노년기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직접효과: $-.065$). 이는 우울 증세를 지표로 한 노년기 정신건강의 상태가 불평등의 양상인 동시에, 연령 증가에 따른 생물학적 노화의 현상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나. 기능적 건강불평등의 구조

앞에서 제시하였던 <표 7-8> 및 <표 7-9>에 의하면,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은 거의 전적으로 연령, 즉 노화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 7-8>과 <표 7-9>의 분석에서는 관련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적 불평등 요인들이 노인들의 기능적 건강상태에 관련되는 기제 및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림 7-3]에서 기능적 건강상태는 ADL지수 및 IADL지수를 역코딩한 요인점수를 척도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인 기능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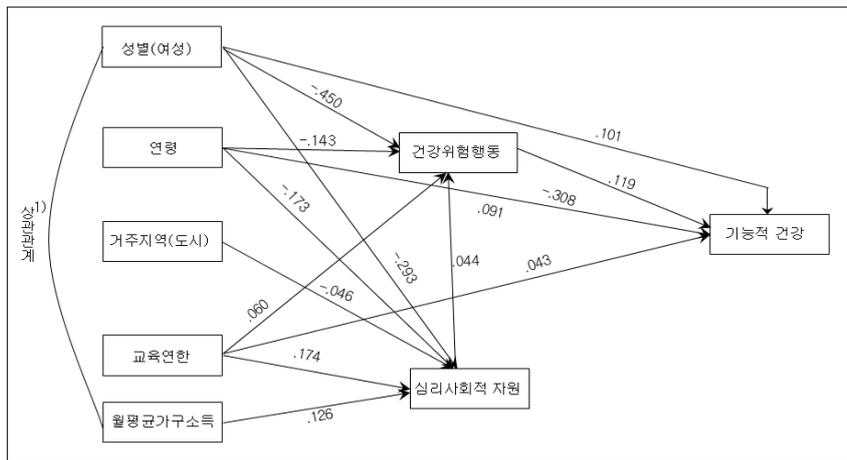
경로분석의 결과인 [그림 7-3]에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기능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접효과: $.101$). 이는 관련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건강위험행동을 중간기제로 하는 성별의 간접효과에서는 여성노인이 기능적 건강상태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간접효과: $-.450 \times .119 = -.054$), 직접효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간접효과를 분해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성별의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위험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450$). 이는 음주나 흡연 등이 건강위험행동으로 고려되었음을 전제로 할 때 수용이 되는 결과이다. 그

런데 건강위험행동과 기능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보게 되면, 건강위험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적 건강상태가 오히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119). 이는 건강위험행동이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일반화된 가설에 역행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가설의 진위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우리나라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분석모델의 설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본다.

[그림 7-3] 기능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주: 1) 외생변수 간 상관관계 표시 생략
2) 경로계수: 표준화 회귀계수(P<.05)

우선 [그림 7-3]에 제시된 분석모델은 건강위험행동 가설에 기초하여 기능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건강위험행동을 이에 대한 원인변수로 설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는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오히려 역방향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음주나 흡연이 남성문화로 수용되고, 비만이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고,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능적인 불편이 없는 건강한 노인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게 되는 역선택의 경향을 추론해 보게 된다. 따라서 [그림 7-3]의 분석결과에 대해 수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¹⁶⁾

교육수준의 효과에 있어서는,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 한 후에도 교육연한이 길수록 기능적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나는 정적 효과를 보인다(직접효과: .043). 이는 교육수준이 그 자체로 노인들이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서,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과정의 경험이 다르며 이에 따라 노년기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격차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이 미치는 간접효과는 미소하나마 건강위험행동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데(간접효과: $.060 \times .119 = .0001$), 교육연한의 간접효과 역시 위의 성별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육연한이 길수록 건강위험행동을 많이 하고, 건강위험행동이 많을수록 기능적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나는 분석결과는 가설에 역행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괴리가 가설의 오류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음주나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문화와 함께 노인들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성별, 거주지역, 교육연한 및 월평균 가구소득의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차별화 되지만,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차이가 노년기의 기능적 건강상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연령은 직접적으로 또한 건강위험행동을 통한 간접적 기제에 의해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직접효과: -.308; 간접효과: $-.143 \times .119 = -.017$).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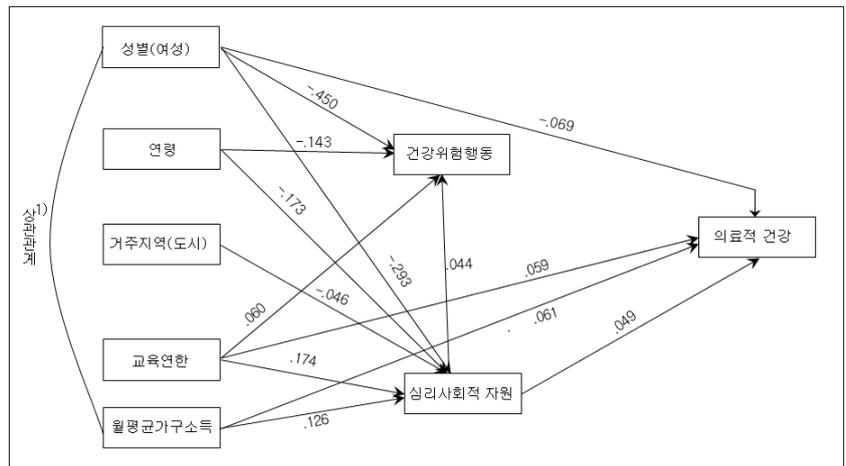
16) 이론적 가설과 경로분석모델에 기초한 건강위험행동과 건강상태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석모델을 변경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인과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유의하고자 한다.

는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의 양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다. 의료적 건강불평등의 구조

의료적 건강상태는 주요 만성질환의 보유수를 역코딩하여 숫자가 클수록 만성질환 보유수가 적은, 즉 의료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의료적 건강상태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7-4]와 같다.

[그림 7-4] 의료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주: 1) 외생변수 간 상관관계 표시 생략
 2) 경로계수: 표준화 회귀계수(P<.05)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만성질환의 수가 더 많은, 즉 의료적 건강상태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와 함께(직접효과: -.069),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사회적 자원 면에서 불리하여 의료적 건강상태에서 불리한 간접효과가 확인된다(간접효과: $-.293 \times .049 = -.014$). 성별의

직접효과는 생물학적 특성의 반영일 수 있으며, 간접효과는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심리사회적 자원 확보에 불리한 성불평등, 즉 젠더의 효과로 해
석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거주지역은 관련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노인들의
만성질환 수를 지표로 한 의료적 건강상태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 등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만성질
환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지역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분석모델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지역 구분
만 하였을 뿐, 건강과 관련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질, 생활 환
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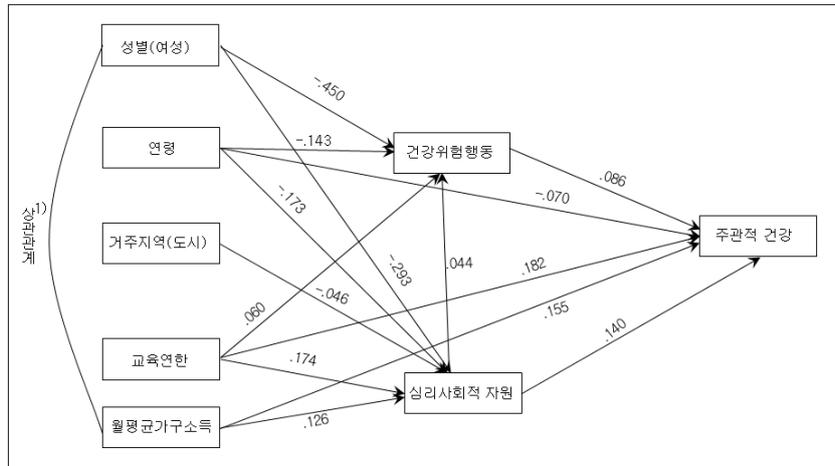
교육수준의 효과에 있어서는, 교육연한이 길수록 의료적 건강상태가 좋
게 나타나는 직접효과와 함께(.059),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자
원이 풍부해지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의 위험이 낮아져 의료적 건강상태
에서 유리한 간접효과를 보인다(간접효과: $.174 \times .049 = .009$).

월평균 가구소득의 효과도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의
료적 건강 차원에서 직접적(.061) 또는 심리사회적 자원 확보를 통한 간접
적 효과($.126 \times .049 = .006$)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또는 생리적 기
능상의 장애로 만성질환의 유병이 교육,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또한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차이에 의해 차
별화된다는 [그림 7-4]의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의료의 대상으로만 인식
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라. 주관적 건강불평등의 구조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림 7-5]와 같다.¹⁷⁾ 다른 관련 변수들 통제할 때 성별은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리사회적 자원이 부족함으로써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간접효과: $-.293 \times .140 = -.041$). 이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하기 보다는 사회심리적 자원, 즉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젠더의 효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7-5]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주: 1) 외생변수 간 상관관계 표시 생략
 2) 경로계수: 표준화 회귀계수($P < .05$)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거주지역의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도시 노인들이 농어촌 노인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자원 면에서 불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간접효과를 볼 수 있

17)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 평가 및 상대적 만족도 2개 항목에 대한 요인점수로 산출하였음.

다(간접효과: $-.046 \times .140 = -.006$). 교육연한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직접효과(.182) 및 간접효과($.174 \times .140 = .024$)를 보인다. 즉, 교육연한이 길수록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이며, 심리사회적 자원의 확보에도 유리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도 교육의 효과와 유사한 패턴의 직접효과(.155)와 함께 심리사회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간접효과($.126 \times .140 = .018$)를 나타낸다.

심리사회적 자원과는 달리 건강위험행동은 [그림 7-5]의 분석결과에서도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설의 오류보다는 건강위험행동의 개념이 우리나라 노인들 사이에서 ‘건강위험’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 문화적 특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통합모델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을 정신적, 기능적, 의료적 및 주관적 건강의 4개 차원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건강의 각 차원에 대하여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의 구조를 심리사회적 기제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4개의 건강차원을 통합하여 건강상태의 단일변수로 구성하고, 사회적 불평등 요인으로부터 야기되는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¹⁸⁾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그림 7-6]에서 노인들의 통합적인 건강상태가 앞서 살펴본 정신적, 기능적, 의료적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개별 분석에서와 유사한 패턴으로 성별, 거주지역, 교육연한 및 월평균 가구소득의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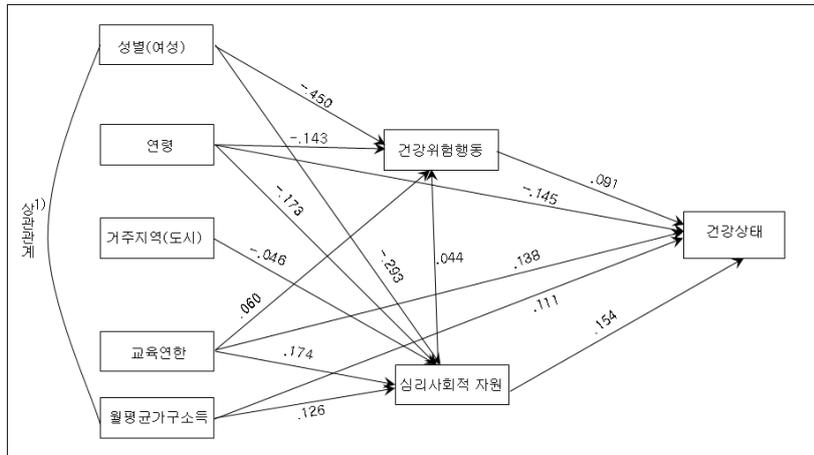
이제까지 건강의 4개 차원에 대한 분석에서 이 연구의 대상인 노인집단

18) 통합 변수인 건강상태는 4개의 건강차원의 척도(정신, 기능, 의료, 주관적 건강)에 대한 요인점수를 산출한 것임.

에서는 건강위험행동의 효과가 이론적 가설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합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그림 7-6]의 분석에서는 중간기제로서 심리사회적 자원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 건강상태에 대한 성별의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중간기제로 고려되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차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293 \times .154 = -.451$). 이는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여성의 불리한 심리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젠더의 효과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7-6] 건강상태(통합)에 대한 경로분석모델(N=3145)



주: 1) 외생변수 간 상관관계 표시 생략
2) 경로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P < .05$)

거주지역의 효과 또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농어촌 노인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자원 면에서 불리하고 이로 인해 통합적인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간접효과: $-.046 \times .154 = -.007$). 일반적으로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의료시설을 비롯한 각종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

에 주민의 건강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도시 노인들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접근성이나 질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주로 사회적 관계망 중심의 심리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둔 이 연구의 결과로는 적어도 도시의 노인들이 농촌의 노인들보다 가족관계의 질이나 단체 활동 등 심리사회적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교육수준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연한이 길수록 심리사회적 자원이 많게 되고 이로 인해 통합적인 건강상태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간접효과: $.174 \times .154 = .027$). 또한 교육수준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정도에 따른 간접효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통합적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직접효과: $.138$). 이로써 비교적 생애 초기에 결정된 교육수준이 생애에 걸쳐 그 자체로 또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조건을 차별화하고 이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상태의 격차가 발생하는 불평등의 양상이 통합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확인된다.

현재 노인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 본 소득의 효과도 교육연한과 유사하게 노년기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심리사회적 자원이 많고 이에 따라 통합적 건강상태에서 유리하며(간접효과: $.126 \times .154 = .019$), 그 밖에도 소득은 그 자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통합적 건강상태에 유리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접효과: $.111$).

한편, 노년기 건강상태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사회적 자원이 축소됨으로써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173 \times .154 = .027$)와 함께, 연령의 증가 자체로 건강수준이 낮아지는 직접효과($-.145$)도 유의하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건강수준이 노화에 의

해 저하되는 생물학적 쇠락의 양상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그림 7-6]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건강상태는 당연히 생물학적 노화의 양상인 동시에, 성별, 교육, 소득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의 양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4절 결론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는 더 이상 획일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노인인구의 다양성 특히 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의 핵심인 건강이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구조화되는 건강불평등 양상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또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함에 있어, 우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정신적, 기능적, 의료적 및 주관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울 증세를 지표로 노년기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 자신이 주관적으로 우울증을 인지하는 경우는 전체의 15%인데 비해, 표준화된 척도에 의한 측정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6%가 우울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해 정신과 질환의 진단을 받은 노인의 비율은 2.9%에 불과하여, 치매 등 소수의 중증 정신과 질환이 의료에 노출될 뿐 노인들의 우울증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였다. 이는 최근 노인의 자살률이 급증하면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일반인의 이해나 사회적 개입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실태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년기의 기능적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기능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전체의 약 10%이고, 금전관리 등 도구적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기능 장애는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의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노인의 기능 장애와 가족 및 사회적 지원의 실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의료적 차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만성질환은 노년기의 기능 장애에 비해서 가족 지원 및 의료 수요의 차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만성질환에 대한 자료 분석의 결과 전체 노인인구의 37%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주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의 예방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일차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속성 상 특정 원인이 작용하기 보다는 사회 환경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만성질환의 속성을 고려할 때, 노년기 만성질환의 문제를 의료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관점을 벗어나 만성질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속성과 관련 요인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이라고 본다.

넷째, 노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48%의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앞서 살펴본 노인집단의 우울 증세나 만성질환 유병률 등과 상통하는 결과로서, ‘건강한 노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재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로부터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단순히 노인 개인의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 특성의 차이 뿐 만 아니라, 성별, 교육, 소득 수준 등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화된 삶의 조건이나 경험의 결과적 양상으로 보는 건강불평등의 개념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건강상태

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의해 노년기 건강상태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삶의 조건이나 경험의 기제로서 심리사회적 자원과 건강위험행동이 고려되었다.

중간 기제에 대한 분석의 결과, 이 연구의 대상인 65세 노인집단에서 건강위험행동이 정신적 건강과 의료적 건강상태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며, 기능적 건강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위험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남으로써 이론적 가설과는 역행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하여 연구모델의 설정이 부적합하였다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오히려 이론과 괴리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나라 노년기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설과 역행하는 분석결과는 우선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음주, 흡연 등 건강위험행동이 ‘건강위험’ 요인이라기보다는 성인문화로서 관용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규칙적 운동이나 체중관리 등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 때에 비로소 금연을 하고 운동을 하는 등 건강행동을 피동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건강위험 또는 건강증진 행동이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할 때, 이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술·담배 권하는 사회’로 통칭되는 건강위험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 정책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 및 친족관계, 사회단체 활동, 간병지원 등 심리사회적 자원의 경우 기능적 건강상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건강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내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정신건강 외에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심리사회적 자원이 중요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노년기의 질병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적 및 생물학적 병리 외에 노인이 필요로 하는 심리적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구축이 병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를 맥락으로 하는 종합적인 보건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에 따른 건강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기제로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따라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차이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및 주관적 건강수준의 격차가 나타나는 건강불평등의 양상이 검증되었다. 특히 성별의 경우는 기능적 장애를 제외한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관련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성별의 직접효과가 소멸되고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한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노년기 건강상태의 성차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즉 젠더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한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는 정신적 건강 등에서 간접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 격차의 요인으로 보기는 제한점이 있다. 지리적 구분만 있을 뿐 거주지역의 의료시설을 비롯한 사회환경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고려되지 않은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거주지역을 건강불평등의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계층 요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건강의 제반 차원에서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의 가설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의 효과는 기능적 건강상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직접 및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교육연한으로 측정된 교육수준의 효과는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

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많고, 이에 따라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특히 교육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는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건강격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교육수준이라는 하우스 등(House et al., 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 밖에 교육과 소득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양이나 기타 관련 변수를 모두 통제하고도 노년기 건강상태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모델에 고려된 심리사회적 자원이나 건강위험행동 외에 교육수준의 효과로서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력의 차이 등이 고려될 수 있겠으며, 소득의 효과로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 구매력의 차이 등 많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 체계적인 후속연구들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된 노년기 건강의 불평등 양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여전히 연령의 증가, 즉 노화에 의한 생물학적 요인이 노년기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이 연구의 목적이 노년기의 건강상태가 노화라는 생물학적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연구는 노년기 건강문제가 신체 또는 생리적 기능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의료의 차원에서만 접근되어 옴으로써 그간 일반적인 인식이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건강의 근본적인 맥락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끝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염두에 두고 불평등의 차원에서 노년기 건강문제를 접근한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75세 이상의 고령, 여성, 무학의 교육수준 및 50만 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으로 특징되는 노인들을 건강수준의 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들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및 건강증진 행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심리사회적 자원 및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노년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차적 방향으로 제안한다.

제8장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이 다차원적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관점 하에 노년기 불평등의 구조를 소득, 소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가 주는 함의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년기의 불평등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불평등과 기구구조의 차이가 누적되는 효과로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보험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보험 소득은 과거 생애주기 동안 근로경력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장기전망에서 총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인 및 중고령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산업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평균보다 길게 노동시장에 생존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노년기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불평등 누적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확대재생산 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소비불평등의 경우 외식,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직업 및 교육수준에 따라 형성된 문화적 취향의 차이를 반영하는 비목의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양식 유형에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존중심형, 주거비지출형, 의료지출형 생활양식보다 사교형과 같이 사회적인 생활양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불평등의 효과가 노년기의 생활양식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연계망 불평등의 분석에서 이러한 생애주기 효과는 가장 잘 드러나는데, 교육수준, 최장기 종사직업과

같은 생애사적 불평등의 누적적 요인이 사회적 연계망의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불평등에 관한 분석에서도 생애주기에서 형성된 교육과 소득 변인이 건강상태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수준, 소득계층, 직업계층과 같은 변수가 다차원적 영역의 불평등에 비교적 동일하게 작용하는 변수라면, 영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변인으로서 거주지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분석결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는 생존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도 다소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여 도시지역 거주 노인가구일수록 주거지출형 소비생활양식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연계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도시지역 거주 노인이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에 비해 고립형 사회적 연계망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연계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 및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나 사회적 연계망에 있어 차별적인 양상을 드러냈다. 건강의 측면에서도,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농어촌 노인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자원 면에서 불리하고 이로 인해 통합적인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같은 노인가구라고 하더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다차원적 영역에 있어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따라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노년기의 불평등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은 생애주기에 걸친 차이의 효과가 확대재생산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발생하는 다측면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다음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 차이가 노년기에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완화시키려면 ‘노년기’라는 ‘제 3기 인생’의 출발선에서 그 차이를 해소

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기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노년기 소득보전이라는 물질적 기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회제공, 건강서비스,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의 비물질적 기제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노인 가구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비롯한 공적 이전 제도와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가 각각 분리 운영될 것이 아니라 노년기 불평등 완화라는 초점 하에 보다 통합적인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기간 동안의 불평등은 노년기에 이르면 다측면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기간 동안의 불평등에 대한 개입 정책은 노년기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중요성을 띤다. 이는 두 가지의 상의한 함의를 제공하는데, 한 가지는 근로기간 동안의 불평등이 단지 근로기간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확대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불평등 문제는 다분히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효과가 미래에까지 계승되며, 또한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간 동안의 불평등 완화 정책이 확대된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복지 정책의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지금과 같이 ‘문제 영역’ 혹은 ‘대상’ 별로 구분된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고안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쳐 연결된 정책 및 서비스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생애주기가 취약해지는 현상을 예방하고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차등화 될 수 있는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 복지 정책 및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병구·윤명수,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경제발전 연구』, 제9권 1호, pp. 155-175, 2003.
- 강영호, 「건강불평등 연구의 역사적 발전」 『예방의학회지』 40(6), pp.422~430, 2007.
- 강은정·김나연·김동진·김혜련·변용찬·서미경·신호성·허순임·김광기·신해림·배상철·양윤준·이명선·정세환·조성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부문』, 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강이주, 「소비패턴의 사회적 형성」, 『소비자학연구』, 제 9권 2호, pp.1-19, 1998.
- 강혜원·조영태,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통합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4), pp.164~201, 2007.
- 구성열, 「가구규모와 연령구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 연구』, 봄호, pp.84-103, 1982.
- 구인회·임세희,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불평등 악화의 요인 분해 - 개인근로소득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가을호, pp.5-27, 2007.
- 김규성, 『표본대체 방법과 대체자료의 합리적 이용』, 2000.
- 김기영·전명식, 『SAS 군집분석』, 자유아카데미, 1990.
- 김기욱, 「도시주부의 소비의사결정 합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

- 리학회지』, 제5권 2호, pp.109-125, 1988.
- 김두섭·박효준, 「사망력 수준의 시·군별 편차 및 그 변화추이, 1990~2000」, 『한국인구학』 26(1), pp.1~30, 2003.
- 김승곤,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과 사회과학』 11, pp.115~136, 2004.
- 김영범·박준식, 「노인의 사회연계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비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6권 2호, Pp. 261~273, 2006.
- 김영숙,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 시계열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 pp.19-36, 1992.
- 김영숙,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권 2호, pp.59-73, 1983.
- 김영숙,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 일상생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 한울, 2001.
- 김용성,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김재일, 「노인의 비공식 부양체계 개발 필요성에 따른 친구에 의한 부양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권 2호, pp. 25~36, 2001.
- 김정희, 「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고찰」 『국민건강연구소 연구 논총』 42(2), pp. 82~97, 1994.
- 김진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pp.127-154, 2007.

- 김진영,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한 교육과 건강의 궤적 간 관계분석」, 『한국사회학』 42(2), pp.164-190, 2008.
- 김진욱,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한국사회경제학회』, 제 19권, pp. 267-293, 2002.
- 김혜련·강영호·윤강재·김창석,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남상섭, 「1990년대 후반기 소득분배 변화요인 분석」, 『경제연구』, 제23권 3호, pp. 27-53, 2005.
- 노병일·모선희,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권 1호, Pp. 53~69, 2007.
- 류재술, 「80년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구조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특히 80년대말의 과소비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 3권 2호, pp.59-74, 1992.
- 문숙재·정순희,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6권 2호, pp.53-65, 1995.
- 박경숙,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pp.141~168, 2001.
- _____,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정도」, 『한국사회학』, 34권 3호, 621-647, 2000.
- 박상학, 「미·일·독과 비교해 본 한국가구의 소비지출행태 : 가구주 연령별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리뷰』, 8, pp.6-18, 1992.
- 박선미·김영숙, 「한국 경제개발 계획연도별 가계소비지출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0권 2호, pp.1-18, 1992.

- 박성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론집』, 제23권 2호, pp.61-80, 2000.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배순영, 「서울시 임차가계의 임대료부담과 가계경제문제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석재은·오영희·박수천·김수봉·김미혜·윤동성·김은혜·이윤경·송민경, 『노인 생활지원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성명재·김종면,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성영애·양세정,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5호, pp.103-117, 1997.
- 성용현, 『응용다변량분석 : 이론·방법론 SAS 활용』, 탐진, 2002.
- 소연경,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 IMF 이전과 이후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12호, 2000.
- 송윤미,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망의 연관성: 한국 남성 759,665명에서의 코호트 연구」, 『한국역학회지』 20(2): 219~225.
- 신광영, 「에릭올린 라이트 : 계급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대안체제론」,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 한울아카데미, 2001.
- 안국신,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1권, pp. 53-76, 1995.

- 안국신·박완규·유항근,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보』, 6권, pp. 57-86, 1995.
- 양 춘, 『사회불평등 : 고전 및 현대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양세정,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 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제 8호, pp54-67, 1991.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우천식·김태중,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우해봉·윤인진, 「한국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지위의 차이」, 『보건과 사회과학』 9, pp.67~106, 2001.
- 유경준,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Working Paper, 1998.
- 유경준·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유석춘·장미혜,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유석춘 외 편역, 『사회자본』, 2003.
- 윤정혜, 「도시 및 농촌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2호, pp.85-100, 1984.
- 이규식, 「사회변화와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연세사회복지연구』, 9, pp.250-280, 2003.
- 이기홍,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권 3호, Pp. 1~21, 2005.
-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빈곤론』, 나남, 1991.

- 이미숙, 「노인과 건강」,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p.196-229, 1999.
- _____,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pp.183~209, 2005.
- 이성민,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제 9권, pp.53-60, 1992.
- 이승미, 「한국 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pp.135~158, 2002.
-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호, 1998.
- 이정우,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권 2호, pp. 79-109, 2001.
- _____,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7.
- 이현주·김미곤, 노대명, 강석훈, 손병돈, 유진영, 임완섭, 「우리나라 빈곤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호성,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권 3호, pp. 123~138, 2005.
- 임병인·전승훈,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 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장미혜, 「한국사회에서 사회계층별 소비양식의 차이」, 『경제와 사회』, 제 53호, pp.201-231, 2002.
- 전신현, 「지역특성이 성인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3, pp. 113~134, 2002.

- 정건화,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상태 변화 : 도시가계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춘 외,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2000.
- 정건화·남기곤,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산업노동 연구』, 제 5권 2호, pp.91-121, 1999.
- 정경희,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권 2호 52 ~ 68, 1995.
- 정경희,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통권 제7호, Pp. 11 ~ 26, 2004.
- 정민수·조병희, 「지역사회역량이 주민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2, pp. 153~182, 2007.
- 정영숙,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 7권 2호, pp.207-222, 1996.
- 정의철·김진욱,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3권 3호, pp. 57-77, 2007.
- 정진호·최강식, 「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경제학연구』, 제49권 3호, pp. 39-64, 2001.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정형선·송양민·이규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1), pp.95-116, 2007.
- 정희수·권혁일,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 12권 1호, pp.5-25, 2004.
-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서울: 집문당. 2006.

- 채구묵,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1호, pp. 199-221, 2007.
- 최은숙, 「가계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최정아·서병숙,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권 1호, Pp. 65~78, 1992.
- 최현수·류연규,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3권 3호, pp.143-160, 2003.
- 최현자,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 양식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8권 1호, pp.167-183, 200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_____, 『2005년 사망원인통계연보』, 2006.
- _____,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기본조사 데이터 생성변수 안내서 2』, 2007b.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 한국노동연구원,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기본조사 데이터 생성변수 안내서 1』, 2007a.
- 함재봉, 「소득불평등 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제7권, pp. 173-199, 2005.
- 현택수, 「피에르 부르디외 : 아비투스 와 문화자본의 사회학」, 김호기 엮음,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 한울, 2001.
- 황덕순·정운영, 「주거소유형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구조 비교분석」, 『소비자학연구』, 제9권 4호, pp.1-17, 1998.

황미영,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9권 2호 27 ~ 46, 1999.

Alwin, D. F. and L. A. Wray.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Social Status and Health." *The Journal of Gerontology* 60B, pp.7-14, 2005.

Antonucci, T. C.,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R. H.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 94~128, NY, 1985.

Bosworth, Burtless, Sahm, *The Trend in Lifetime Earnings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the Distribution of Retirement Incom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CRP WP 2001-03, 2001.

Breeze · Flethcer · Leon · Marmot · Clarke · Shiply. "Do Socioeconomic Disadvantages Persist Into Old Age? Self-Reported Morbidity in a 29-Year Follow-Up of the Whitehal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 pp.277~283, 2001.

Burkhauser, R.V. and G.J. Duncan, "Economic Risks of Gender Roles: Income Loss and Life Events over the Life Course." *Social Science Quarterly*, 70; 3-23, 1998.

Burkhauser, R.V. and G.J. Duncan, "Life Events, Public Policy, and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Children and Elderly." In J.L. Palmer, T.Smeeding, and B.B. Torrey (Eds.), *The Vulnerable*.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8.

Burkhauser, R.V., J.S. Butler, and K.C. Holden, "How the Death of a Spouse Affects Economic Well-Being after Retirement: A Hazard Model

- Approach," *Social Science Quarterly*, 72;504-519, 1991.
- Burtless, Gary,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 pp. 853-865, 1999.
- Campbell, K. Marsden, P., and Herber, J.,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s*, Vol.8, 1986.
- Cancian, Maria & Deborah Reed, "The Impact of Wive's Earnings on Income Inequality: Issues and Estimates", *Demography*, 36(2), 173-184, 1999.
- Cancian, Maria, Sheldon Danzinger & Peter Gottschalk, "Working Wives and Income Inequality Among Married Couples"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1993.
- Cantor, M. H. and Little, V., "Aging and Social Care", in Binstock, R.H. and Shanna, 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nd Edition), NY., pp.745~780, 1985.
- Cantor, M. H.,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Vol.1, pp. 435~463, 1979.
- Cockerham, W. C. "Medical Sociology(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8.
- Cohen et al., "Social Networks and Adaptation", *the Gerontologist*, Vol.25, No.3, 1985.
- Conrad, P. "Th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Critical Perspectives.(5th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 Crystal and Waehrer, Later-Life Economic Inequality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y:Social Sciences*, 51B(6), S307-S318, 1996.
- Daly, Mary C. "Inequality and Poverty in United States: The effects of Rising Dispersion of Men's Earnings and Changing Family Behavior", *Economica*, Vol. 73, pp. 75-98, 2004.
- Dannefer, D.,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Vol. .58, No. 6, pp. 327~337, 2003.
- Danzinger, Sheldon, "Do Working Wives Increase Family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5, pp. 444-451, 1980.
- Douthitt, R.A.&Fedyk, J.M., "The Influence of Children on Family Life Cycle Spending Behavior :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22, pp.220-247, 1988.
- Fiori, K. and als. "Social Network Type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Vol. 62B, No.6, pp.322~330, 2007.
- Fischer, C. et al. (Eds.), *Network and Places*, NY: Fress Press, 1977.
- Freeman, Richard B, "How much has de-unionization contributed to the rise in male earnings inequality?"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a Foundation, 1993.
- Gottschalk, Peter, "Inequality, Income Growth, and Mobility: The Basic Fac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1, No. 2, pp. 21-40, 1997.
- Gro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P.

- Marsden and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1982.
- Grundy, E. and A. Sloggett. "Health Inequalities in the Older Population: he Role of Personal Capital,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cial Science & Medicine* 56, pp.936~947, 2003.
- Hafstrom, J.L.&Dunsing, M.M, "Satisfaction and Education :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ption Pattern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1 No.1, pp.4-12, 1972.
- Hall, A. and Wellman, B.,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S. Cohen and Sl. L. Symen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Y, Academic Press, 1985.
- Hayward, M. D., Pienta, A. M., and D. K. McLaughlin. "Inequality in Men's Mortality: The Socioeconomic Status Gradient and Geographic Context."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8(December), pp.313~330, 1997.
- Henretta, J.C. and R.T. Campbell, "Status Attainment and Status Maintenance: A Study of Stratification in Old 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981-992, 1976.
- Herd, P. Goesling, B. and J. S. House. "Socioeconomic Position and Health: The Differential Effects of Education Versus Income on the Onset Versus Progression of Health Problem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48(September): 223-238. 2007.
- Holden, K. and Hatcher, C., "Economic Status of the Aged"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2006.

- Horrigan, Michael W. & Ronald B. Mincy,. "The minimum wage and earnings and income inequality"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1993.
- House, J. S.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 Century Progress and 21th Century Prospect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43(June), pp.125~142, 2001.
- House, J. S., J. M. Lepkowski, A. M. Kinney, R. P. Mero, R. C. Kessler and A. R. Herzog.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5(September), pp. 213-234, 1994.
- House, J. S., P. M. Laritz, and P. Herd.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from 1986 to 2001/2002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60B(Special Issue II), pp.15~26 2005.
- Hurbert and Acock, "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on the Form and Composition of Social Networks," *Social Sciences Quarterly*, Vol 71. No.1, 1990.
- Hurd, M.D. and J.B. Shoven, "Inflation Vulnerability, Income, and Wealth of the Elderly, 1969-1979." In M. David and T. Smeeding (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Measure of Well-Be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Jones, L. J. *The Social Context of Health and Health Work*. London: MACMILLAN Press. 1994.
- Juhn, Chinhui & Kevin M. Murphy, "Wage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1, pp. 72-97, 1997.
- Kadushin, C., "Social Density and Mental Health", in Marden and Lin, 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Pp. 147~158, CA: Sage, 1982.
- Karoly, Lynn A. & Gary Burtless, "Demographic Change, Rising Earning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ll-being, 1959-1989", *Demography*, Vol. 32, No. 3, pp. 379-405, 1995.
- Kendig, H., *Aging and Families: A Support, Networks, Perspectives*, Australia, Allen and Unwin, 1986.
- Kessler, R. C., House, J. S., Anspach, R. R., and D. R. Williams. "Social Psychology and Health." pp. 548~570 in K. S. Cook, G. A. Fine, and J. S. House(ed.).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95.
- Kohli, P., "Age Integration Through Interest Mediation: Political Parties and Unions: *The Gerontologist*, Vol.40, No.3, pp. 279~282, 2000.
- Kyrk, H.,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 Harper&Brothers, 1933.
- Lerman, Robert I. & Shlomo Yitzhaki, "Effect of Marginal Changes in Income Sources on U.S. Income Equality",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22, No. 4, 1994

- Lerman, Robert I. & Shlomo Yitzhaki,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pp.151-156, 1985.
- Lin, 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in P. Marsden and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pp. 131~146, 1982.
- Link, B. and J. Phelan. "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Disease."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45(Extra Issue), pp. 80~94, 1995.
- Litwak, E., *Helping the Elderly*, Guilford Press, 1985.
- Magrabi, F.M, Chung, Y.S., Cha, S.S., Yang, S.J,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Praeger:New York, 1991.
- McCracken, G, 『문화와 소비』,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88.
- Modigliani, F.&Brumberg, R.,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urihara, K.K.(ed.) *Post 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1954.
- Mookherjee, Dilip & Anthony Shorrocks,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368), pp. 888-902, 1982.
- Moore, C., "Structural Determinants of Man's and Women's Personal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55, pp.726~735, 1990.

- Moren-Cross and Lin, "Social Networks and Health", in Binstock, R.H. and George, L.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6th Edition), NY., pp.111~126, 2006.
- Mortimer J. T. and Shanahan, M.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Springer, 2004.
- Multau, M. S. and C. Schooler. 'Causal Connec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Reciprocal Effects and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43(March), pp.22~41, 2002.
- Murphy, Kevin M. & Finis Welch, "Industrial Change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Skill"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1993.
- O'Rand, A. "Stratification and Life Course: Life Course Capital, Life Course Risks and Social Inequality"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2006.
- OECD, *Human and Social Capital &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Reconciling New Economics and Societie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2000.
- Ross, C. E. and C. E. Bird. "Sex Stratification and Health Lifestyle: Consequences for Men's and Women's Perceived Health."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5(June), pp.161~178, 1994.
- Rossi, A. and Rossi, P., *Of Human Bondin: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Aldine de Gruyter, NY, 1990.

- Sarah Nettleton,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조효제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Schulz, J.,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The Economics of Aging*, Anburn House, 1992.
- Shanas, E., "Social Myth as Hypothesis: The Case of the Family Relation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19, No.1, pp. 1-9, 1979.
- Spitze, L. and Logan, J. "Gender Differences in Family Support: is there a Payoff?", *The Gerontologist*, Vol.29, No.1, pp. 108-113, 1989.
- Veblen, T, 『유한계급론』, 김성균 역, 우물이있는집, 2005.
- Verbrugge, L. M. "The Twain Meet: Empirical Explanations of Sex Differences in Health and Mortality."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0(September), pp.282-304, 1989.
- Waller, Al, "From welfare State to Caring Society?: The Promise of Informal Support Networks," in Yonder J. A. (Ed.), *Support Networks in a Caring Community: Research and Policy, Fact and Fiction*, Pordrecht; M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 Ward, R. A., "Informal Network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a", *The Gerontologist*, Vol.25, No.1, pp. 55~61. 1985.
- Wenger, G., "The Special Role of Friends and Neighbors", *Journal of Aging Studies*, Vol.4, No.2, pp. 149~169, 1990.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미정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미정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미정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미정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미정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미정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미정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대원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미정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미정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미정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미정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미정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지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미정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미정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미정
연구 08-24-1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08-24-5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미정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미정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미정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11)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육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i>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삼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